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06 Annual Report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 031-380-0114(대표) / 팩스 031-380-0474 / <http://www.krihs.re.kr>

2006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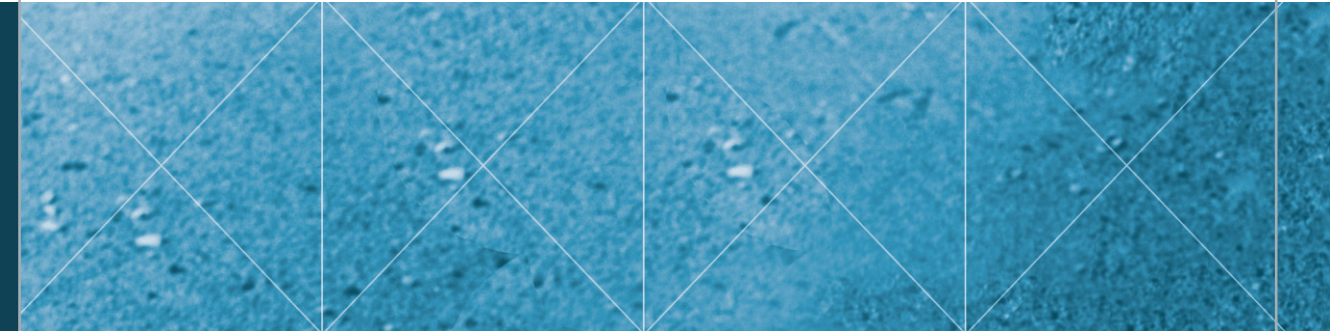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06 Annual Report

국토연구원

2006_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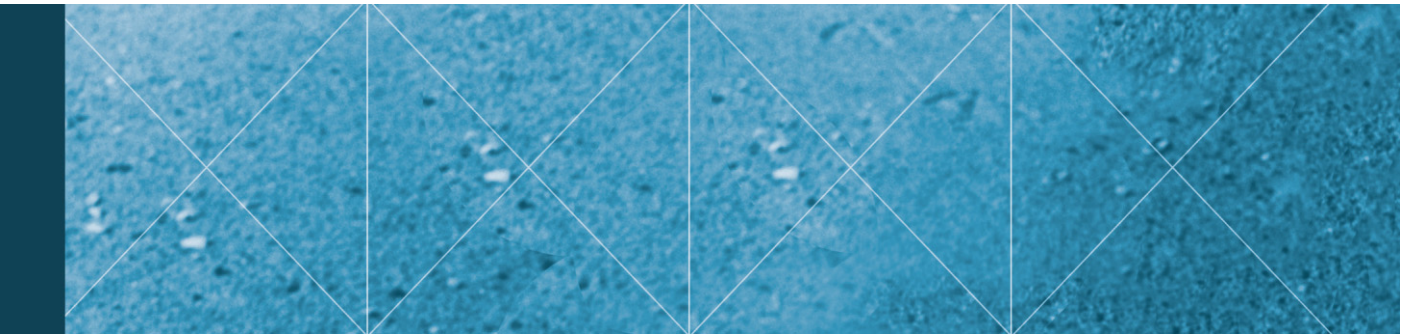
2006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06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발전시켜
각급 공간계획의 수립에 기여함을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국토정책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발간에 즈음하여]



2007년 6월
원장 최 병 선

최 병 선

2006년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하나의 국정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가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선도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는 우리 국토연구원의 설립취지이자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이러한 국정목표를 실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국토연구원에서는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지방분권 실현, 동북아 시대 실현,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주제로 많은 국토연구과제를 의욕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국토공간구조 재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으며,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자치권 강화,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체계 강화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북아 구상 실현, 남북평화체계 구축, 동북아 공동체 형성 등을 주제로 한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 갈등관리를 통한 국민화합도모, 삶의 질 제고 및 살고 싶은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등을 주제로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토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총 200여 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들의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 요약·발표함으로써 연구진 스스로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으면서, 아울러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들이 각계각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

한 것입니다.

우리 국토연구원은 앞으로도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정부가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선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연구원에 대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2006년에 수행한 연구과제들의 공과 실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토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Chapter I 일반현황 8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10
2. 인원 및 조직 11
3. 2006년도 연구사업 수행실적 12
4. 2007년도 연구방향 15

Chapter II 분야별 주요 연구 18

1. 국토·지역연구 21
2. 국토환경·문화연구 35
3. 도시연구 41
4. 토지·주택연구 47
5. 교통연구 57
6. SOC·건설경제연구 63
7. 국토정보연구 71
8. 동북아발전연구 81
9. 도시혁신지원연구 87

Chapter III 국제협력 및 연구지원활동 91

1. 국제공동연구사업 92
2. 국제연수교육 110
3. 국제학술교류 117
4. 연구관련 주요 행사 118
5. 연구혁신활동 125
6. 세계도시정보(UBIN) 구축 127
7. 21세기 국토포럼 128
8. 제5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129

9. 제11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130
10. 기획단행본 발간 131

Chapter IV 정기간행물 목차 132

1. 국토(291호~302호) 134
2. 국토연구(48권~51권) 144
3. 건설경제(47권~50권) 146
4. 국토정책Brief(98호~120호) 148

Chapter V 부서 소개 150

1. 원장·부원장 152
2. 국토·지역연구실 155
3. 국토환경·문화연구실 161
4. 도시연구실 165
5. 토지·주택연구실 169
6. 교통연구실 175
7. SOC·건설경제연구실 181
8. 국토정보연구센터 185
9. 동북아발전연구센터 191
10. 도시혁신지원센터 195
11. 연구지원부서 199

Appendix 색인 200

1. 과제명 색인 202
2. 연구자명 색인 204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10
2. 인원 및 조직	11
3. 2006년도 연구사업 수행실적	12
4. 2007년도 연구방향	15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 설립목적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다.

연구원 개원 이래 “아름다운 산하와 살기 좋은 국토 만들기”라는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 건설, 균형 있는 국토 건설, 국토의 미래 선도, 지식기반국토의 조성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GIS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단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인 현장중심적 연구를 추구함으로써 21세기의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토의 미래와 균형, 풍요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연구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토지·주택·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 분야 정책 연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국토연구 관련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인원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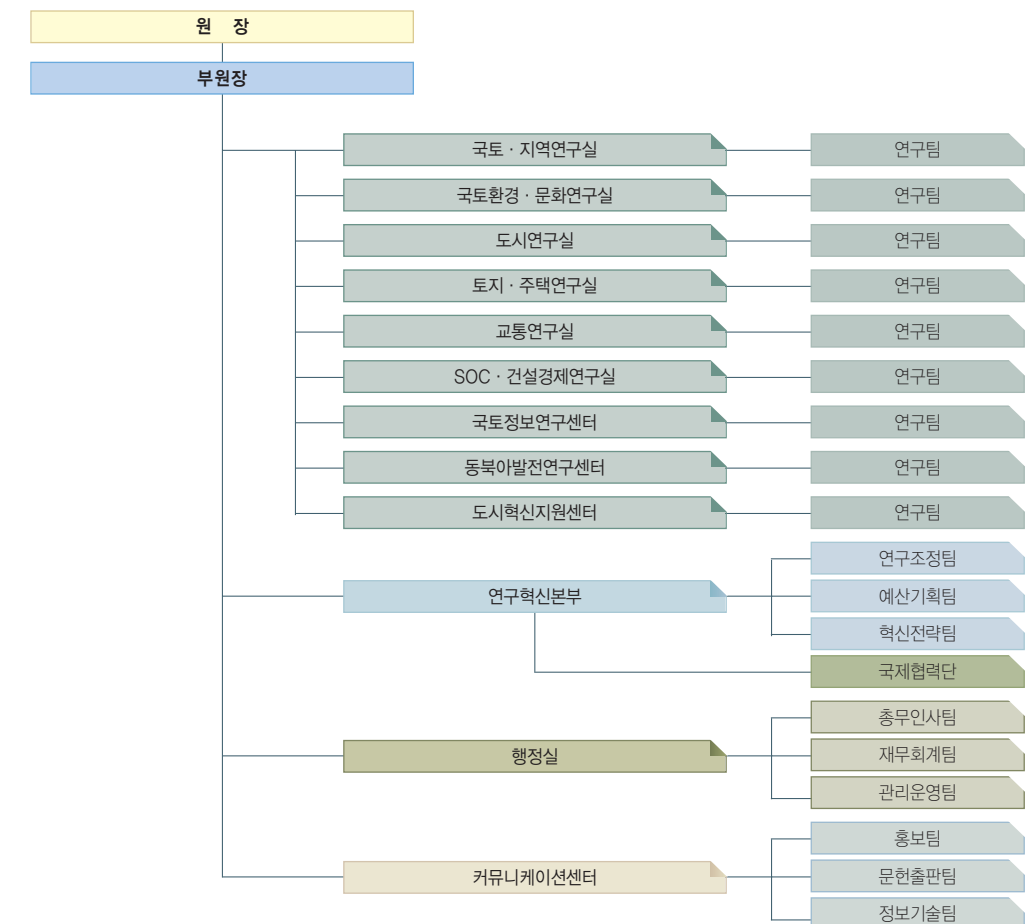
■ 인원

2006년 말 현재 현원 146인(정원 218인)으로 이 중 연구직이 128인, 관리·전문직이 18인이다. 연구직은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별로는 박사 72인, 석사 56인이다.

계	임원	연구직		관리·전문직	
		박사	석사	관리직	전문직
구성	원장	72인	56인	17인	1인
147인	1인	128인		18인	

■ 조직

국토연구원의 조직은 국토·지역연구실, 국토환경·문화연구실, 도시연구실, 토지·주택연구실, 교통연구실, SOC·건설경제연구실, 국토정보연구센터, 동북아발전연구센터, 도시혁신지원센터 등 9개 연구실·센터와 연구혁신본부, 행정실, 커뮤니케이션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직자 현황

원 장	최병선
부원장	박양호
연구부서장	
국토·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	최영국
도시연구실장	민범식
토지·주택연구실장	채미옥
교통연구실장	류재영
SOC·건설경제연구실장	유재운
국토정보연구센터장	사공호상
동북아발전연구센터장	김원배
도시혁신지원센터장	진영환
연구지원부서장	
연구혁신본부장	박재길
행정실장	양용태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윤여훈

3. 2006년도 연구사업 수행실적

■ 2006년도 수행 연구과제

2006년을 ‘살고 싶은 국토조성의 해’로 정하고, 연구사업의 목표를 약동하는 통합국토(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실현),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SOC 투자효율성 증대, 사회통합의 실현과 국민경제 안정토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1978년 개원 이래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기여하여 왔고, 2006년에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등 77건의 기본·수시연구과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등 135건의 수탁연구과제 등 총 212건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기본·수시연구과제 75건, 수탁과제 71건 등 모두 146건의 과제를 완료하였고, 66건은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로 이월하였다.

■ 범정부적 국정과제 수행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국토분야와 관련된 것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지방분권의 실현, 동북아 시대 실현,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러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관련 연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토대로 자립형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외의 계획적 관리, 국토공간구조 재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5개 주제를 중심으로 총 23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분권의 실현 관련 연구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및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총 5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동북아 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 관련 연구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남북 평화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를 통한 번영, 동북아 공동체 형성 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동북아 구상 실현, 남북 평화체계 구축, 동북아 공동체 형성 등과 관련하여 총 7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연구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차별시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갈등관리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라는 발전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토지·주택 등 서민주거 안정, 갈등관리를 통한 국민화합 도모, 삶의 질 제고 및 살고 싶은 국토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하여 총 36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 전문분야별 현안과제 수행

경제성장과 아울러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으로써 합리적 정책 실현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들이 표출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시급한 정책적 현안과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시의성 높은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과제들을 전문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지역분야

국가균형발전을 지역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도시의 혁신지원체계 육성전략을 마련하며,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기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이드라인, 이전계획서 작성요령 등도 검토하였다.

국토환경·문화분야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및 경관훼손 문제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실천수단으로서 자연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계획수립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였다. 또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국내·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추진 현황, 입법사례 등을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국민신탁 도입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도 모색하였다.

도시 및 도시혁신지원분야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전반적 제도운용을 위한 환경조건을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운용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각 지역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할 혁신도시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도 제시하였다.

토지·주택분야

기존의 총량 위주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가구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에 따른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지역과 계층의 실정에 적합한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제반여건의 하나인 토지에 대하여 정책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진사회가 지향하는 토지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제도의 전반적 틀과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분야

공급자 측면에서는 교통시설의 규모를 판단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향후 교통투자정책의 방향과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역별·도시별 교통서비스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 교통통계자료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도로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통계정보기반을 구축하고, 도로교통정책 분야별로 유용한 통계정보 생성방안도 제시하였다. ITS 사업의 범국가적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ITS 기술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였다.

SOC·건설경제분야

건설산업의 수요구조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수요구조 변화를 전망하여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민간과 정부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SOC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건설교통부의 대형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과 제도적

기반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기반시설투자과 지역 간 성장격차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배분의 형평성을 검증하고, 합리적인 배분방안도 제시하였다.

국토정보분야

국토정책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와 토지이용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동태모형과 공간모형이 통합된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의 적합성과 현실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도시의 기능공간과 도시민의 활동공간 변화를 전망하고, 21세기 첨단정보도시로서 u-City(시공자재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을 구상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GIS를 기반으로 첨단정보기술과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를 구축하여 각종 공간계획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동북아발전분야

그동안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연구된 북한 기반시설 및 국토개발 관련연구를 종합·평가하고,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20년 정도를 내다보는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계획의 수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과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서해연안지역을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하였다.

4. 2007년도 연구방향

■ 2007년도 연구환경 여건변화 전망

2007년도에는 첫째,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할 전망이다. 즉, 동북아 금융·물류·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 위한 역내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 개방과 경제규모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산될 전망이다. 둘째, 기술발달과 정책변화에 따른 새로운 연구환경 패러다임이 발생할 전망이다. 즉, 멀티(다기능)·컨버전스(융합)로 대표되는 다원화·종합화 사회가 도래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연구환경이 변화될 것이다. 셋째,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혁신 공간정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즉, 균형통합국토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선도사업(先導事業)이 구체화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넷째,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토이용 패러다임이 등장할 전망이다. 즉,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삶의 질 중시와 국토 및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한 정책수요가 증대되고, 주 5일 근무제 정착, 노령사회로의 진입, 저출산 경향, 양성 평등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국토관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될 전망이다.

■ 2007년도 연구사업 목표

전술한 여건변화로 인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개발연구 다변화에 따라 국책연구기관·대학·지방 및 민간연구원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7년도 연구방향을 첫째, 국토균형발전 지원연구 강화, 둘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 셋째,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 연구 추진이라는 세 가지로 정하였다.

■ 2007년도 연구사업 선정기준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를 우선 선정한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를 발굴·선정한다. 또한, 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를 발굴한다. 둘째, 기초적·중장기적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연구원의 경영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20% 이상 선정한다. 셋째,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우선 선정한다. 즉,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를 장려한다. 넷째,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협동연구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산·학·연·관·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한다.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한다. 다섯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즉, 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와 활용도와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2007년도 연구사업 개요

2007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3개 연구과제를 중점연구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국토기반시설개발 기본계획수립 연구(II)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련연구들을 종합·평가하고, 유관국의 관련연구기관, 대학 및 국제기구(UNDP, World Bank 등) 등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20년 정도를 내다보는 한반도 기반시설개발의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개발비용을 고려하여 가칭 ‘한반도 기반시설개발기금’ 또는 ‘한반도 기반시설개발기금’의 설립을 상정하고,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개발계획의 수립을 추진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거점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실질적인 배후지 확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변국의 지원하에 한반도의 통합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는 3년에 걸쳐 수행하는 연차 과제로서 분산·분권정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략거점개발의 파급효과 분석, 전략거점개발의 연계추진방안, 전략거점개발의 지속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자료 분석, 관련 법률 검토, 전문가·실무자·연구진 합동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관련 연구원·대학교수 등과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하며, 선진 외국의 현지 전문가 활용, 해외 출

장을 통한 현지 조사도 병행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산·분권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분권시대의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에 입각한 개발모델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지수 정립을 위한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I)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사전에 전망하기 위한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시스템’과 정부의 재정투자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국가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한다. 또한, 개발된 모형과 지수를 활용하여 예산당국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각종 재정투자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효과를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통해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지역개발사업의 투자효과와 국가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어 재정투자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연차별로 전망할 수 있고, 국가 재정투자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투자의 장·단기 효과를 사전에 자가진단할 수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도에 수행할 연구분야별 기본연구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총 27개다.

- 국토·지역분야 –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 클러스터 촉진방안, 공공사업의 갈등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등 4개 과제
- 국토환경·문화분야 –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환경용수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정책과제 등 2개 과제
- 도시분야 –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 연구 등 2개 과제
- 토지·주택분야 –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인구와 자산구성 변동을 중심으로-,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II),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등 5개 과제
- 교통분야 – 전국 도로망 체계 발전방안 연구(I) –국토간선도로망체계의 평가와 도로정책방향 설정-,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초기 유비쿼터스 환경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 등 4개 과제
- SOC·건설경제분야 –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I),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등 4개 과제
- 국토정보분야 – 국토정책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 GIS 전략 연구,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 등 4개 과제
- 동북아발전분야 –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II)와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I) 등 2개 과제



분야별 주요 연구

1. 국토·지역연구	21
2. 국토환경·문화연구	35
3. 도시연구	41
4. 토지·주택연구	47
5. 교통연구	57
6. SOC·건설경제연구	63
7. 국토정보연구	71
8. 동북아발전연구	81
9. 도시혁신지원연구	87

01

c h a p t e r Ⅱ

국토 · 지역연구

-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Ⅱ)
-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
- 공공사업 지자체 참여 제고방안
- 국토개발전략의 국제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법인 활용방안 연구
: 개발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산업입지 수요조사 방법 및 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
- 스마트 성장과 비전수립 과정 : 플로리다주 잭슨빌시 사례
-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 개발
-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응방향
: 일본을 중심으로
-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개발 연구
- 국토관련계획을 중심으로
-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I)

High Speed Rail and the Changes of Spatial Structure(II)

이용우, 정진규, 윤양수, 임상연

이 연구는 고속철도 개통이 국토공간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고속철도 개통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개년 연구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도 2차연도 연구의 목적은 고속철도로 인해 변화된 국토공간구조를 모니터링하고 이의 재편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속철도 개통으로 지역 간 접근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접근도 개선으로 인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의 정차도시 및 그 주변 시·군에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접근도 증가가 모든 지역에서 인구유입효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공간구조 변화가 상대적으로 가장 빨리 가시화되는 역세권의 경우, 정차역의 신설 여부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달라진다. 기존역을 활용하는 대전역세권의 고속철도 개통 2년차 변화는 토지이용, 토지 및 주택가격, 산업 및 상권 등에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변화의 단서가 보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고속철도가 정차도시권의 생활권에 미친 영향은 일상생활과 관련한 활동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였다. 고속철도를 이용한 대전도시권 주민들의 통행행태는 변화하고 있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대전도시권 주민들의 역세권 통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행권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통행증가가 역세권 공간구조 변화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시간적으로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고속철도 이용목적은 상·하행 구간, 장·단거리 구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에 서로 상이하다. 고속철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축 중심도시인 정차도시 간 상호 작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정차도시 상호 간에 쌍방향으로 미치고 있다.

고속철도를 활용한 국토공간구조 재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다핵연계형)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정차도시의 고급 상업업무기능이 확충되어야 하며, 고속철도 주변 시·군의 발전잠재력 개발과 혁신 및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이 고속철도와 연계·추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개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토공간구조 재편방안으로 수도권, 중부권, 대구권, 부산권, 전북권 및 광주권의 6개 광역경제권 설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결과와 기대효과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여 향후 유사 연구의 수행 시 준거를 제시한 점과 고속철도 파급효과의 특성 분석 및 고속철도로 인한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전망을 다각도로 수행하여 향후 고속철도 활용계획의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정차도시 중심의 다핵연계형 광역경제권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국토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 점도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2006년도 국토연구원 최우수보고서로 선정됨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223면, 국토연 2006-19

>>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

Establishment of Manual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박형서, 김선희, 정윤희

공공사업이나 공간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분출되는 공공갈등이 해당 사업 및 정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 중요 이슈로 대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국책사업이나 정책추진과 관련된 갈등은 이해관계도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일단 발생하고 나면 해결도 잘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 정책이나 사업이 표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공기관 갈등관리를 위한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의 작동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갈등관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현장에 적용한 바 있다.

건설교통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시범적인 갈등관리 매뉴얼을 구축하였으나 실제의 다양한 갈등현장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갈등관리 기본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갈등관리 절차나 기구 등에 대한 규정만 있어 공공정책 또는 사업의 특징별로 발생하는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갈등현장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에 실시한 ‘공공갈등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갈등매뉴얼을 구축함으로써 일선 행정업

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매뉴얼 구성은 갈등의 진행단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공공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므로 필요한 점검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이나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갈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선택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매뉴얼의 목표는 첫째, 복잡한 공공갈등의 분야에 적절한 행동으로 적시 대응을 하도록 하고, 둘째, 사회갈등의 순기능화로 사회 및 산업의 평화 정착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며, 셋째, 대안적 갈등관리나 예방적 갈등관리의 생활화를 도모 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기간: 2006. 6. 1~2006. 11. 30
서지사항: 129면, 국토연 2006-9

>> 공공사업 지자체 참여 제고방안

A Coopera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Project

박형서, 정윤희, 황승미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책 및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지방정부나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상당한 차질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임대주택 건설 등 정부추진 공공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는 지역주민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공공사업의 추진에 큰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중앙-지방정부 간에 공공정책 또는 공공사업추진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관계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상황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조기에 관리, 해소함으로써 공공사업추진의 원활화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결정 및 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로서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및 지방자치에 따른 사무배분과 역할 등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여 사례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앙-지방정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영향요소를 추출하고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방안과 지방정부의 공공정책에 참여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인식이다. 둘째, 정책의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정책이나 사업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방지하고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과정상의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대안 제시와 합의형성을 위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유연성 있게 설정하여 정책 담당자로 하여금 시간에 얽매어 지방정부의 참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간접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력계획체제의 구축으로 국가적 목표와 지방의 이익을 조화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공공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방안 발굴과 지방정부에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기간: 2006. 2. 1~2006. 5. 30
서지사항: 103면, 국토연 2006-3

>> 국토개발전략의 국제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Territorial Policy in Overseas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박양호, 서태성, 이원섭, 정옥주, 박세훈, 박정은

한국 국토개발정책의 핵심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의 고유한 특수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국토개발정책은 범세계적으로 공통조건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국토정책을 중시하며 공통적인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과 중국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국토정책의 개발을 위해 주요 국가의 국토개발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각국의 국토 당면과제, 국토정책 패러다임, 세부 과제별 전략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개발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일본, 중국의 국토개발전략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랑스는 국토균형개발에서 경쟁력 강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2005년 말 단행된 CIADT의 CIACT로의 개편과 DATAR의 DIACT로의 확대개편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첫째, 국가도시 네트워크와 핵심경제지역 강화, 둘째, 다양한 유형의 거점 개발, 셋째, 고속교통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로 아일랜드는 국토의 계층화와 농촌개발을 통한 정주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로 일본의 경

우,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국토계획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1962년부터 총 5차에 걸쳐 수립되어 경제성장에 지대하게 공헌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국토형성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획내용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동부·서부·중부 등 3극 구조의 국토계획에서 동부·서부·동북부·중부 등 4극 구조로 세분화하여 동부출선전략, 서부개발전략, 동북진흥전략, 중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해외의 국토개발전략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첫 번째가 향후 국토개발전략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삶의 질, 균형, 성장 간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립·자율·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과 경관에 대한 고려, 도시재생과 농촌의 부흥, 협력적 메커니즘과 초광역권의 결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기간: 2006. 7. 14~2006. 12. 13
서지사항: 246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년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

>>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법인 활용방안 연구 : 개발촉진지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Corporation in Depressed Regions in Korea

이원섭

낙후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낙후지역 지원사업에서는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최근 들어 하드웨어 사업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접근방식에 있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낙후지역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개발촉진지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지원제도로서 낙후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개발촉진지구의 근거법인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법인의 활용 사례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개발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민간부문의 직접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법인과 유사한 특정목적법인으로 도로나 하수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설치를 위해 설

립되는 법인을 들 수 있다. 지역개발법인은 지역개발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것은 기존의 특정목적법인과 동일하지만 단일 사업뿐만 아니라 복수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지역개발법인의 활용 필요성이 높은 이유는 지역개발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로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지역개발의 효과도 더욱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개발법인에는 민간금융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는 민간부문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부진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금융부문의 지역개발법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에 대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후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통상적인 접근방식으로는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6. 2. 1~2006. 7. 31
서지사항: 142면, 국토연 2006-8

>> 산업입지 수요조사방법 및 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

An Analysis of Forecasting Methodology for Industrial Land Demand

류승한

산업단지의 개발은 정확한 산업입지 수요전망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산업입지 수요전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입지 수요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건에 따라 각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이 결과 일부나마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입지수요를 추정하고, 그 결과 수요의 과대추정 및 이에 따른 산업단지의 장기미분양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합리적인 산업입지 수요전망 기법을 찾아보고자 시작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 산업단지의 개발 수요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지역산업입지 수요전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산업단지가 수요전망 시 합리적 기준이나 절차 없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산업단지가 기업체 설문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단지는 수요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존 수요전망 사례와 외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수요전망 절차를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장래 입지수요 전망, 공급 규모 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산업입지 수요예측은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전망과 지역의 입지여건 전망, ② 경제전망에 기초한 발전목표의 설정, ③ 미래의 총 부지수요 산정, ④ 공급가능 면적의 산정 및 신규 수요의 결정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전망은 지역총생산,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 구조 등과 같은 지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지표의 전망기간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지역의 산업입지 수요 전망은 목표연도의 고용자 수와 생산액 전망결과에 고용자 1인당 용지면적이나 단위 생산액당 부지면적을 대입하여 전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의 방법론, 가령 기업체 수요조사 등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한정하여 활용한다.

전체 산업입지 중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비율과 목표연도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지방정부가 연차별로 설정하며, 개별 산업단지의 수요는 상기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인근지역의 공장용지 가격 수준 및 기업의 지불 의사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이 연구는 개개 산업단지 수요 전망에 사용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별 산업단지 수요전망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를 기초로 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6. 2. 1~2006. 7. 31
서지사항: 95면, 국토연자 2006-6

>> 스마트 성장과 비전수립 과정 : 플로리다주 잭슨빌시 사례

Smart Growth and Visioning Process : City of Jacksonville, Florida

최현선, 권영섭

스마트 성장은 초기 성장관리에 비해 환경에 대한 고려와 사회 형평성(equity)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어서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인 도시개발 역사에서 스마트 성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범위에 대해서 분석하며,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는 데 있다. 스마트 성장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10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복합적인 토지이용(mix land uses)원칙, 콤팩트 디자인(compact building design)을 적극 활용, 다양한 종류의 주택보급 및 기회의 확대, 걸어 다닐 수 있는 커뮤니티, 수준 높은 계획을 통한 특별하면서도 매력적인 커뮤니티 육성, 미래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보존·자연보호, 미경, 농업지역 포함,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 제공, 기존의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고 직접적인 개발 적극 지원, 개발 계획이 예측가능하면서도, 공평하고, 비용효과 분석 가능, 개발 결정에 커뮤니티와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협력하는 틀 제공 등이다.

플로리다주는 파괴되기 쉬운 자연환경과 급작스런 성장 때문에 성장관리 정책을 일찍부터 채택하여 왔다. 1960년대 말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972년 입법화를 시작하였고, 1985년 플로리다 주 전체를 위한 성장관리 법안(Growth Management Act)을 채택하였다. 잭슨빌시는 1985년 주정부의 성장관리법안에 따라 1990년에 성장관리와 스마트 성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2010 종합계획(Jacksonville's 2010 Comprehensive Plan)을 수립하였으며, 균형 있는 성장과 스마트 성장의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하여 베타 잭슨빌 계획(Better Jacksonville Plan)과 번영을 위한 블루 프린트

(Blueprint for Prosperity) 프로젝트 등이 실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플로리다주와 잭슨빌시 사례에서는 다음의 특징들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플로리다주는 성장관리와 스마트 성장 원칙들을 주 전체에 적용할 때 주 정부의 중심 또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둘째, 플로리다주의 성장관리 연구 커미션과 잭슨빌시의 성장관리 태스크 포스 팀 등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비전수립 과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비전수립 과정의 도입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구분이 모호해질 정도로 서로간의 공조와 협조를 지향하고 있다. 넷째, 플로리다 주정부의 2005년 입법이나 잭슨빌 시정부의 정책방향은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스마트 성장 시책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필요와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계층의 양극화나 왜곡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공간구조 정책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성장은 사회 및 공간적 형평을 이루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성장관리 정책은 통합적인(synthesized) 재정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업 가능성(feasibility)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기본적인 재정환경 자체가 훨씬 더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성장관리정책 적용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재정과 스마트 성장사업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연구기간: 2006. 9. 1~2006. 11. 30
서지사항: 75면, 국토연 2006-46

>> 시스템 다이NAMICS 기법을 이용한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 개발 Pilot Simulation Model for Balanced Development Impact Assessment : Based on System Dynamics Approach

김영표, 조운숙

이 연구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투자의 파급효과 측정모형을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모형의 개발가능성과 유용성을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예산편성과 정에서 정부의 각 부서가 엑셀을 이용하여 모형과 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기관이 재정투자의 국가균형발전효과를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실험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범모형 개발에 앞서 지역투자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 효과를 표준화된 하나의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지수를 정립하였다. 이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통계학과 경제학에서 활용되는 10분위·5분위·2분위의 분배율을 비롯하여 지니계수, 엔트로피 등 각종 불평등도 측정방법을 원용하여 살펴본 후 그중 엔트로피계수를 국가균형발전지수로 채택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모형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모형 시뮬레이션상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16개의 공간단위 즉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대상 분야는 인구, 주택, 도로, 철도, 정보통신, 농어촌 개발, 교육, 문화, 관광, 산업육성, 기술개발, 토지이용, 보건복지, 환경, 산림 등 15개 분야를 포함했으나, 모형 개발에 있어서는 인구, 주택, 도로, 교육, 문화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모형의 시뮬레이션 기간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05, 2010, 2015년

을 참조연도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실제로 활용해 보기 위해 5가지 사례를 설정하여 모형에 적용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재정투자 없이 현재의 추세대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우를 기본사례로 하고, 둘째, 임대주택 건설에 연간 1조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하는 사례를 비롯하여, 셋째, 도로건설에 연간 7조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하는 사례, 넷째,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건립에 각각 연간 1000억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하는 사례, 다섯째, 앞의 3가지 사례를 종합한 사례 등 5가지다. 사례별로 2020년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면, 2005년에 0.8801로 산정된 균형발전지수가 기본 시뮬레이션에서는 2020년에 0.8784로 나타나 그대로 두면 지역 간 불균형이 점차 커질 것으로 드러났고, 임대주택사례에서는 0.8831로 다소 균형발전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건설사례에서는 0.8890으로 더 균형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문화시설투자사례에서는 0.8784로 그 정도의 투자로는 균형발전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확장되고 세련된 시공간통합 재정 투자파급효과 측정모형으로 발전되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7. 1~2006. 12. 31
서지사항: 본보고서-120면, 국토연자 2006-17,
별책 47면, 국토연자 2006-17-1

>>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응방향 : 일본을 중심으로

Changes in the Spatial Structure of Metropolitan Regions amid Slow Population Growth and the Directions of Policy Responses : Focusing on Japan

세타 후미히코(瀬田 史彦), 김광익, 변필성, 왕광익 외

한국은 최근 들어 출생률의 저하와 고령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저성장 및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인구가 집중되었던 대도시권에서도 나타날 것이므로 인구저성장 및 감소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인구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시정책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005년부터 일본 전국 인구가 감소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시대의 도래는 도시 공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새로운 정책적 과제를 초래하여 그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도 요구할 것이다. 클라센의 도시발전단계론(Klaassen et al., 1981)의 도시권 구분을 고려해서, 도시권 전체, 도시권 중심 시정촌, 교외지역 시정촌의 인구증감을 토대로 도시권을 여덟 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에 속하는 도시권 수의 변화를 2030년까지 전망한 결과, 인구가 증가하는 네 개의 유형에 속하는 도시권의 수는 감소할 것이지만, 2030년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의 도시권 수는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시대에 대한 일본의 도시공간 정책의 대응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행정 및 경영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정촌 통합 문제, 그리고 국토교통성에서의 정책적 논의 및 대응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도시계획제도에 있어서의 대응과 제도 및 실천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콤팩트 시티 구상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관련 정책적 수단을 살펴보았다. 특히 정책 대응과 관련

해서 주목할 점은 인구감소사회의 도래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공간의 정비에 있어서 기존의 확대지향 및 공급위주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제도의 재구성 및 토지이용의 적절한 방향으로의 유도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인구저성장에 대한 일본의 도시권 공간구조 변화, 일본에서 인구감소시대에 대한 정책대응의 전개를 도시정책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인구저성장의 의미, 정책과제를 살펴보고,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연구의 특징과 한계점은 언급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필요한 연구 과제들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6. 30
서지사항: 142면, 국토연 2006-11

>>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개발 연구 - 국토관련계획을 중심으로

Application Guidelines for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o National Territorial Plans

이용우, 임상연

전략환경평가의 본격 시행에 앞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절차 마련, 관련주체 간 역할 분담, 평가기법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토관련계획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을 개발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6단계 시행절차, 총 15개 수행과제에 대하여 주요 고려 및 착안사항, 국내의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1단계 평가계획 수립은 전략환경평가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계획수립 착수와 동시에 전략환경평가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계획 서술 및 평가목적 설정(과제 1-1)과 평가관련 제도상, 절차상 고려사항 제시(과제 1-2)가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인 평가항목 설정은 계획의 내용과 위계에 따라 환경영향과 범위 그리고 대안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환경성 평가의 실질적 대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단계다. 이를 위하여 환경성 평가대상 계획내용의 도출(과제 2-1), 국토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안 설정(과제 2-2), 환경평가항목 설정(과제 2-3),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과제 2-4)이 필요하다.

3단계인 환경성 평가는 평가대상 계획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평가항목에 따라 분석, 평가하는 단계로 전략환경평가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된다. 환경성 평가는 평가표 작성(과제 3-1), 분석기법 결정(과제 3-2), 평가방법 결정(과제 3-3), 계획내용 및 대안의 환경성 평가(과제 3-4),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수렴(과제 3-

5)의 순서로 진행된다.

4단계인 평가보고서 작성단계에서는 평가계획의 수립부터 환경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기술하는 단계다(과제 4-1).

5단계는 평가보고서 검토과정이다(과제 5-1).

6단계인 모니터링 및 환류는 계획집행에 따른 성과와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추가조치의 강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모니터링의 목적 및 방법을 확정하고(과제 6-1), 부정적 환경영향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과제 6-2).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의 개발을 통해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에 기여, 평가항목 및 대안, 환경영향 평가방법 등 전략환경평가 주요내용에 대한 이론 및 경험적 논의를 통해 향후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 개념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이 기대된다.

연구기간: 2006. 2. 1~2006. 7. 31
서지사항: 150면, 국토연 2006-12

>>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toward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in the Non-Capital Region

권영섭, 신정철

정부는 지역혁신사업(국가균형발전사업 중 일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코자 하고 있으나 지역차원에서의 효율적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도시규모와 지역의 혁신역량에 맞는 적절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혁신사업 추진 관계자 설문조사를 위주로 하고, 해외사례조사, 지역혁신사업과 혁신 잠재력 관련 매크로 조사와 도시규모별 사례를 보완적으로 조사하여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사업별 소규모 지역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체계화·적정 규모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 당시 사업의 성공과 부진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혁신사업 중 일부는 설립목적 범위보다 실질적 서비스 범위가 넓으므로 모든 사업에 지방정부 매칭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넷째, 균특회계에 포괄적 예산제도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기획하며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립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이나 사업추진주체가 신규 사업 진입 시 기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킨 실적 바탕하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발전된 지역과 저발전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혁신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정책 수단을 개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존사업(지역)의 성과제고와 신규사업(지역)의 진입비용(성숙기, 성장기, 형성기)을 설정하여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성과 혁신잠재력이 높은 곳부터 낮은 곳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지역혁신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주체들이 투입대비 충분한 성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사업이 조직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역혁신사업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참여자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성공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방도시들의 유형별로 차별적 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여야 지역혁신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287면, 국토연 2006-15

>>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The Inter-Rural Comparative Analysis on Regional Uniqueness and Policy Implications

김창현, 이순자, 이성수

본 연구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활성화에서 지역 간 특성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농촌의 기능·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농촌변화에 관한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농촌 변화의 메커니즘을 유도해낼 수 있다.

첫째, 산업화에 따라 제1차 산업에서의 경제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됨으로써 산업집적지, 즉 도시로 농어촌인구가 유출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농어촌지역의 인구 과소화와 급격한 고령화다.

둘째, 도시팽창이 과도하여 포화수준에 이르고, 국민들의 가치관이 삶의 양적 수준 충족에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 변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농어촌에 대한 수요변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요변화는 전원 등 쾌적한 주거공간 확산, 농어촌에 대한 제조업 입지 확대,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가치 재인식과 체험활동 활성화, 웰빙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등과 같은 현상으로 표출된다.

셋째, 농촌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반응이 나타나 농어촌 변화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위 수요변화는 기존과 같은 도시의 전면적인 면적 확산이 아니라 도시민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이나 기간에 있어 편포 인트식의 산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수요변화를 소득향상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적 대응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농촌변화 모습 중의 하나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겸업농이 증가하거나 민박·관광농원 등이 확대되는 등 농림어업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서로 접목되고 있는 현상이다.

넷째, 이러한 농어촌 변화메커니즘은, 농어촌지역 간에 차별적으로 전개되어 농어촌지역 간 특성차이를 확대시키고 있다. 농어촌 침체의 메커니즘은, 농어촌에 대한 수요변화 등 외적 요인이, 입지적 특성이나 지형적 요인, 그리고 지역자원의 부존성과 지역인재의 유무 등과 같은 필터를 통하여 필터링됨으로써 지역 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농촌변화 메커니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농어촌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 간 특성차이는, 인구특성관련 지표, 산업경제특성 관련 지표, 토지이용특성 관련 지표, 생활여건특성 관련 지표 등을 통하여 식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농어촌 유형 간 특성차이의 식별내지는 판별결과에 따라 유형별 속성에 적합한 선별적인 세부정책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257면, 국토연 2006-16

01

>>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Planning Paradigm in the Participatory Public Domain :Theoretical Prospects and Practical Propositions in the Korean Context

문정호, 양하백, 김선희, 장은교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공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계획이론적 입장을 정리하고 공공계획의 수립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과정의 역할, 시민사회의 참여 방법, 갈등의 조정 등에 관한 이론적 규범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의 실증적·합리적 계획이론으로부터 1990년대 이후로 전개되는 최근의 기능적 규범이론의 흐름 등으로부터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계획이론의 패러다임적 전환 양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계획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서구에서 관측되고 있는 것처럼 ‘참여’를 중시하는 의사소통적 계획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맥락의 특성에 따라 공공계획에 대한 직접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현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공공계획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로부터 계획·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적 영역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토계획, 균형발전계획 등의 거시적 공간계획 사례와 원전폐기물시설, 새만금사업, 한탄강댐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공공사업들을 사례연구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공계획 과정에서의 참여 규범의 방향이 보다 다양한 사회통합의 구축 수단 도입과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반영의

시스템화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시사점으로 정리된다. 첫째, 불완전한 패러다임 전환, 둘째, 형식적 ‘참여’ 메커니즘, 셋째,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미숙, 넷째, 과학과 정치의 역할 혼란, 다섯째,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미흡 등이다.

이와 같은 이론탐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참여적 공공계획 패러다임의 규범과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공공계획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도적이고 집합적인 행위 또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집합적 행위 또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공공계획 개념에는 현상적인 정부계획 및 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계획의 주체(참여)와 사회통합의 등에 대한 규범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개념적 정리를 통해 이 연구는 하나의 규범적 계획이론으로서 계획의 역할, 합리성 개념, 참여원리 등 이론적 요소와 계획의 목표, 방법, 제도·시스템화 등 실천적 요소로 구성된 ‘참여적 공공계획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사전적 합의형성시스템 구축, 갈등관리시스템 실효성 제고, ‘중재형 계획가’ 제도 도입, 공공계획 수립을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로 개편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238면, 국토연 2006-17

02

c h a p t e r II

국토환경·문화연구

-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
-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 현장중심적 접근을 통한 수해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

National Trust Approach for the Management of Greenbelts in Korea

김선희, 차미숙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리고 안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1971년 수도권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래 35년이 지나 되었다.

1990년대 후반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은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간의 개발제한구역이 당초 정책목적대로 보전 및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과 구역 내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중시의 사회적 요구 반영이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구역 조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통해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토지협의매수제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도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공유화와 경제적·간접적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책수단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구역 조정작업은 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 확보에는 일정부분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구역경계의 영구불변성(sacro-saint)이라는 정책 기조의 붕괴 가능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구축과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71%가 개발제한구역은 계속 보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작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문화 환경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내셔널트러스트화는 구역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 수단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정책적 전환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훼손과 방치를 방지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쾌적한 도시녹지대(green belt)와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로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수단을 민관협력 체계로 다양화하는 데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내셔널트러스트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단기 정책과제로 진행되어 실증적인 방법론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토대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7. 31
서지사항: 154면, 국토연 2006-5

>>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

Spat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ountermeasures focusing on Planning Process and Institutionalization

최영국, 이범현, 오선영, 김태영, 문채, 볼프강 벤데 외

국토난개발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 법제도에는 ‘선계획-후개발’ 원칙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기본이념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립되고 있는 개발계획을 보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개발사업을 보면 역시 자연환경에 대한 경시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에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을 보면 여전히 자연훼손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과 관련된 계획수립과정에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연구이자 개발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배려하도록 하는 계획을 위한 핵심사항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과 같은 개발사업들이 계획수립과정에서 계획대상지 내 보통 자연환경을 어떻게 배려하고 계획하여야 지금과 같은 자연훼손을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은 보호지역이 아니라 신도시와 같은 개발지역 내의 보통 자연이다. 개발대상지 내에 있는 녹지, 구릉지, 하천, 경관 등을 어떻게 계획하면 훼손을 줄이고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천수단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우선 자연훼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태를 분석하고, 계획보고서와 환경성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연훼손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연훼손의 유형별 개발전후의 훼손실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연훼손의 저감방안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에 대한 인식전환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 환경 그리고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제도적 장치의 토대를 이룰 때 진정한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토계획이 자연의 질을 배려하고 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작성되도록 계획수립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본보고서-306면, 국토연 2006-21, 부록-198면, 국토연 2006-21-1

»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

Evaluation Framework for Water Demand Management

김종원, 심우배

물 수요관리는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물 관리 정책 중의 하나다. 1990년대 말부터 정부는 물 수요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관리에 대한 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분석의 모형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물 수요관리 평가가 목표치의 달성에 따른 실적위주의 평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절수수단별,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구축을 위하여 수단별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의 모형 속에서 개별 평가항목과 평가방안 및 평가의 주안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수요관리의 평가에 대한 틀을 기술적 평가, 경제적 평가, 재무적 평가, 사회·환경적 평가, 법·제도적 평가의 틀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수요관리 평가가 수단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합리적인 수요관리의 틀을 제시하였다.

각 평가 틀별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후 수요관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기존의 목표달성도라는 형식적인 수요관리 평가의 틀을 수요관리의 구체적인 수단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및 재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개별 가정에서의 물 수요를 총 소비량과 기초소비량

을 구분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별 가정의 물 소비구조를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구간요금체계가 합리적인가를 평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환경부의 물 수요관리 평가 및 정책수립 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구축한 평가모형이 정부의 타 사업에 대한 평가의 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스톤-게리함수를 이용한 기초소비와 총소비의 구분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수요의 추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경우에 주택에 대한 기초소비의 크기를 통하여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정부의 개입부분과 시장에 맡길 부분을 구별하여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55면, 국토연 2006-20

»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Development of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Strategy in Korea

김선희

우리나라 주요 하구는 이미 하구둑 건설 또는 매립 등으로 크게 파괴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만경강·동진강 하구는 사라질 위기에 있으며, 그나마 자연하구의 형태로 남아 있는 하구도 지역개발, 골재채취, 매립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나친 이용·개발로 인한 하구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섬진강 하구 염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 영산강 하구호 수질개선과 관련된 이해상충 등이 표면화되면서 하구정책도 과거의 현안문제 해결 위주의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예방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진행되어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세대·지역·계층 간 균형과 합리적 분배가 실현되는 하구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하구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방안과 관리체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하구역의 환경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루고 있다. 하구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분석은 지방1급 규모 이상의 17개 하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강, 영산강, 섬진강 및 낙동강 등 4대강 하구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환경현안 및 관리실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2권에서는 압축적인 성장과정에서 훼손된 국내의 하

구습지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현존하는 하구환경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3권에서는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하구 환경관리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함으로써 합리적인 하구 이용·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하구정책을 개발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하구역관리라는 개념을 구현하고자 ‘다양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하구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쾌적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구조성 및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하구 이용·개발체계 구축을 하구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하구생태계 보호, 하구환경 개선, 하구환경 복원, 지식기반 확충, 및 하구관리체계 구축 등 5개 전략부문별로 주요 정책추진부문별로 주요 정책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4. 1. 1~2006. 12. 31
서지사항: 315면, KEI 2006, RE-02

>> 현장중심적 접근을 통한 수해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Analysis of Flood Damage Traits through a Field Study and Policy Implication

김종원, 이성형, 김창현, 심우배

2006년 7월 14일~20일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 영서 지역 특히, 평창군, 인제군을 중심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주택,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였다. 강원도 평창군과 인제군에서 발생한 피해는 산사태에 의한 토사, 토석, 유목 등에 의한 하천 및 도로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또한, 하천변에 건축된 주택, 창고 등 하천 주변 토지이용의 급증이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도로의 유실 및 교량의 붕괴로 인해 고립지역이 발생하여 주민의 대피 및 재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는 현장중심의 피해현황 조사와 주민 및 담당 공무원 면담 조사를 통해 피해 원인과 수해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였다. 수해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문제점, 피해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사유시설 1493억 원, 공공시설 1조 1512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은 약 1조 3천억 원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사유시설의 피해는 11.5%, 공공시설의 피해는 88.5%로 대부분 공공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하여 수해지역의 현장조사 결과와 피해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해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산사태, 고령지 경작 등에 의한 토사·토석류 피해로, 도로, 건물 및 하천피해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하천 만곡부의 피해로, 만곡부 외측부분은 유속이 빠르고 수면이 상승하여 제방이나 도로의 침식피해를 일으켰고, 만곡부 내측에서는 많은 유량이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제방을 범

람하여 하천변 농경지나 주택 등의 침수피해를 발생시켰다. 세 번째는 하천변 토지이용에 따른 피해형태로서, 계곡과 하천에 인접한 주택 등 건물의 침수피해다. 네 번째는 교량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교량 자체가 소규모 교량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교량 주위의 범람을 유발하였고, 생목, 간벌목 등 유목(流木)이 교량에 집적하여 통수단면 부족으로 홍수위를 상승시켜 범람을 일으켰으며, 교량에 가하는 하중을 증가시켜 교량의 붕괴를 유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자연적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해를 완전히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홍수재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강구하였다는 것과 하천특성, 토지이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큰 의의라 하겠다.

연구기간: 2006. 8. 7~2006. 11. 6
서지사항: 92면, 국토연자 2006-19

도시연구

- 근린주구 보행활성화를 위한 보행친화적 환경요소의 계량화 : 주거지역의 보행친화도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 관리기능 제고방안 연구 - 개발행위를 중심으로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생활세계 재생산을 위한 문화축제의 역할

>> 근린주구 보행활성화를 위한 보행친화적 환경요소의 계량화 : 주거지역의 보행친화도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to Measure Walkability Indicators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박소현, 권영상, 서한림, 최이명

보행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은 우리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목표로 자리 잡았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해졌으나, 정작 우리의 물리적 환경이 얼마나 보행에 적절한지 혹은 부적절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량적 측정방법에 대한 접근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구미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근린단위 도시형태의 측정연구와 근린주구의 보행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주거환경의 보행친화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기초연구와 관련한 장기적인 연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주거환경의 보행친화도에 대한 평가지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번 기초단계에서는 우선 이를 위한 보행친화도 평가지표의 기본체계를 설정하고, 영역별 예비지표를 작성하는 것과 예비지표의 항목별 의미, 당위성 등을 살피고 평가방법과 절차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시행함으로써 후속 평가연구를 위한 준비단계를 갖추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도시 주거지의 보행친화 정도를 계량화하여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평가항목들을 통합적인 분류 체계에 맞추어 추출해 보았다는 점, 둘째, 추출된 보행친화도 예비 평가항목들의 의미와 평가항목으로서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평가항목을 대상지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방법 및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연구의 한계는 우선, 참고문헌 중 해외 연구결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상이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수반되지 못한 점과, 평가과정을 엄두에 두고 예비 항목을 추출하였기에 추출된 예비 항목 중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예비지표를 구체적인 대상지에 실제로 적용해 보는 실질적 평가단계가 본 기초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들 수 있다.

향후 과제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예비 평가항목을 실제 주거환경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측정방법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과 더불어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 질 것이다. 평가도구의 완성은 학제 간의 활발한 교류연구를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평가방법이 일반화된다면 측정된 보행친화도의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지 내부에 존재하는 보행환경의 질적 차이와 주거지 유형별 보행친화도의 특성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행환경의 개선지점과 우선순위 및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06. 9. 1~2006. 11. 30
서지사항: 64면, 국토연 2006-48

>>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 관리기능 제고방안 연구 - 개발행위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d Use Control Functions by Urban Land Management System

박재길, 박은관, 박세훈, 조준만, 안용진, 오기현

본 연구는 현재의 도시관리계획이 토지이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도시관리계획의 기초가 되는 개발행위 허가제도 및 용적률을 중심으로 한 개발밀도관리의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용도지역제,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각각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먼저 현행 용도지역제 방식의 밀도 규제방식의 경우 국토법의 근거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물리적 개발현황 및 특성과는 무관하게 실제 개발가능 밀도 수치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조례 용적률을 밀도관리에 적절한 정도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하향조정안을 지자체 스스로 수용하여 재정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와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조례용적률 하향조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하에서의 밀도규제 방식 역시 지구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밀도 규제수단이 아닌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밀도 완화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시 계획용적률을 하향조정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관리계획의 이원적 구조로 된 우리나라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토지의 개발권리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주변의 농지, 산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보전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대한 보전적 토지이용관리와 함께 개발행위에 신청대응적인 토지이용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개발행위의 종류로 건축가능한 토지로 변환되는 지목대로의 토지이용 변경을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시·군 조례로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도가 지역의 특성, 인구규모, 밀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설정된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토지이용관리 기능제고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기준용적률을 명확하게 정의, 운용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형평성 있는 도시개발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24면, 국토연 2006-22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New Approaches in Urban Planning System to make a Livable City

박재길, 이왕건, 김명수, 박경현, 김지형, 이성형

이 연구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가 향후 도시정책, 도시계획, 도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지자체의 중심과제로 부각되며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역할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계획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형태로 10년 단위의 행정기본계획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둘째,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의 삼각패러다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관리계획의 운용방안으로서 토지이용관리기능의 제고와 개발사업 신청 시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선의 설정을 검토하였다.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은 정책계획으로 운용토록 하고 초기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과 커뮤니티가 각급계획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으로 별도의 계획서를 마련토록 하였다.

도시정책차원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커뮤니티 형성 및 정비, 비영리법인체(NPO)의 활성화, 학습활동 강화, 계획전문가의 육성, 재정적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차원에서는 지가 등 부동산 안정화, 전문가 확보 및 육성, 정책개발 기구를 통한 정책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강구, 지자체 재정 지원, 법령정비 및 정책방향 설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 계획 등에 의한 상향식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이를 협력적 모델(collaborative model)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적 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각급 계획에 주민참여방안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과정(process) 중심의 계획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도시계획이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재정 체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가 가진 고질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가 생활자 관점의 도시만들기라고 할 때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바로 핵심이 될 것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온 중앙정부의 할거행정으로 고착화된 지자체의 종적 행정체제를 시민들이 요구하는 생활환경의 종합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횡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내에서도 도시정책에 관련된 관계부처나 부처내 관련조직과 원활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222면, 국토연 2006-44

>> 생활세계 재생산을 위한 문화축제의 역할

The Role of Festivals in the Reproduction of the Urban Lifeworld

신혜란, Quentin Stevens, 김현식

문화축제가 점점 도구화되는 것을 인식하여 시작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주요 관계자들이 문화축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2)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도시정치가 축제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3) 도시축제를 관통하는 사회갈등 관계에서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국제적인 경험과 축제의 다른 유형을 비교하여 어떻게 도시의 정치적 역사와 도시규모가 시민들의 참여도와 참여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본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일상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화축제의 문제점과 가능성, 또한 공간의 사회적 생산에 대해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글래스고우의 웨스트엔드 축제와 광주 비엔날레를 경험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축제는 약 10년 전에 시작되었고 상당수의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학술연구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도시가 국제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치와 지방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큰 편이고 생활세계의 저항 가능성도 쉽게 관찰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연구가 어떻게 축제에서 시민들의 일상의 의미를 복원시키는지, 정부와 자본이 축제를 통해 어떻게 생활세계를 관리, 간섭, 식민화하는지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세 가지다. 1) 준비모임에서의 참여관찰, 2) 주요 관계자들과 일대일 면담, 3) 축제공간과 공간이용 행위에 대한 사진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국가와 자본이 경제발전과 정치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도구로 문화축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점을 보였다. 시민들은 이런 축제의 생산에서 소외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도시정부와 기업을 위기로 이끈다. 왜냐하면, 오직 시민사회 내부에서만, 정부와 기업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충성, 의미, 가치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래스고우 축제에서 도시의회와 지역 기업들 간의 장악력 경쟁을 둘러싸고 갈등을 하면서도, 축제를 재정적으로 이득을 가져오고 전문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한다. 광주에서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독립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자원과 인력 조달을 통해 축제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시민사회는 그 문화축제를 통해 정치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비록 정식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되었지만, 시민단체와 진보적 예술단체는 비엔날레를 광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로로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제와 생활세계 사이의 갈등은 이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언급한 식민화에도 불구하고 두 축제는 모두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표현과 자기 성찰을 강화시키고, 특히 몸의 행위, 사회적 연관의 가능성을 건설하고 공공공간을 발전시키고 축하하는 역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60면, 국토연 2006-49

04

c h a p t e r Ⅱ

토지·주택연구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 부동산가격 변동과 대응방안 연구
: 일본 부동산시장의 사례
-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
-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
-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I)
: 시도별 정책방안 모색
- 한·중 토지정책연구(VI)
: 거시경제와 토지시장 및 토지정책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An Improvement on the Land Compensation System for Smooth Operation of Public Works

지대식, 김승종, 손경환, 조판기

맞춤형보상이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토지보상법의 재산권보상 기준에 생활권보상과 현물보상을 가미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만족할 만한 보상대책을 창출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안된 접근방법이다. 이 연구는 맞춤형보상의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토제공 확대 등 보상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토지보상체계의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연구목적을 비롯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연구방법 및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소개하였다. 제2장은 학설과 판례에 입각하여 헌법상 정당보상의 범리를 살펴보고 재산권과 생활권, 현금보상과 현물보상이라는 손실보상의 내용·방법을 파악하는 가운데 최근 행정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맞춤형보상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토지보상 관련제도의 일반현황과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주요 공익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대토제공 관련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특별히 토지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파악되도록 하였다. 제4장은 문헌 및 인터넷 조사와 외부연구진 협동연구를 통하여 독일·일본의 대체토지보상 입법례와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의 입법례에 비하면 매우 생소한 것들이지

만, 대체토지 제공 등 현물보상을 활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독일제도의 법리적 문제점과 실효성, 그리고 일본제도의 생활재건조치로서의 성격과 의미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 이 제도를 정당보상의 내용 범위로 의무화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끝으로 제5장 토지보상체계의 개선방안에서는 우선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립한 후에, 토지보상체계의 주요 개선전략으로서 현행 채권보상방식을 개선하고 대토제공을 확대하는 보상방법의 다양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제도에 너무 취약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개선을 포함하여 대토제공 확대전략을 중심으로 장단기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시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64면, 국토연 2006-27

>>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The Strategies for Social Integration in Urban Residential Spaces

배순석, 진정수, 천현숙, 전성제, 김승종

현재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등 다수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주택과 혼합 또는 인접하여 개발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적절한 사회적 혼합방식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분리 정도와 변화추이를 평가하고, 둘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간 분리 시도 및 사회적 배제실태 현황을 조사·평가하며, 셋째 해외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주거의 지역적 편중화, 집단화, 고립화 등을 방지하고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먼저 대도시에서의 저소득층 주택의 분리 정도와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리실태 분석한 결과 분리 정도가 낮지 않으며, 그 정도가 완화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물리적으로 혼합하는 방법을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형, 주동 내 혼합형의 4가지로 구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분리·배제실태를 살펴본 결과, 물리적 차원에서는 단지의 분리배치 실태에서부터 공공시설의 배치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회관계적 차원에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입주민 상호 갈등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해외사례의 심층적 조사·분석을 통해 대

규모 임대주택 단지의 획일적인 공급보다는 소득계층을 혼합을 유도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기성시까지 내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매입과 재개발 등 물리적 지원과 주거비 지원 등 주택관련 지원에 대한 집중,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시주거공간의 사회적 통합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혼합방식의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 사회적 배제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288면, 국토연 2006-23

>> 부동산가격 변동과 대응방안 연구 : 일본 부동산시장의 사례

The Impacts of Fluctuations in Real Estate Price and Policy Implications : the Case of Japan

손경환, 지대식, 박천규

이 연구는 부동산시장의 거품 발생과 붕괴 실태, 관련 정책 및 경제적 충격 등에 관한 일본의 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의 부동산가격은 도쿄도심, 상업지를 중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이외지역으로 파급되었다. 당시 양호한 경제구조와 기대심리가 자산가격을 상승시킨 주요 원인이다. 경기는 1983년을 저점으로 확대로 전환되었으며, 상업지 등 토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또한 고정금리는 수차례에 걸쳐 인하되어 1989년까지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주가·지가의 상승이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상승 기대심리도 높아졌다. 자본이득 획득을 목적으로 투자 붐이 일었으며, 금융기관도 신용 공여액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거품경제에 따른 피해가 심해지자 정책당국에서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정이 자율의 인상과 더불어 금융기관에게 부동산융자금 규모의 총량을 규제하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또한 세제조치로 토지보유세 신설, 고정자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시가화구역 내 농지 과세 재검토, 유흥지과세 신설 등을 추진하였다.

가격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부동산가격은 1991년을 고비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격폭락은 일본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역자산효과가 나타나 소비지출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금융시장에서 부실채권증가와 신용빚박의 부작용을 겪었다.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다.

부동산거품의 발생과 붕괴는 모두 국민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특히 거품붕괴의 충격은 경제구조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거품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거품이 형성되었을 경우 연착륙을 유도하는 대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부동산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금융시장을 건전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야기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태, 통화공급이나 신용공여 수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행동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자산가격의 변동이 거시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리스크를 파악하는 작업이 따라야한다.

거시경제의 운용이나 금융정책이 부동산시장의 거품발생과 붕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수단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정비에는 시장규제의 탄력적 운용, 시장예측수단의 확보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금융정책 차원에서도 금리조정, 유동성관리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 같은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구기간: 2006. 8. 1~2006. 10. 31
서지사항: 90면, 국토연자 2006-9

>>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

Land Policy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Preparing for the Advanced Society(I)

채미옥, 정희남, 송하승

우리나라 토지정책은 시대적 여건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경제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토지정책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의 토지정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규범성이 회복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정책은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고 이끌어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토지정책의 기본 철학이 선행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2개 연도에 걸쳐 수행하는 연구로서, 1차 연도에는 토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간의 토지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여 토지정책의 거시적 흐름(mega trend)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선진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지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토지정책과 토지정책의 주변 환경을 연구범위로 정한다. 우선 토지관과 토지정책의 기초사상을 검토하고, 각 시대별 정책 목적과 수단을 살펴본다. 토지시장 변화와 토지이용구조의 변화,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법원판례를 조사하여 정책환경 변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정책과 정책환경, 법적판단 변화를 바탕으로 토지정책의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여 선진사회에 걸맞는 토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구성한 뒤, 각 분야별로 토지정책 개선의 기본방향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토지정책이 투기억제나 지가안

정대책과 같은 대증요법적 대책에 휩쓸리지 않도록 토지정책의 철학을 정립하고 정책의 규범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가 자기주장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토지정책 취지가 상황에 따라 왜곡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토지가 가진 부분 시장적 특성에 맞게 토지제도를 지방화하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는 토지정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적합성을 제고하고, 현행 토지정책의 부작용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다.

셋째, 도시용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정책의 범주를 확대하여, 토지정책적 차원에서 도시용지, 농지, 산지제도를 정비하는 통합적 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농업정책, 산림정책 중심의 농지제도와 산지제도를 토지정책과 연계시킴으로써 난개발, 불필요한 농지 잠식 및 자연환경 훼손, 토지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294면, 국토연 2006-28

>>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

Social Polarization in Housing Sector : Diagnosis and Policy Responses

윤주현, 김혜승, 박천규

자본주의 경쟁체제하에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이나 방지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주거부문에서도 양극화문제는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주거부문의 양극화 현상을 규명하고 그 원인 및 파급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주거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양극화 격차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경제력, 주택자산, 주거비부담, 건축경과연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양극화의 원인 및 파급효과를 주거수준 양극화와 주택자산 양극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거수준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과 관련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 기존 주택재고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가구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주택자산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세,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 확대, 주택보유 부담 경미, 과세의 불공평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양극화는 개개인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력, 건강,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 여건도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주거수준 양극화의 1차적인 원인은 저소득이며 이는 열악한 주거서비스 수준 그리고 그에 따른 건강 저하 및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소득감소를 야기하며 이로써 또 다시 주거수준을 낮추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 주택자산 격차의 확대는 사회전체의 경제적 불평등

도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개별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한편, 직접적으로는 주거비상승으로 주거수준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및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주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질적 수준이 구비된 주택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부담능력에 걸맞은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부담도 완화하며, 주거상향이동 원활화를 도모하고, 개별가구의 주거수준제고 및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며, 주택보유로 인한 자본이득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건강관리, 가치관 형성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주거부문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양극화의 실상을 파악하고 하위 극단계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실인식에 대한 논리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양극화와 주거부문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주거양극화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77면, 국토연 2006-25

>>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The Visions and Strategies for Housing Stock Management

배순석, 최수, 김민철, 신정철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에 이르렀다. 최근 재건축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재건축과 개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택재고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수단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 아파트의 비중이 50%에 가까운 정도로 절대적으로 높아서 획일적이고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향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21년 이상된 주택이 20%이며 향후 2015년경에는 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총 1123단지 37.6만 세대가 추진 중이며 그중 520단지 15만 2천 세대인 전체의 약 40.5%가 서울에서 추진 중이다. 유인책보다는 규제가 많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다양한 유인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므로 실질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보수 사업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낮은 경제성장률과 임대료 상승률로 개

보수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주택재고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하에 주택재고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진전략으로는 중장기 주택재고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책의 지역별 차별화 및 지자체의 역할을 증대하며,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위한 적극적 유인책을 도입하고, 고품질 공간계획의 수립 및 '커뮤니티 개조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인 주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시책별 개선방안으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며,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재고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리고 계량분석을 통해 현 주택재고관리 시책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시책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많은 내용을 제시하였지만, 제시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284면, 국토연 2006-24

>>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I) : 시도별 정책방안 모색

A Study on Housing Service Disparity among Regions and Classes(II)
: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Housing Welfare

윤주현, 강미나, 박천규 외

주거정책의 방향이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주거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주거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하여 각 지역 또는 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주거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장은 시도별 주거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 도출, 3장은 현행 주거정책과 주거정책의 집행체계 검토 및 문제점 도출, 4장은 주거정책 프로그램별 주거서비스 제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주거정책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정책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시도별 주거서비스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16개 시도의 주거서비스 수준을 양적 측면(주택보급률, 1인당 주거면적), 질적 측면(건축경과연수,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주거만족도), 주거비부담(PIR, RIR), 그리고 주거안정성(자가점유율, 평균 거주기간, 강제이동 비율)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주택부족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자가점유율 상승폭이 매우 낮았다. 또한 주택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서 주택개조와 멸실, 신규주택 건설 등을 지원하는 정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거서비스의 양적 수준제고에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주택 공급,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이 있고, 주거의 질적 수준제고는 공공임대

주택공급,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개량자금 지원이 효과가 높았다.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제고를 위한 주거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수혜자 중심으로 주거정책프로그램의 종합적 정비, 둘째, 정책대상 선정기준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셋째, 지역별 주거복지소요 및 수요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 넷째,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는 정책기획능력을 강화, 마지막으로 주거정책과 연계된 경제활동, 도시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복합적 복지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643면, 국토연 2006-26

>> 한·중 토지정책연구(VI) : 거시경제와 토지시장 및 토지정책

Comparative Study on Land Policies of Korea and China(VI)
: Macro-economy, Land Market & Land Policies

정희남

본 연구원과 중국 절강대학교 동남토지관리학원과 체결한 5년간의 장기연구협약서(2003~2007년)에 따라 도시토지개발, 공익과 사익의 조정,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정책, 거시경제정책과 토지시장·토지정책의 역할, 그리고 토지정책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과 집행체계 중에서 매년 한 개의 주제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공동연구하고 있다. 4년차인 금년은 거시경제와 토지시장 및 토지정책 주제로 연구하였고, 그 성과는 2006년 9월 본 연구원에서 개최된 공동워크숍을 통해 교환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그동안의 성과물을 편집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모두 8편의 논문을 한국어 편과 중국어 편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제1장은 중국의 신(新) 토지이용 종합계획 관련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과거 토지이용 종합계획의 진행 상황,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한 후, 신 토지이용 종합계획 지침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건의하고 있다. 제2장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소개하는 논문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에 대한 기본원칙과 운영방안, 기대효과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독특한 토지시장 즉, 소유권은 국가 및 사회가 갖되 사용권은 사유화되어 있는 중국의 토지시장 운영형태와 변화추세를 다루고 있다. 제4장은 한국의 주택부문지표와 거시경제지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은 중국의 도시계획 및 도시용지 개발체제를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개혁개

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산업화·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도시계획의 성격과 역할, 도시계획의 체계 및 제도, 도시계획의 핵심 문제와 대응방안, 그리고 토지 공급과 부동산 개발 절차 등을 고찰하고 있다. 제6장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의 부동산세제를 다루는 논문으로서 종합대책(10.29 및 8.31대책)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주요한 부동산세제 개편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7장은 중국의 토지 요소시장의 개혁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다루고 있다. 제8장은 한국의 부동산투기 대책의 내용과 시장효과를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부동산가격 급등배경을 시장의 내적 및 외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발표된 각종 대책들의 내용을 세제, 금융 및 규제차원에서 정리하며, 투기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정부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시장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이 논문은 평가하고 있다.

연구기간: 2006. 5. 1~2006. 10. 31
서지사항: 366면, 국토연자 2006-3

05

c h a p t e r Ⅱ

교통연구

- 교통서비스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 여가통행수요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평가 개선방안
-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 교통서비스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ransportation Service Indicators

김호정, 김종학, 이춘용, 윤하중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소득 1만 6천 달러에 도달하였고, 지금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경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 모두는 선진국다운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지금까지 공급해 온 교통시설은 통행시간과 비용의 단축이라는 경제적 효과만을 주로 고려하였으며, 이용자의 편리성, 안전성, 서비스 만족도 등과 같은 이용자 측면의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시설개선에 따른 이용자의 총통행시간의 단축과 총차량운행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교통시설 이용자가 받는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등의 서비스 수준을 객관화하여 경제적 편익을 포함한 보다 개선된 통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정책 방향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서비스항목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통서비스'의 정의를 정립하였다. 교통서비스란 이용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능한 교통수단과 교통시설물을 활용하여 최단 시간 내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가적으로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는 정보제공의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다. 교통서비스는 서비스의 특성상 정성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므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 교통현상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

구를 진행하였다. 교통서비스 항목별로 지표선정 원칙을 대표성, 객관성, 단순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서비스 항목을 보다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총 11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통서비스 지표의 검증 및 적용을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교통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순서화 로짓(Ordered Logit)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각 서비스 지표별 한계효과 분석을 통해 지표간의 서비스 중요도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책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단순히 '만족', '불만족'의 응답이 아닌 정책방향의 만족 여부를 검증하는 동시에 정책변화에 대한 만족 정도를 제시하여 정책방향 설정 및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도시 특성별, 시설별로 적용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통투자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통시설공급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75면, 국토연 2006-29

>>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The Fundamental Improvements on the Road Transport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s

이상건, 고용석, 이미영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교통과 관련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도로교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도로교통 관련 통계정보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비단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통계정보의 수준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성과 활용성이 높은 국가통계의 생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도 국가교통 DB사업 및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통계정보를 생산·배포·유지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교통환경의 변화와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도로교통 통계정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교통통계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직접 도로교통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와 연구진의 다양한 문헌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각 통계정보별로 구체적인 정비방안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과 관련

한 통계정보의 예산과 조직의 측면에서는 선진외국에 비해, 또한 전반적인 통계정보가 필요한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로교통 통계정보 정비방안을 토대로 향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게 된다면 현재의 심각한 도로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한 관련 통계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연구자 및 정책수립자에게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정책전반에 걸친 통계정보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효과적이고 신뢰성 높은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64면, 국토연 2006-31

>> 여가통행수요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평가 개선방안

A Study on Evaluation Process of Investment for Transportation Facilities Taking Leisure Travel Demand into Account

오성호, 류재영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국민들의 통행패턴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교통서비스의 만족도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평가 기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시설 투자평가 기법에서는 통행시간가치 산정 시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으로 구분하여 각종 지표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당 통행시간가치(원)의 결정적인 변수인 재차인원과 1인당 통행시간가치에 대해 평일 통행위주의 값을 사용하고 있어 통행량이 많은 도시부 인프라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투자평가지침을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여가통행이 많은 비도시부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성 평가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반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평일통행과 휴일통행으로 구분하여 시간가치, 재차인원 등의 지표를 제공하여 투자평가 시 휴일의 통행을 별도로 감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일과 휴일의 시간가치 간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가통행관련 각종 지표들을 제시하고 이를 투자평가지침에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여가통행을 휴일통행으로 규정한 후, '여가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직접 주말에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나온 자료를 개별행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여가통행 시간가치는 평

일의 시간가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가를 위한 통행 시 차량당 재차인원이 평일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타나 차량당 여가통행 시간가치가 평일의 시간가치에 비해 약 두 배 반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가통행시간가치와 주말재차인원 및 도로유형별 휴일계수 등을 활용하여 교통시설 투자평가기법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재원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유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평일과 주말에 대한 시간가치를 갱신하여 투자평가에 이용한다면 올바른 교통투자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교통시설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경제적 논리로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80면, 국토연 2006-30

>>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Enhancing the Acceptability of Road Congestion Pricing Policy

정일호, 정선영, 임영태, 이백진

도로교통혼잡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불편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혼잡비용을 발생시키고 도로 이용의 효율을 저하시키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 감소 및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간 주차상한제 및 승용차요일제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도입이 검토·추진된 바 있으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쳤다.

현실적으로 도로교통 혼잡완화 측면에서는 혼잡도로 이용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수요관리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정책은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부과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조세징수라는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혼잡통행료 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집행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라 고소득 계층에 비해 저소득 계층이 느끼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수준 및 징수구역 등 혼잡통행료 정책의 세부 시행 내용을 결정할 때 각 소득계층별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의 편차가 가장 적은 방안을 선택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수된 혼잡통행료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활용방안 제시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혼잡

통행료는 정부가 징수하여 용도를 정해 사용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시민들은 징수된 통행료가 승용차 이용을 포기한 사람들의 통행편의 제고에 재투자되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혼잡통행료가 도로건설을 위한 자원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활용된다는 점을 일반 시민에게 널리 인식시켜야 정책집행의 수용성이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혼잡통행료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정책 도입 및 집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들이 효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241면, 국토연 2006-32

06

c h a p t e r Ⅱ

SOC · 건설경제연구

-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예 관한 연구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집행 방안
- 해외건설인력의 원활한 수급방안
-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
- u-Traffic 사용자서비스 정립방안 연구

>>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Prospect and Strategies for Construction Demand Structure

유재윤, 김민철

건설수요는 건설공급과 마찬가지로 건설투자를 결정하는 두 축의 하나이지만, 그동안 연구와 정책수립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수요 측면을 간과하고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과 균형 있는 정책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수요 본래의 의미에 보다 충실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설투자액으로부터 순환 변동, 정책 등 교란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잠재건설수요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못하였던 건설수요함수를 일반재화를 함께 고려한 혼합수요체계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건설시장 외적 요인을 포함한 일반균형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수요함수에 의하여 추정된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필수재로 인식되던 토목재가 우리의 연구 결과 사치재로 나타나서 향후 토목재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수요와 산업부문으로부터의 건설수요를 진단하고, 사후관리 건설수요 등 공정에 따른 건설수요도 전망하였다. 이러한 계량적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미래 건설수요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하였다. 건설수요의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는 대체로 향후 건설수요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설수요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래 건설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건설수요는 인구구조, 생활양식, 도시구조,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 환경가치의 증대, 교통여건의 변화, 지역균형발전정책, 해외건설수요 등에 의하여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건설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건설정책과 투자에 있어서 공급 일변도의 관점을 지양하고 건설수요의 개념을 정립하며, 이에 따른 분석과 수요함수의 추정, 그리고 전망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건설수요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건설투자액을 통하여 건설수요를 추출하고, 함수를 추정하는 작업은 차선택이기는 하나 분명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향후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70면, 국토연 2006-36

>>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Regional Allocatio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안흥기, 김민철

최근 교통기반시설투자에 있어 효율과 형평의 조화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Martin(1999)- “Public policies, regional inequalities and growth”. JPE 73, pp85~106-에 의하면 지역 간 형평투자를 목적으로 낙후지역에 교통기반시설투자 비중을 늘린다고 하여 지역 간 소득격차가 완화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간의 교통기반시설투자 정책을 평가해 본 결과, 점차 지역 간 불균형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 간 불균등도는 지역내총생산(GRD)의 불균등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분산분석결과 교통기반시설투자가 지역 간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격차를 유발하는 기타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패널-그랜저인과관계검정 결과 1998년 이전에는 교통기반시설투자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했으나, 1999년 이후에는 교통기반시설투자가 지역경제성장을 인과하는 일방적인 인과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VAR모형을 이용하여 교통기반시설투자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단기적인 플로우 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스톡효과는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지역내총생산, 제조업체의 유형자산연말잔액, 전산업취업자, 그리고 교통SOC 단순 누적 스톡을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지역별 한계생산성이 동일하도록 교통인프라 투자를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경제성장 속도는 약 1.1%p 빨라질 수도 있지만 상당기간 대부분의 지역 인프라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비현실성이 있다. 고용인구 1인당 교통시설 자본을 갈게 투자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 기준보다 작지만 성장속도를 증가시키며, 동시에 지역 간 격차도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완전 균등배분의 경우 경제성장속도가 줄어드는 대신 지역 간 불균등도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통기반시설 위주의 지역 간 형평성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둘째, 개별 SOC 투자사업 평가 시(시행여부, 우선순위 등)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기준치(=사회적 합의)를 사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지역 간 노동력을 기반으로 투자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경제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70면, 국토연 2006-35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집행 방안

Scheme for Effective Execution of Copulative Investment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김재영, 김상욱, 권혁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발전격차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990년대부터 지역 간 발전격차의 해소가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기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국책과제로서 중요성이 더해졌다. 각 부처별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시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국가균형발전시책의 근간이 SOC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기반의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SOC투자 확대 이외에 지역경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혁신 기반조성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즉, 1990년대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이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2000년대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국토균형발전사업은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나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산업연관 분석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결과가 제기되고 있다. 지표상 분석과 달리 도로 등 SOC시설이 건설되었으나 후속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산재되어 있으며, 기대와 달리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역현상 등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다. 이러한 국토균형발전사업의 기대에서 벗어난 회의적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개발성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에 기인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지역경제기반 조성 사업 추진성과가 기대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견상으로 보이는 결과만으로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현황과 실태를 SOC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과의 연계관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지역경제기반 조성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후 하드웨어적인 개발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사업 즉, SOC시설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25면, 국토연 2006-34

>> 해외건설인력의 원활한 수급방안

Effective Measures to Meet the Demand for Construction Manpower 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김성일

해외건설수주는 1997년 140억 달러를 수주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였지만 2004년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의 플랜트 수주증가로 2005년도에는 109억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건설수주는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한 금융, 기술, 기술인력 등의 생산요소가 수주능력을 결정한다. 아무리 수주를 많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기능인력의 수요보다도 고급관리기술의 부족이 주요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해외건설 수주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인력수급이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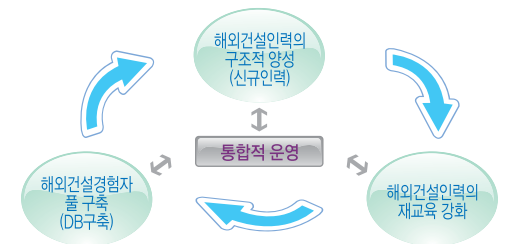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수주추이 및 수주구조를 파악하고, 공종별, 인력의 전문성에 따른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수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향후 해외건설수주전망과 이에 따른 예상 소요인력 규모, 국내 인력 공급가능성 분석을 통해 부족인력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인력수급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해외발주시장의 규모를 감안한 우리의 해외건설수주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해외건설인력 소요 규모를 전망한 결과, 향후 2010년까지 추가로 2809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중 관리기술직 인력 소요가 18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종별로는 토목, 건축분야보다는 플랜트 분야의 인력이 향후 5년에 걸쳐 2336여 명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중 관리기술직 인력의 추가 소요 규모가 145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향후 수주에 대응한 해외건설인력의 원활한 수급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 그림과 같다.



단기적으로 해외 인력의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유경험자의 풀을 구축,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인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해외건설인력 DB 구축과 관리 및 신규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인력센터'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2006. 2. 1~2006. 4. 30
서지사항: 53면, 국토연 2006-55

>>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

Build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SOC Budget Program

김성일, 조진철, 박태선

본 연구는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연구로서 SOC 사후평가의 필요성과 사후평가모형 구축의 기본방향 및 모형을 실제 구축하고, 사후평가모형의 적용방안 및 사후평가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성과관리,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등이 강조되고, 국가 전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SOC 부문의 프로그램 기반 사후평가모형의 구축 필요성과 사후평가 적용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그간의 평가제도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프로젝트 기반의 사전 및 과정평가에 치중되고, 사후평가에는 다소 소홀한 점과 사후평가에 있어서도 성과연계형 평가모형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SOC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의 구축방안은 사후평가모형의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사후평가모형 및 사후평가의 적용기반 강화 방안으로 크게 이루어진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 구축의 기본방향에 따라 단계별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등을 도로, 철도, 수자원(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 간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평가의 기본 틀을 구

축하고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지표의 검토와 지표의 측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인 평가 틀을 제시하여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평가모형의 적용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후평가의 적용기반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법, 제도적 기반강화 방안으로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근거 법규를 마련과 성과기반의 평가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등 관리체계의 구축, SOC 사업평가 관련 정보 및 통계기반의 구축, 평가조직 및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 SOC 사후평가 활용도 증진 및 평가정보의 축적 등이다. 평가결과 활용도의 증진을 위해서는 평가의 시의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예산과의 연계 및 사업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의 반영 의무화 등이 중요하다. 특히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건의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단위의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고, 개별 사업평가 제도를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236면, 국토연 2006-33

>> u-Traffic 사용자서비스 정립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Traffic User Services

윤하중, 이시복

최근 들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교통서비스인 u-Traffic(ubiquitous-Traffic)은 크게 보면 도시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u-City 범주에 포함되는 요소서비스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u-City는 일종의 범처럼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기획·설계단계로서 u-Traffic 역시 개념 정립조차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공통적인 틀 없이 개별 지자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대로 성급히 추진될 경우, 향후 도시 간, 시스템 간 통합성, 호환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u-Traffic의 명확한 개념 및 제공서비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수행되었다. 연구의 범위상 개별 사업 추진 사례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통부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해 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큰 틀에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한 단계 구체화된 레벨에서 u-Traffic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는 u-City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또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교통서비스 부문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u-Traffic의 개념과 목표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서비스의 실체가 가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통행 단계별 u-Traffic 서비스 이용 시나리오를 소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u-Traffic 사용자서비스 분야 및 단위 서비스 도출을 위하여 먼저 ITS와 u-Traffic 간의 특

성과 장단점, 그리고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u-Traffic의 입지를 판단해 보았으며, 이어서 ITS 사용자서비스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u-Traffic 서비스로 편입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고 여기에 신규 u-교통서비스 요소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u-Traffic 사용자서비스의 분야 및 단위서비스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이 분야의 연구가 전무한 것과 다른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초기연구로서 u-Traffic 서비스 추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추진과제들은 조속히 수행되어야만 향후 u-Traffi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u-Traffic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자 관점의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ITS분야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아키텍처 구상이 필요한데,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u-Traffic 사용자서비스 내용은 u-Traffic 아키텍처 구상을 위한 기준점의 하나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u-Traffic 분야의 구체적인 사용자서비스를 정립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로서, 연구의 범위상 관련 전문가 그룹의 공감대를 얻는 데까지는 시도할 수 없었으나, 향후 다양한 전문적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명실 공히 u-Traffic 서비스를 ‘정립’하는 데 있어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6. 30
서지사항: 95면, 국토연 2006-45

국토정보연구

- 국토정보 관련 법제 발전방안
–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
-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 외연확산형과 압축형 도시측정을 중심으로 –
-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Ⅱ)
–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 추진방안 –
-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
- 시공간통합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Ⅱ)
: 국토정책시물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모형 개발방안
-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한·일 국가GIS 추진전략 비교연구
-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 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 국토정보 관련 법제 발전방안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Improving Legislation for Geospatial Information : Focusing on the NSDI

최병남

지난 1995년부터 시작한 국가GIS사업은 국토정보화에 큰 획을 긋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다. 국가GIS 사업으로 지형도, 지적도, 주제도 등을 디지털화하여 미흡하나마 기본적인 공간정보를 확보했다. 이 공간정보를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에 활용하여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아울러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지도정보가 제공되어 국민생활의 편리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기반 구축 미비, 활용체계의 상호운영상 미흡, 단절된 유통체계 등으로 처음 예상한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한 새로운 공간정보기술 출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가GIS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NGIS법)」이 완벽되지 못한 데 상당한 원인이 있다.

국가GIS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정보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NGIS법을 혁신해야 한다면, 새로운 NGIS법은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차원 객체 중심의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생산, 유지관리, 유통, 이용 등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NGIS법은 다양한 국토공간자료 중에 기본공간정보를 규율대상으로 해야 한다. 기본공간정보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형태로 생산하는 체계를 담고 있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세계를 즉시 반영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협력하는 유지관리체계를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기본공간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체계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효율

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각 규정이 통합된 하나의 법체제로 구비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3차원 객체 중심의 기본공간정보를 생산-유지관리-정보서비스하는 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의 집합체 혹은 체계를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기반'이라고 한다. 공간정보기반은 구성요소 관점에서 기본공간정보, 표준체계, 협력체계, 정보서비스체계, 법제로 정의된다.

NGIS법을 혁신하는 방안으로 첫째, 현재의 NGIS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간정보기반 구축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방안, 둘째, NGIS법을 대체하는 (가칭)공간정보기반법을 마련하는 방안, 셋째, 기존의 관련 법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의 문제해결 가능성, 정보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기대효과 등의 측면에서 첫째 방안은 매우 낮고, 반대로 셋째 방안은 매우 높으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현재의 NGIS법을 (가칭)공간정보기반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기간: 2006. 6. 1~2006. 11. 30
서지사항: 129면, 국토연 2006-13

>>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외연확산형과 압축형 도시측정을 중심으로-

Measurement of Urban Form in Urban Growth Management : Urban Sprawl and Compactness

임은선, 이종열, 김형진, 이희연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도시성장관리정책 수단의 적정성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압축도시라는 공간구조의 양면성에 대한 논의가 쟁점을 이루고 있다. 외국에서는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공간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려는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 또는 압축도시의 특성을 측정하려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도시성장 유형을 진단할 때 필요한 공간구조의 측정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의 확산과 압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도시공간구조 측정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도시의 공간구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나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간구조를 도시의 구성 요소들과 그들이 맺고 있는 기능적 관계 및 분포패턴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간구조 측정방법을 정립하였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의 불균형수준, 도시의 분산도, 군집도, 도시의 평균편차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GIS기반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인구밀도, 연속성, 토지혼용도, 중심성 등 도시공간구조의 구체적인 특징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확산-압축 수준을 측정하였고, 4개의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미시적인 공간구조 측정하였다. GIS분

석을 위해 연속지적 자료와 건축물 정보를 연계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 내 인구밀도의 분포와 토지이용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간구조 측정 결과를 정량화된 수치로 측정하고,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공간구조의 구체적인 특징을 표현하였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개별 지표들을 이용하면 여러 도시들의 도시공간구조를 파악하고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하다.

GIS기반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도시공간구조 측정 방법은 도시공간구조의 성격을 진단하고 향후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정립한 측정방법론은 도시공간구조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간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여 풍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시계열적 변화자료와 교통망구조 등 다양한 변수를 도입한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6. 30
서지사항: 107면, 국토연 2006-6

>>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II) -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 추진방안 -

Strategies for building Disaster Prevention Territory using GIS(II)
- Strategies for Intelligent Urban Disaster Prevention System -

정문섭, 김광익, 이영주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대형화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설물 붕괴·화재 등 인위적 재난이 늘어나는 등 도시재난은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재난관리정보체계의 고도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GIS 및 유비쿼터스 등 첨단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된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는 각종 방재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도에 수행된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방재GIS데이터의 통합 활용방안’의 후속연구로 공간정보기반의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의 표준모형 제시를 통해 도시차원에서 필요한 방재업무 고도화를 추진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첨단도시정보화 구축에 기여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도시방재정보체계 현황을 검토하고,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의 추진모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보체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 추진모형은 방재공간정보·방재속성정보·방재상황정보로 구성된 방재기본정보, 활용 측면에서의 8개 방재국토정보부문, 조직·법·제도 등으로 구분된 지원체계와 이들을 근간으로 방재정보생산부문·방재정보관리부

문·방재정보 활용부문·방재정보 유통부문 그리고 방재예방·방재대비·방재대응·방재복구를 위한 방재용·복합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방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정보화사업의 고도화, 공간정보기술 고도화, 방재GIS 구축 협력체계 정비, 법제정비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의 정보체계를 고도화하려는 지능형국토 및 미래형 첨단도시 등 다양한 사업이 구상 중이거나 실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보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정보화사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정보화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방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u-GIS기반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 추진 모형 및 추진 방안을 기반으로 한 도시방재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재해 저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업무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64면, 국토연 2006-40

>>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

Methods to Survey on the Status of Use of Territory in North Korea

사공호상, 서기환, 한선희

이 연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향후 잠재적 협력 가능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관련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에 기반한 응용연구로서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SOC 및 국토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북한의 국토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정립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북한의 국토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국토이용실태 조사항목은 활용목적에 따라 가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선정절차와 객관적 과정을 거쳐서 조사항목을 도출하였다. 조사항목은 국토조사의 696개 항목에 기반을 두고, 북한지역 국토이용정보 수요조사에서 분석한 동북아지역계획, 남북경제협력, 통일 관련 계획수립에 부합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 국토이용자료의 활용현황은 도로, 철도, 항만·공항, 수자원, 산업입지, 농업, 산림, 주택·도시로 분야를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첫째, 국토이용자료는 해당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별로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상호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국토이용자료는 문헌자료, 통계자료, 사진 또는 비디오 등의 영상자료, 지리정보, 위성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유통·활용되며, 단편적이거나 오래된 자료가 많아 정확도가 낮다. 셋째, 북한의 국토이용자료는 정형화된 자료취득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조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평양시를 사례로 한 DB 구축 및 국토이용실태 분석 등 실증연구를 통해 직간접적인 북한의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을 제시하였다. 간접 조사방안은 산재해 있는 기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후 중앙DB로 보내서 공유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조사를 말하며, 직접조사방안은 지형도, 위성영상, 주제도, 수치표고자료 등 수집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접 지리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토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구성,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와 협의체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본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242면, 국토연 2006-38

>> 시공간통합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I) : 국토정책시물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모형 개발방안

Integrated Spatio-temporal Simulation Model for National Territorial Policy(II)
: Research Method and Case Studies

최병남, 임은선, 이동우

국토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공간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계획한 정책에 대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견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국토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국토정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시공간통합 관점에서 국토정책을 시물레이션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실험적인 모형을 개발하여 시공간통합 시물레이션모형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앞서 수행된 1차연도(2005) 연구에서는 SD(System Dynamics)기법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반 공간분석기법을 결합한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차연도(2006) 연구의 목적은 1차연도에서 연구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실험모형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시공간통합 시물레이션모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은 동태모형과 공간모형으로 기본 틀이 구성되어 있다. 동태모형은 지역 간의 부분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경제·사회적 변수로 구성되며 SD기법을 이용하였다. 인구 및 가구, 주택, 산업, 토지이용, 교통 등 부문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가 동태모형의 핵심을 구성한다. 공간모형은 공간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GIS기법을 도입하였다. 공간모형은 토지의 개발잠재력을 이용하여 향후 토지이용이 변화될 확률을 예측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토지이용규제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도시시설물이 개발되는 등 공간정책이 시행되면 향후 공간의 구조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실험하는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태모형과 공간모형을 종합하여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의 틀을 구성하고, 실험모형을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모형의 활용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공간통합모형은 동태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활동변화에 의한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이 값을 공간모형에서 받아들여 장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였으며,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공간시물레이션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겼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국토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물레이션모형 개발을 위한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61면, 국토연 2006-41

>>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한·일 국가GIS 추진전략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trategies for the Ubiquitous Age in Korea and Japan

서용철, 사공호상

오늘날 정보화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통합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전략인 u-Korea를 추진하고 있다. u-Korea 구상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가 정부, 사회, 경제적으로 시스템화된 21세기형 국가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이러한 국가 정보화정책에 발맞춰, 국가공간정보기반인 국가GIS는 ‘유비쿼터스 국토실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라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국가GIS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국가GIS 및 유비쿼터스 정책과 관련사업의 추진실태를 서로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양국의 국가GIS 추진동향을 추진배경, 추진목적, 사업내용, 조직 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u-Korea 전략 및 일본의 u-Japan 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양국의 유비쿼터스 정책동향 및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 추진동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GIS는 물론 유비쿼터스 정보화 정책도 모두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은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 위에서 스스로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산·학 협동체계는 민간 또는 수요자 중심이기보다는 국가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처음부터 관·산·학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GIS를 추진하는 방식과 유비쿼터스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모두가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은 부문별 역할분담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국가 전체적 틀 속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의 주도적 역할도 중요하고 관·산·학 협동체계 역시 중요하다. 다만 어느 한쪽에 비중을 크게 두기보다는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은 향후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대를 산업과 기술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의 가속화와 연관이 있는 부분에 전략이 집중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 기술적 기반이 아닌 생활자 요구에 기반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환경의 변화기를 맞이하여 국가GIS 구축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국가 간 정책 비교의 경우, 세부항목을 비교하기 어려워 구체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는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국가GIS 정책과 유비쿼터스 관련정책을 비교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의 국가GIS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6. 30
서지사항: 121면, 국토연 2006-56

>>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Urban Sprawl Monitoring System: A Conceptual Framework and Case Study

이종열, 김동한, 김걸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각종 개발사업 혹은 개발행위로 나타나는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중심의 난개발 영향을 사전적 및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조금 더 상세한 수준에서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제시하면 우선 개발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시설 중 난개발과 관련되어 검토되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둘째로 검토대상 시설에 대하여 감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에 있다. 그럼으로써 난개발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는 난개발에 대한 개념의 이론적 검토와 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 적합한 정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난개발을 거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난개발의 간접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난개발의 사전 방지가 중요함을 감안하여 난개발에 선행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을 감시하여 사전징후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도출된 요인들의 감시와 GIS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난개발 방지에 GIS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난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GIS를 기반으로 난개발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연구로써 화성시를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방법을 각 부문별로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의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

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GIS 기반으로 구상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를 중심으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제도적 분야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 모든 GIS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문제로서 기본적인 자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분야에서는 기존의 난개발 추세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 분석하는 모델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상시 감시결과의 축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변화를 사전에 검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75면, 국토연 2006-39

>> u-City (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The National Strategies for the Realization of u-City

김정훈, 조준만, 한선희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u-City 건설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신도시는 예외 없이 u-City를 지향하게 될 것 같다. 이처럼 u-City 개발사업이 급부상하게 된 배경은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의 등장과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 소외계층, 주차난, 교통체증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IT기반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u-City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발표하고 있는 u-City 사업계획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u-City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물론 실행을 위한 준비도 미흡한 상태로 장밋빛 구상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의 변화상을 통해 u-City 추진의의를 살펴본 다음, 국내의 u-City 추진현황과 u-인프라와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유비쿼터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u-City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기본구상을 정립하고, u-City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필요한 전략을 인프라, 서비스, 제도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행단계에 따라 기획, 구축,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구현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추진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수많은 u-City 개념이 쏟아지고, u-City 비전과 추진전략 없이 개별 사업시행자별로 IT기술 위주로 추진되어 온 u-City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u-인프라 측면, u-서비스 측면, 법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는 국가와 각 지자체나 도시개발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u-City 건설지원법에도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u-City 구현과 관련한 국가차원에서 큰 방향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구체적인 추진절차나 u-인프라와 u-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기존의 물리적 계획과 정보통신계획상에 u-City의 개념을 담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계획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이 또한 단계적인 u-City 구현전략으로 기존 계획체계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65면, 국토연 2006-37

08

c h a p t e r Ⅱ

동북아발전연구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북한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 -
-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
-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Areas

김영봉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설정되는 것이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의 원칙이나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 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생활 및 경제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는 군사시설보호와 군사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 내의 출입제한과 제한보호구역 내의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지역 내 대소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군부대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한편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에 명시된 허가사항들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어려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와 현안을 조사·검토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의 배경과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나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도상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의 내용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화과정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안 및 과제를 살펴보았다. 셋째는 일본과 미국, 독일 등의 외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및 제

도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여 우리의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넷째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구역의 합리적인 설정과 보호구역 경계의 명확화를 제시하고 나아가 지역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는 제도개선 및 주민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군사시설보호법의 주요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 및 개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치 및 주요 개별군사시설의 지역 내 입지와 정규적인 군사훈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및 피해보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군사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토록 하였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 31
서지사항: 76면, 국토연 2006-8

>> 북한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ourism Resources in North Korea: Cooperative measures for pilot tourism projects in North Korea

김영봉, 이문원, 조진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속되는 긴장상태 속에서도 남북한은 교류와 협력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은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이 진작될 수 있는 한가닥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진전되었던 남북한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의 개방과 경제제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관광 잠재력 및 개발수요를 분석하여 관광산업의 개방여건 발굴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의 실정에 맞는 관광산업 개방유형을 발굴하여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북한의 관광정책과 관광실태를 분석·평가하여 북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숙지하고 현재 북한 관광자원이 안고 있는 현안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체제 전환국 등 해외유사국의 관광자원 개발사례를 관광산업 개방 유형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북한관광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및 개발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 관광자원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북한 관광자원의 남북한 및 동북아 지리적 연계성을 검토하여 협력개발 가능성을 가늠하며 북한 관광자원의 주요지역 관광수요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관광산업의 개방유형 및 단

계별 관광자원활용방향과 전략적 관광시범사업의 추진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적 관광시범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제시하였다.

북한관광자원의 남북한 및 동북아 협력적 사업의 추진은 북한의 피폐한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 사회의 점진적인 개방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에 무리가 없는 지역에서의 관광산업을 통한 대외협력과 경제적인 활성화를 동시에 성취해 나아갈 수 있어 관광협력사업의 추진에 협력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 관광으로부터 시작한 북한의 관광사업이 남북한 및 동북아 협력 사업으로 더욱 확대되고 북한 전역에서 협력사업이 추진되어 북한의 경제적 활성화를 유도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개방의 체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88면, 국토연 2006-42

>>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Impact Analysis of China's Three Northeast Provinces' Development on the Industry and Infrastructure of the China-North Korea Border Region

김원배, 이성수, 조명철, 홍익표, 정승호, 박현정

중국의 부상과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고, 향후에도 그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다. 한반도의 실질적 주권이 남북으로 분리된 현 상황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21세기를 헤쳐가야 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의 제1위 교역상대국인 동시에 투자원천국으로서 북한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개발전략, 특히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발전략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미칠 영향을 산업구조, 기반시설 및 공간구조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초점을 접경지역에 맞춘 것은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먼저 가시화되는 지역이자, 동시에 장래 통합된 남북경제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게 될 거점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구조, 기반시설, 공간구조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한 이유는 지역경제 발전이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대북 투자가 주로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교역에서도 중국은 광물이나 어류 등 1차 산품을 수입하고,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대북 기반시설 투자도 교역물자의 수송을 위해 양국의

주요 접경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동북3성의 개발로 인해 가속화된다면 북한은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나 자원의 수출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측 접경지역도 인접한 중국의 랴오닝성이나 지린성 지역경제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아울러 중국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이긴 하나, 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과 함께 북한을 과감한 개방·개혁으로 유도하여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이 한반도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중국을 포함하는 3자 협력이나,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협력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 접경지역의 실태와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분석대상 지역이 광범위하고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탓으로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또한 정량적인 자료 수집의 한계로 동북3성 개발의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영향분석이 정성적인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99면, 국토연 2006-10

>>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

Urban Policies for the former GDR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이상준, 벤델린 스투르벨트, 칼-페터 쉐

통일 이후 지난 16년 동안 구 동독의 도시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고, 이러한 정책들은 구 동독 도시들의 기반시설 개선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 서독 도시들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투자부진, 인구감소와 공가 증가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구 동독에서 전개된 도시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물리적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되어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전통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프로그램’이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독일 내에서는 도시지역의 인구감소와 도시성장 정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정책이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생활여건만을 개선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생활여건 개선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Program ‘Soziale Stadt’)과 ‘구 동독 도시정비’ 프로그램(‘Stadtumbau-Ost’ Program)과 같은 통합적인 정책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 이후 지금까지 구 동독의 도시들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구 서독으로부터 구 동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재정 이전의 상당부분이 인프라개발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구 동서독 간 도시인프라의 격차도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주거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 동독의 도시들은 정책오류에 따른 부작용도 겪고 있다. 연방정부는 구 동독에서 구 서독의 계획과 개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었고, 구 동독만을 겨냥한 ‘특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는 소홀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민간의 산업부문투자를 도시개발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지 못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은 이른바 ‘나누어 먹기식’ 지원 때문에 지원의 효과가 낮았던 것이다. 우리는 또한 독일이 통일 이후 예견되었던 구 동독의 인구감소나 도시축소에 소극적이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정책적 실패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래의 인구감소를 대비한 전략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정치적 판단이 도시개발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구 동독의 도시 시장들은 대부분 자신의 임기 내 성과에만 집착했지 장기적으로 나타날 도시축소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교훈삼아서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구기간: 2006. 9. 7~2006. 11. 30
서지사항: 126면, 국토연 2006-57

>>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

Basic Design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I)

김원배, 이성수, 류재영, 박상우

본 연구에서는 북한기반시설이 갖는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은 북한경제의 회생,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비이동성 입지적 자산의 확충을 통한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 동북아 국가 간 지역개발 협력 촉진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유동성을 감안하고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이 갖는 다중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미 북한문제가 국제화된 상황에서 남북 중심의 협력은 그 적실성이나 유효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및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나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북한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동시에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다자협력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은 북한경제의 가변성을 고려하되, 한반도 공간경제의 장기비전 달성이라는 전략적 목표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 또는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상황적 가변성 또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교통, 에너지, 통신에 대한 수요분석과 개발전략을 부문별로 검토하여 기반시설의 개발수요와 소요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 접근을 전제로 단계별 주요사업과 공간적 설계를 제시하고, 동

시에 이들 사업이 북한의 산업발전과 연계성을 갖도록 고려하였다.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에 의한 가능한 사업들을 본 연구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틀에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우선사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다자협력을 통한 북한 기반시설의 구축은 6자회담에서도 논의할 북한경제지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1. 1~2006. 12. 31
서지사항: 176면, 국토연 2006-43

도시혁신지원연구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해외사례 단행본 번역·출판과제
-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방향설정 연구
- Urban Digital Library 구축방안 연구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해외사례 단행본 번역·출판과제

Translating and Publishing Books of Foreign Case Studies on Making Livable cities

정윤희, 진영환, 박순업

본 과제는 국내에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만들기 운동의 선진사례를 담고 있는 양서를 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공론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마치즈쿠리라는 이름의 마을만들기 운동의 역사가 40여 년에 이르는 일본에서 출간된 총 세 권의 양서를 선택하였다.

■ 도시계획의 신조류

이 책은 도시의 계획적 개발 및 불량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이론과 수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콤팩트시티, 압축도시, 어번빌리지와 같은 계획기법들이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최신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사례편)

: NPO · 시민 · 자치단체의 참여에서

이 책을 읽는 이들은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참신한 발상의 NPO들에게 놀라게 될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조직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조직에 의해 지역이 관리되고 지역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들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전략편)

: 참가와 리더십 · 자립과 파트너십

이 책은 현장에서 시민참가형 마치즈쿠리를 담당하고 있는 11명의 전문가들이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전문분야에 따라 논의를 자유롭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어느 정도 마치즈쿠리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실제상황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세 권의 번역서는 도시계획 및 마을만들기 분야의 실무자 및 대학생뿐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일반인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외국의 선진도시에서 이미 겪었던 도시문제는 우리 도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나름대로 일본사회에 뿌리를 내린 마치즈쿠리 사례를 통해서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세 권의 번역서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5. 15~2006. 7. 15

서지사항: 도시계획의 신조류, 198면(KRHS 번역총서 1)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사례편), 279면(KRHS 번역총서 2)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전략편), 270면(KRHS 번역총서 3)

>>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방향설정 연구

Guideline for Innovation City Development

진영환, 하성덕, 권영섭, 신동진 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일극 중심의 국토구조를 다극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05년 6월 24일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집단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혁신도시별 지구지정과 기본구상,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용할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향후 수립할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구상,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준거가 되는 도시개발 및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혁신도시의 개발 기본구상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의 목표와 미래상, 시도별 혁신도시의 개발방향, 혁신도시의 유치기능과 개발규모, 단계별 개발방향, 산·학·연 유치 등에 대한 계획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혁신도시 부문별 개발구상으로 여기에서는 혁신도시의 지구별 개발방향, 사회·교육·문화 교류공간의 확충, 교통·정보통신체계, 환경·녹지·도시경관체계 등 개발방향을 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으로 여기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방안, 이 전기관 지원, 성과공유방안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계획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혁신역량의 강화 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이를 활용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향을 기초로 하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제시한 기준은 대부분 실제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개 혁신도시는 그 개발규모나 입지여건 및 이전공공기관의 성격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기준이 모든 혁신도시 계획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정부와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기초로 하되, 이를 지역여건과 상황에 부합하게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6. 2. 1~2006. 4. 30

서지사항: 65면, 국토연차 2006-7

>> Urban Digital Library 구축방안 연구

The Construction of Urban Digital Library System

류승한, 김진범, 정윤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등의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벤치마킹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국내·외 선진·모범도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도시관련 국·내외의 정보와 도시만들기 관련 선진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를 생산·취합하고, 이를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및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주민주도의 도시만들기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Urban Digital Library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28년간 축적해온 해외도시 정보 중 주제에 따라 선별한 양질의 세계도시 정보들과, 세계의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여 제공하는 도시 및 지역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웹서비스다. 현재 세계의 도시정보, 도시개발사업, 도시·마을만들기 사례, 도시통계, 도시 및 지역정보 관련 링크 및 사진·동영상 자료 등 국내 및 해외에서 수집된 도시 및 지역분야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세계도시정보 웹서비스는 국토연구원이 보유한 해외도시에 대한 기존자료에 통계정보 등을 신규로 수집·가공하여 구축되었다. 세계도시정보에는 현재, 약 150개의 도시정보와 도시개발사례 등에 대한 정보, 세계 주요 도시에 관한 약 50여 종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메뉴는 세계도시정보,

도시개발사업, 도시·마을만들기, 세계도시통계, 자료실 등 5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정보는 향후 동시번역시스템 및 통합정보검색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도시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어·스페인어 등의 영문 전환 및 중국어, 일본어 등의 한글 전환 번역기를 제공하여 각 링크 사이트를 통해 해외의 정보를 한글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되고, 도시정보관련 타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계하여 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통합정보검색시스템 개발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세계 도시정보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제공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성 높은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6. 7. 1~2006. 12. 31
URL: <http://ubin.krihs.re.kr>



국제협력 및 연구지원활동

1. 국제공동연구사업	92
2. 국제연수교육	110
3. 국제학술교류	117
4. 연구관련 주요 행사	118
5. 연구혁신활동	125
6. 세계도시정보(UBIN) 구축	127
7. 21세기 국토포럼	128
8. 제5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129
9. 제11회 전국 초등학교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130
10. 기획단행본 발간	131

1. 국제공동연구사업

>>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nd Local Monitoring Systems to Observe and Evaluate Land Development Policies in Egypt

- 연구기간 : 2005. 7~2007. 3
- 연구진 : 김현식, 박은관, 김미정, 강호제, 안용진

이집트는 국토의 96%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구가 사막을 뺀 나머지 4% 지역에 밀집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토지개발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을 야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불법적 토지개발과 농지 전용을 통한 Informal 거주지 형태의 난개발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집트 정부는 유사한 토지문제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해결한 우리 정부에게 토지정책, 도시계획, 정책의 평가·감시능력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의 연구용역 발주와 이집트 국토계획청(GOPP)의 연구협력하에 국토연구원(KRIHS)이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사전조사단계부터 이집트 현지를 방문하여 이집트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용역계약 이후 문헌고찰, 이집트 사례지역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고찰, GOPP 관계자 방한교육, 이집트 현지 업무회의 및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사업의 카운터파트너인 이집트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연구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한국과 이집트의 제도를 비교한 결과 이집트의 제도는 크게 공간계획체계, 개발행위허가제, 토지개발시스템 등 세 가지 부분에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계획체계는 지방정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들의 계획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제와 관련해

서 중앙정부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National guideline)을 작성하고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Regional guideline)을 교부하여 지방정부의 개발허가 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집트의 토지개발 시스템은 기성시가지 개발과 신시가지 개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기성시가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주민이주에 따른 반발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공영개발을 대신하여 한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환지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성시가지 개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 신시가지 개발은 N.U.C.A(New Urban Communities Authority)로 하여금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비축된 재원을 광역교통시설 설치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후, 한국과 이집트의 제도비교를 토대로 이집트



여건에 적절한 한국 기성시가지 개발 및 신시가지 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각 사례대상 지역에 모형을 제시한 결과, 기성시가지 개발에서는 환지 및 수용방식과 같은 토지개발 과정의 소개를 통해 토지의 권리 변환방식, 보상방식, 이주민대책 등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이집

트의 기성시가지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신시가지 개발에서는 공공주도의 택지개발 사업을 적용하여 고층고밀의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광역기반시설(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공실률 해소와 주택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GIS KOREA 2006

GIS KOREA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 일시 : 2006. 5. 17~5. 19
- 장소 : 코엑스 대서양홀

■ 참석자

국내

김재현(한국토지공사장), 최병선(국토연구원장),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등

국외

Andrew Evans(Leeds대학교 교수), Christopher Ellis(Texas A&M대학교 교수), Le Minh Tam(베트남 국토자원환경부 Department of Survey and Mapping Deputy Director General), Linda SD Papa(필리핀 국가지도자원정보청 정보관리국장), Mustafa Firat(터키 교통통신부 전략발전과장), Oktoraldi(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 정보처리센터장), Reza Ahmadyieh(이란 국립지리원 GIS 수석팀장), Ryosuke Shibasaki(도쿄대학교 교수), Sar Sovann(캄보디아 국토관리건설부 행정관리국장), Ten Yuriy(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위원회 지도제작국장), Tserensangi Dashzevge(몽골 건설도시개발부 토지관계정책국 선임사무관) 등 10개 동남아국가 국장

급 공무원

■ 발표내용

1. 미국 GIS의 발단
- Christopher Ellis(Texas A&M대학교 교수)
2. 영국의 국가GIS정책
- Andrew Evans(Leeds대학교 교수)
3. 공간정보사회
- Ryosuke Shibasaki(도쿄대학교 교수)
4. 몽고GIS의 현안과 문제점
- Tserensangi Dashzevge(몽골 건설도시개발부 토지관계정책국 선임사무관)
5. 이란의 국가GIS정책
- Reza Ahmadyieh(이란 국립지리원 GIS 수석팀장)
6. 우즈베키스탄의 GIS 도입
- Ten Yuriy(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위원회 지도제작국장)



■ 개최목적

GIS KOREA 2006대회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응하여 GIS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을 파악하고, GIS 혁신사업을 홍보하며 향후 국가GIS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또한 본 대회의 일부로 추진된 GIS활용 우수사례(공공부문)와 혁신 아이디어(학생부문) 발표대회는 GIS활용 우수사례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GIS 활용을 촉진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주요 내용

본 대회의 내용은 크게 GIS 혁신대회, 국가GIS 전략 국제컨퍼런스, GIS 심포지엄 및 신기술 발표회로 구성된다. GIS 혁신대회는 GIS 혁신사례 및 혁신아이디어 발표, GIS 혁신대회 수상자 시상 및 포상순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GIS 전략 국제컨퍼런스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국가GIS 전략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또한 몽골, 이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터키, 필리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국가GIS 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GIS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또한 유비쿼터스와 GIS 접목을 위한 심포지엄 및 신기술발표회를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업체 및 공공기관, 대학 등의 신청을 받아 전시회도 수행하였다.

국토연구원 단독으로 수행한 GIS 혁신대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사 및 연구소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GIS활용 우수사례와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GIS활용 아이디어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공모 및 접수, 1·2차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GIS활용 우수사례에는 대상(전라남도/환경부), 금상(인천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 은상(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기상(순천시) 등이 있었다. 또한 GIS활용 아이디어대회에서는 대상[이성호(경상대)], 금상[박민규(남서울대)/최연규(충남대)], 은상[이성규(부경대)/김성용(고려대)/신인수(전국대)] 등을 선정하였다.

■ 시사점

국가GIS 전략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 GIS 전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GIS 도입단계인 동남아 국가들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GIS 업체들도 이 대회를 동남아 진출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GIS 혁신대회를 통해 많은 공공기관과 학생들의 열정을 알 수 있었다. 본 대회를 자신들의 업적과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노력하는 기관(개인)에게는 격려해주고 다른 기관들에게는 촉매제가 되었다.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Livable City Making: International Perspectives

■ 일시 : 2006. 6. 15~6. 16 ■ 장소 :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강병기(도시연대 대표), 김동주(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 김은희(도시연대 사무국장), 김세용(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효정(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재길(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장), 성장환(국토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안상욱(대한주택공사 혁신정책실 도시환경팀장), 안석환(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서기관), 유병권(건설교통부 지역발전정책팀장), 이동주(청주시 직지세계화추진기획단장), 이명규(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일(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진영환(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 사회), 최병선(국토연구원장), 황기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사회), 황희연(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Hayashi Yasuyoshi(타마가와 마치즈쿠리지구 운영위원), Jim Diers(Professor of University of Washington), Koizumi Hideki(도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Matthew Carmona(Head of the Bartlett School of Planning, UCL)

■ 발표내용

1.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일본 마치즈쿠리의 발전과 의미
- Koizumi Hideki(도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한국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사례와 발전방안
- 이명규(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3. 미국 시애틀의 마을부서 :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커뮤니티의 권한강화

- Jim Diers(Professor, University of Washington)
4. 설계중시의 공간계획
- Matthew Carmona(Head of the Bartlett School of Planning, UCL)

■ 개최목적

그동안 국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 학회나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정의가 연구자마다 다르고, 개념적인 수준의 논의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현실을 부정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국제세미나는 우리보다 먼저 유사한 도시화과정과 도시문제를 이미 경험한 선진국들의 유사한 사례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관련한 경험이 있는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등 국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사점을 얻고, 국내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의 현장 경험을 통해 활동의 배경, 고민과 성과, 향후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한 상호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설정을 모색함에 의의가 있다.

■ 주요 내용

- 제1주제(일본)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일본 마치즈쿠리의 발전과 의미 :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일본 「마치즈쿠리」개념을 소개하고 1990년대 이후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리를 토대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올바른 커뮤니티의 재생과 사회책임, 사회공헌 활동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2주제(한국) 한국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사례와 발전방안 : 주민주도에 의한 마을·도시만들기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는 현실 속에서 국가단위의 정책보다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받는 주민의 참여에 의한 마을·도시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의도로 한국의 마을·도시만들기의 운동 진행상황을 소개하였으며 주변 환경조성을 통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3주제(미국) 미국 시애틀의 마을부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커뮤니티의 권한강화 :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경제력 외에 우수한 근린공동체(neighborhood)와 커뮤니티로 소문난 미국 시애틀의 근린부서 및 보조금(Matching Fund), 근린공동체 계획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커뮤니티 간의 연계와 형평성 유지, 계획기준 제시 등 커뮤니티의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시정부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 제4주제(영국) 설계중시의 공간계획 : 영국의 새로운 계획체계인 공간계획의 개념 및 핵심원리를 소개하고 지방의 계획부서가 설계정책에서 취해야 할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소개하였으며 설계정책은 넓은 의미의 계획의 한 부분이며, 참여가 일어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 시사점

국가별 사례분석 결과,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가 도시차원의 시민운동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지역주민, 시공무원, 사회운동가, 지자체장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둘째,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시계획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원 이양의 추진

셋째, 도시전체의 발전방향과 커뮤니티의 발전을 조화시켜 나가는 접근방식

넷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당사자들의 의식수준 개선을 위한 상호학습과 노력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는 도시정책과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하고, 국가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시사점들을 유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Innovative City

■ 일시 : 2006. 6. 20~6. 21 ■ 장소 : 코엑스 대서양홀

■ 참석자

국내

고석찬(단국대학교 교수), 김동주(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 김선아(스튜디오 SAK 대표 이사), 김채규(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팀장), 남기범(서울시립대 교수), 박삼욱(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박형진(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성경룡(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신혜경(중앙일보 논설위원), 진영환(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 최병선(국토연구원장),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등

국외

Datuk P. Kasi(Director, Setia Haruman Sdn Bhd), David Charles(Professor,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Franco Purini(Professor,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Michael Luger(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Robert McMahan(Executive Director,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 발표내용

1.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한 지혜로운 공간: 21세기의 혁신지역 만들기
- Michael Luger(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 연구기능 중심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조성사례
- Robert McMahan(Executive Director,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3. 미래형 도시개발을 위한 정부의 리더십
- Datuk P. Kasi(Director, Setia Haruman Sdn Bhd)
4.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전략
-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전 Gothenburg University 교수)
5.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 David Charles(Professor,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6.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도시설계방안
- Franco Purini(Professor,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 개최목적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밑그림인 기본구상을 7월 중에 마무리 하고, 기본구상을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해외 선진도시의 개발전략과 성공요소 등 해외 주요 도시개발 사례를 참고하고 해외 석학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마련하였다.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850만 평),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사이버자야(2,300만 평), 스웨덴 시스타(66만 평) 등 해외의 혁신도시 개발사례 발표 및 이와 관련하여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주요 내용

기조연설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한 지혜로운 공간”을 발표하는 공공정책 및 계획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루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신경제에 적합한 첨단기술의 고부가가치산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래도시는 신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클러스터 기반 계획을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모든 지역사회를 스마트 커뮤니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5년 포브스지가 비즈니스와 커리어를 위한 최고의 장소라고 극찬한 미국 동부의 실리콘벨리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개발사례를 발표한 로버트 맥마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과학기술위원회 사무총장은 지역 내 대학,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산·학·연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협조체계 구축이 혁신도시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는 개발이 시작되어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대략 30여 년 정도가 소요, 성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일관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신도시개발에서 유럽의 첨단정보통신의 메카로 성장한 시스타의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한국산업기술대학원 박상철 교수는 시스타의 성공요소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IT산업 인프라 구축 등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순수한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원자의 역할 수행과 스톡홀름시와 에릭슨, 스웨덴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일렉트럼(Electrum)이 협력지원센터로서 산학협동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들 간의 역할분담과 최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과 단순한 단지조성이 아닌 지역의 복합적인 환경

을 분석하여 지역브랜드 창출이 가능한 혁신지역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신행정수도과 첨단정보기술도시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와 사이버자야 개발사례를 발표한 다투 카시(Datuk Kasi) 사이버자야개발회사 이사는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비전과 산·학·연 유치를 위한 최고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을 자유화하여 민간기업 등이 고등교육학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시사점

각 사례에서 동일하게 주는 시사점은, 인재육성 및 인재유치의 중요성이다. 궁극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다.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학을 잘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수립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인재의 육성·배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문화적인 다양성과 역동성에도 기여한다. 또한 해당도시의 문화,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은 인재의 유치를 위해 중요한 관건이다.

혁신도시 개발의 주체는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대학 및 지자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산학연 유치활동과 협조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일관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역량의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지역의 창의적인 브랜드 창출이 가능한 혁신도시 개발 전략이 중요하다.

시스타의 사례 등에서 보여주듯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IT산업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순수한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혁신도시가 성공

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들 간의 역할분담과 최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주요한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유치를 위한 최고수준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지식근로자들은 교육, 문화, 여가 등의 환경을 중요시하므로, 높은 삶의 질과 환경인프라의 구축 등 무형의 도시흡인요소에 대한 투자와 개선이 중요하다.

>> 동북아 교통망 구축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워크숍

Vision and Action Plan for Trans-Northeast Asian Transport Network

■ 일시 : 2006. 6. 28~6. 29 ■ 장소 :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 참석자

한국

김세영(단국대학교 교수),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류재영(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양호(국토연구원 부원장), 예충열(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오성호(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성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욱(인하대학교 교수), 홍석진(인천대학교 교수), 홍순만(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장)

일본

Yasuo Sawai(NIRA 부원장), Tamotsu Shinotsuka(NIRA 국제협력부 실장), Takeshi Suzuki(NIRA 국제협력부 선임연구위원), Yosuke Oneda(C.S. Japan Co. 대표)

중국

Guo Li Gao(ISPRE 연구위원), Zhang Kangmin(ICT 선임연구위원)

■ 발표내용

1. 베세토 회랑의 구축 의의
-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베세토 회랑의 단절과 병목 상황
- 오성호(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류재영(국토연구원 연구위원)
3. 동북아 항공 교통망의 비전과 이슈
- Yosuke Oneda(C.S. Japan Co. 대표)
4. 한-중 열차-페리의 타당성
- 이재욱(인하대학교 교수)
5. 북한 대상의 한-중 도로 및 철도 연결
- Zhang Kangmin(ICT 선임연구위원)

6. 베세토 회랑에 있어서 복합수송체계 의의 - Takeshi Suzuki(NIRA 국제협력부 실장)

■ 개최목적

본 국제워크숍은 베세토 회랑이 가지는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비전을 중심으로 베세토 회랑 구축의 근간이 되는 동북아 교통망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및 실천적 과제에 대한 국제적(한·중·일) 논의를 통해 향후 베세토 회랑 구축과 관련된 국제적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일본 NIRA 부원장인 Dr. Yasuo Sawai의 사회로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의 “Meaning of building a BESETO corridor”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의 수도가 연계되어 만들어질 베세토 회랑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향후 베세토 회랑이 갖는 비전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베세토 회랑의 발전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요소들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제2주제는 국토연구원 오성호 책임연구위원의 “Missing links and bottlenecks in the BESETO corridor”였는데, 베세토 회랑 구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북한에 의한 한반도 수송망 단절 현황, 그리고 최근 남북한 협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례에 관해서 발표하였다. 추가적으로 베세토 회랑 내 물류가 증가함에 따라 적체현상이 생기게 될 양상을 전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Session II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네 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먼저 C.S. Japan Co.(일본)의 사장인 Dr. Yosuke Oneda는 “Air transportation Network in North-East Asia: Vision and Issues”라는 주제로 앞으로 증가할 항공수요를 예측하면서 한·중·일 간의 항공교통 발전현황과 동북아 국가간 항공 협정을 통해 동북아 항공교통체제와 관련된 비전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또한 인하대 이재욱 교수는 “A Feasibility Study on Korea-China Train Ferry”라는 주제로 한-중 페리이용의 타당성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재욱 교수는 먼저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열차-페리 시스템에 관한 사례조사를 분석하고, 동북아 교통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TCR과 TSR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 페리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ISPRE(중국)의 Mr. Zhang Kangmin는 “Rail and road connec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via North Korea”라는 주제로 한-중 철도와 도로의 연결에 관해 발표하였다. Mr. Zhang Kangmin은 북한과 중국 간 현재 철도·도로 교통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으로 남한과 북한, 남한과 중국의 교통망의 연계 전망을 중국의 철도·도로 발전 사례와 함께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NIRA의 Takeshi Suzuki가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for the BESETO corridor”를 주제로 베세토 회랑에서 각 교통수단이 연계될 수 있는 거점을 화물·승객 수요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는데, 베세토 회랑이 과거 철도와 해상 교통에 의해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 루트로서 주목되었

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베세토 회랑에서 도시 간 연결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 전망하였다.

■ 시사점

본 워크숍에 참석한 한·중·일 국책연구기관 및 각계 교통전문가들은 동북아 발전과 관련하여 베세토 회랑이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에 공감하면서 베세토 회랑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앞으로도 동북아 지역 내 국제협력연구가 지속될 필요에 대해 뜻을 같이 하였다.

>> 한·중 토지정책연구 공동워크숍

Joint Workshop on Land Policies of Korea and China: Macro-economy, Land Market and Land Policies

■ 일시 : 2006. 9. 26, 9:00~18:00 ■ 장소 :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 참석자

국토연구원

손경환(선임연구위원), 정희남(연구위원), 지대식(연구위원), 최병선(원장), 최수(책임연구위원)

중국 절강대학교 동남토지관리학원

吳次芳(원장), 蒋文华(교수), 박인성(교수), 靳相木(교수), 岳文泽(교수)

■ 발표내용

1. 중국 신 토지이용 종합계획 정책 연구
- 岳文泽(浙江大學 東南土地管理學院 教授)·吳次芳(浙江大學 東南土地管理學院 院長)

또한 본 워크숍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 10월 26~27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ISPRE 주관하에 제2차 국제워크숍(Agenda for Inner-City Networking and Accessibility in the BESETO Corridor)이 개최되었으며, 2007년 3월 8~9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NIRA의 주관 하에 제3차 국제워크숍(Realization of the BESETO Corridor Vision)이 개최되어, 베세토 회랑의 실현과 관련한 동북아 교통망의 비전과 그 실천적 대안 모색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2.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과 정책과제
- 정희남(국토연구원 연구위원)
3. 중국 토지시장의 운영형태와 변화추세
- 蒋文华(浙江大學 東南土地管理學院 教授)
4. 주택 및 거시경제지표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연구
- 최수(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5. 중국의 도시계획 및 도시용지 개발체계 고찰
- 박인성(浙江大學 東南土地管理學院 教授)
6.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정책
- 지대식(국토연구원 연구위원)
7. 중국 토지요소 시장화개혁의 회고 및 전망
- 靳相木(浙江大學 東南土地管理學院 教授)



8. 부동산투기대책의 내용과 시장효과 - 손경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개최목적

중국 절강대학교 동남토지관리학원과 체결한 5년간의 장기연구협약서(2003~2007년)에 따라 양 연구기관은 도시토지개발, 공익과 사익의 조정,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정책, 거시경제정책과 토지시장·토지정책의 역할, 그리고 토지정책의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과 집행 체계 중에서 매년 한 개의 주제를 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공동연구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거시경제와 토지시장 및 토지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성과를 공동워크숍을 통해 서로 교환하였다.

■ 주요 내용

본 워크숍에서는 모두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첫째 논문 “중국 신 토지이용 종합계획 정책 연구”(웨원저·우즈팡)는 중국의 신(新) 토지이용 종합계획 관련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과거 토지이용 종합계획의 진행 상황,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한 후, 최근 발표된 신 토지이용 종합계획 지침내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신 토지이용 종합계획의 정책대안 및 방향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건의하고 있다.

둘째 논문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과 정책과제”(정희남)는 2006. 7월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에 대한 기본원칙과 운영방안, 기대효과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셋째 논문 “중국 토지시장의 운영형태와 변화추세”(장원화)는 중국의 독특한 토지시장 즉, 소유권은 국가 및 사회가 갖되 사용권은 사유화되어 있는 중국의 토지시장 운영형태와 변화추세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토지제도의 현황을 소개한 후, 토지정책과 토지의 수요-공급 등을 통해 중국 토지시장의 운영형태를 분석했으며, 끝으로 향후 토지시장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논문 “주택가격 및 거시경제지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최수)는 한국의 주택부문지표와 거시경제지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분석 결과, 지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총통화(M1), 생산자물가, 추가, GDP디플레이터, 콜금리, CD유통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실질GDP, 주택매매가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논문 “중국의 도시계획 및 도시용지 개발체계 고찰”(박인성)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산업화·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도시계획의 성격과 역할, 도시계획의 체계 및 제도, 도시계획의 핵심 문제와 대응방안, 그리고 토지 공급과 부동산 개발절차 등을 고찰하고 있다.

여섯째 논문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정책”(지대식)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의 부동산세제를 다루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 주요 방향은 과표 현실화, 실거래가 과세를 기반으로 하는 보유과세의 합리화, 양도과세의 강화, 취득과세의 완화로 요약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부동산 종합대책(10. 29 및 8. 31대책)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주요한 부동산세제 개편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일곱째 논문 “중국 토지요소 시장화개혁의 회고 및 전망”(진상무)은 중국의 토지요소 시장의 개혁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추세에서 중국의 토지요소 시장 개혁은 여전히 적지 않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만의 독특한 토지사용권 제도는 아직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건설용지 사용권에 대한 1급시장제도는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며, 토지수용제도 역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논문 “부동산투기대책의 내용과 시장효과”(손경환)는 한국의 부동산투기 대책의 내용과 시장효과를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부동산가격 급등 배경을

시장의 내적 및 외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발표된 각종 대책들의 내용을 세제, 금융 및 규제차원에서 정리하며, 투기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 시사점

이번 공동워크숍에서는 “거시경제정책과 토지시장·토지정책의 역할”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토지시장과 토지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 제도의 장·단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관련제도 및 정책개선에 합리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체제전환기의 중국경험을 통해 개혁·개방이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토지 관련제도의 기본구상 마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Effectiv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Impacted Areas of the High Speed Rail

■ 일시 : 2006. 10. 13, 14:00~17:30 ■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박현주(주택도시연구원 원장, 사회), 문채(성결대학교 교수), 유병권(건설교통부 지역발전정책팀장), 이경철(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호(부산대학교 교수), 이용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봉현(전남대 교수), 주성재(경희대학교 교수), 山田秀之(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Olivier Klein(프랑스 국립공공건설학교 교통경제연구소 교수)

■ 발표내용

1.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방안: 일본사례
- 山田秀之(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2. 고속철도와 지역개발: 프랑스 경험의 교훈
- Olivier Klein(프랑스 국립공공건설학교 교통경제연구소 교수)
3. 한국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지역 개발구상
- 이용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개최목적

고속철도가 오래전부터 운행되고 있는 일본과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고속철도 정착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다.

■ 주요 내용

고속철도를 활용한 지역개발의 성과는 사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칸센역의 설치 만으로 지역개발의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구체적인 개발구상을 가지고 신칸센 개통을 활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도 지역정책과 지역기업인의 참여가 역세권 등 고속철도의 성공적 활용을 위한 중요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의 경우 고속철도 운행역사가 아직 2년 여에 불과하여 그 영향과 활용성과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고속철도 정착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역세권의 개발가능성은 고속철도 이용자수, 정착도시의 시장규모, 발전잠재력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가 지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역의 노력이 없이는 파급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고속철도를 활용한 지역개발이 정착도시나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정책에 포함될 때 비로소 고속철도가 지역발전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아시아 도시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워크숍

East Asia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Urban Fringe

■ 일시 : 2006. 10. 17~10. 19 ■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중국

Liu YUBING(Director Planning sector of DaLian Development & Reform Commission), Li Xian-wen(Division Director China Land Surveying and

Planning Institute), He Jing(Manager Development & Reform Bureau), Wang Li(Division of Urbanization Planning The Department of Development Planning,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Qin Zhong

Chun(Deputy Division Director Senior Economist, Department of Rural Econom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Liu, Yi (Lecture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s and Engineering), Qing Hu(Halcrow Beijing Chief)

베트남

Huy Tri BUI (Director, Planning Management Department Da Nang Department of Construction), Duc Doi Do(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Land Registration and Statistics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Anh Son LE(Vice President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Thi Hong Hanh LUONG(Official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Huu Doc LE(Deputy Director Danang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Be Quynh Nga(Senior researcher Vice head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Institute of Sociology), Pham Thi Hue Linh(Vice Director Center for construction planning No 2, the National Institute for Urban and Rural Planning), John SAWDON(Economic consultant, Halcrow)

필리핀

Alicia E. BONGCO(Division Chief III / Asst. Project Manager, Component 2, LISCOP Laguna Lake Development Authority), Gracia Monjardin Ang(Group Head Rules and Standards Development Group), Romulo Quirino M. Fabul(Chief Executive Officer and Commissioner 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 Nerissa Torres BAUTISTA(Planning Officer IV Provincial Gov-

ernment of Bulacan Provincial Planning & Development Office), Eden Villavicencio AUSTRIA(Provincial Planning and Development Coordinator Provincial Planning & Development Office), Wilfredo Capistrano VILLAR(City Administrator, City Government of Taguig), Anna Marie Karaos(Executive Director, Institute on Church and Social Issues), Lydia Victoria A. de Villa(Consultant, Halcrow)

World Bank · Halcrow

Maria Teresa Serra(Sector Director Environment & Social Development Sector Department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orld Bank), Samuel Dan Biller(Environment & Social Development Sector Department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orld Bank), Timothy Campbell(Chairman Urban Age Institute), Eric Heikkila(Professor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Joe Wood(Halcrow)

한국

Sang Cheol Choe(Emeritus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ng-Kyu HA(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Won Bae Kim(Northeast Asia Research Center Directo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Won Sup Lee(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Hee Nam Jung(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Okju Jeong(Research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Hwa Kwon Park(Associate Research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발표내용

1. 한국의 도시화 과정 발표
 - 최상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 국제/지역 경험(1) 발표
 - Joe Wood(Halcrow)
3. 중국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 Yi Liu(Lecture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s and Engineering Tsinghua University)
4. 한국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 이원섭(국토연구원 연구위원)
5. 도시계획의 정책수단과 인센티브 발표
 - Tim Campbell(Chairman Urban Age Institute)
6. 필리핀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 Lydia Victoria A. de Villa(Consultant, Halcrow)
7. 베트남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 John Sawdon(Economic consultant, Halcrow)
8. 한국 수도권의 도시성장관리 정책 발표
 - 하성규(중앙대학교 교수)
9. 국제/지역 경험(2)
 - Eric Heikkila(Professor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개최목적

국토연구원 동북아지역발전센터에서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도시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하는 국제워크숍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도시 주변부 도시화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동아시아 국가의 도시 주변지역의 도시화 과정에서 대두되는 난개발 문제와 도시주변부 난개발의 경제적, 환

경적, 사회적 영향, 그리고 이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과 정책수단을 발표하고 토의하였다.

■ 주요 내용

전 과정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동시통역된 이 행사의 첫날인 17일에는 국토연구원장의 환영사와 세계은행 측의 인사말에 한국의 도시화 과정, 세계의 도시화, 중국 사례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18일에는 도시계획 정책수단과 인센티브에 대한 세계은행 검토위원의 발표, 필리핀 사례·베트남 사례·한국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미국의 경험에 대한 발표 및 세계은행 측의 폐회사와 함께 용인지역과 수원화성에 대한 현장 답사가 있었다.

■ 시사점

한국 7명, 중국 7명, 필리핀 7명, 베트남 7명, 세계은행의 전문가 5명 등 총 33명이 참여한 이 국제워크숍은 한국 도시 주변부 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의 경험을 후발 개발도상국인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 제15차 한·일건설경제워크숍

The 15th Korea-Japan Construction Economy Workshop

■ 일시 : 2006. 10. 18~10. 20 ■ 장소 : 보광휘닉스파크

■ 참석자

국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김영덕(기획팀장), 김홍수(부원장), 심규범(연구위원), 이의섭(연구실장)
- 국토연구원- 권혁진(책임연구위원), 김민철(책임연구위원), 김성일(연구위원), 김재영(선임연구위원), 문혁(책임연구위원), 안흥기(책임연구위원), 유재운(연구위원), 윤성민(연구위원), 이승훈(연구위원), 이희구(연구위원), 최병선(원장)

국외

- 일본건설경제연구소(RICE)-모리(전무), 마츠우라(상무이사), 오시마(상무이사), 오타케(연구위원), 타카시라(연구위원), 아마모토(연구위원)
- 일본 동양대학 - 안상경(교수)

■ 발표내용

1. Review and Outlook of the Construction Economy in Korea
 - 김재영(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Macroeconomic Outlook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 Hiroshi OSHIMA(RICE Executive Fellow)
3. Innovative Plans for Joint Winning and Cooperation among Participa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김성일(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Win-Win" Initiatives in the Japanese Construction Industry
 - Hiroshi OSHIMA(RICE Executive Fellow)
5. Problems and Solutions relating to Multi-Tier Subcontracting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 이의섭(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 심규범(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6.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Retirement of the Baby - Boom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of Techniques and Skill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Response to the 2007 Problems
 - Takayasu MATSUURA(RICE Executive Director)

■ 개최목적

그동안 한일 양국은 14차례의 한·일건설경제 워크숍을 통해 상호 간의 우호 증진과 건설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방안,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와 해결방안, 건설기술의 세대 간 이전문제 등 최근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들로 구성되었다.

■ 주요 내용

제1분과는 최근 양국의 거시경기 및 건설경기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측의 발표자는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이었다. 2006년 상반기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지출의 둔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여건은 하강국면에 있다. 한국의 건설경기는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표된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축소되어 건설경기는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측의 발표자는 오시마 상무이사였다. 일본 경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수출과 제조업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3.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최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정책을 폐지하였다. 경제상황이 충분히 호전되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6월 국토교통성은 2005년 회계연도에 53조 400억 엔의 건설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증가하여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건설수요의 축소와 건설업체간 경쟁과열로 여전히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

제2분과는 한일 양국의 건설산업 상생협력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의 김성일 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공사물량은 한정된 반면 업체수는 계속 증가하여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특정업체에 수주가 편중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협력을 하게 되면, 발주자는 고품질의 생산물을 확보할 수 있고, 원도급자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기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참여자 모두에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방안으로서 상생협력 파트너링의 형성 및 확산, 하도급 시장의 질서 확립 및 공정·투명화와 건설

생산체계의 선진화 및 성장기반 확충의 세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의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오시마 상무이사가 발표하였다. 최근 일본의 건설산업은 1990년대 초반 호황기의 60% 정도로 위축되었고 향후 엄격한 재원조달 여건에서 공공부문의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는 일반건설업체와 하도급건설업체의 다층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를 원인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전문건설업체들로 구성된 협력조직이 일반건설업체의 임무를 수행하는 협력조직제도와 같은 전자상거래제도, 현장중심 조달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들의 공동으로 자재를 조달하는 공동자재조달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제3분과는 자유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측에서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실장과 심규범 연구위원이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다단계하도급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2단계 이상의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하도급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가치와 산업 또는 국가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가치를 연계시켜야 한다. 전자는 기업차원의 수



주가가능성 또는 시고능력 평가이고, 후자는 산업차원의 견고한 생산물 공급과 성실업체 및 유능한 근로자의 육성을 통한 생산기반의 확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를 연계하는 방안은 개별기업의 직접생산을 촉진하는 것이다.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기 위해 건교부는 2007년 7월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일본측에서는 마츠우라 상무이사가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의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순조롭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재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1974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진입하고 2007년 문제라 불리는 이들의 대규모 퇴직에 직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이점으로는 인건비의 감소효과를 들 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험 기반 지식의 이전과 현장 관리능력 및 자격 인력의 감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건설산업에서의 기술이전과 세대 간 교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장인제도가 제안되었다. 건설장인제도는 국토교통성에서

뛰어난 건설기술을 가진 현장 기능인에게 건설장인을 부여하는 제도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 자긍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숙련 기능공을 감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사점

일본은 건설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DB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상생협력방안은 이런 면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실질적인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건설산업DB 및 건설CALS와 같은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성세대의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이전하는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와 같은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세대 간 기술이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건설장인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통일 이후 구동독의 도시개발과 시사점에 관한 한·독 국제워크숍

The Experience of Urban Development in the former GD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일시 : 2006. 11. 2, 10:00~16:00 ■ 장소 :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 참석자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김상빈(서울대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영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준(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칼-페터 쉐(독일연방건설청 유럽연구실장)

■ 발표내용

1. 유럽과 독일의 도시개발 동향: 독일과 유럽의 도시개발 경험을 중심으로
 - Schoen, Karl Peter(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BBR)
2. 구동독의 도시개발과 정책적 시사점
 - 이상준(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개최목적

통일 이후 독일의 구동독 도시개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통일 이후 구서독으로부터 구동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재정 이전의 상당부분이 인프라개발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구동독의 인프라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주택의 규모와 설비가 크게 개선되었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개선되었다. 이것은 도심과 주변지역에 있는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재원을

분담하여 노후 주택의 개보수와 기반시설의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구동독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연방정부, 주정부의 정책들은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인구감소를 고려한 보다 객관적인 정책수립, 부문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인 전략의 부재와 같은 정책적 실수도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공적 자금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구동독에 대한 도시정책의 성과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점

우리는 구동독의 사례에서 통일 이후 예견되었던 구동독의 인구감소나 도시축소에 소극적이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정책적 실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구동독의 사례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는 북한의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구동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조달하였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원조달이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 ‘토지개발관리정책’ 과정

■ 일시 : 2006. 9. 10~9. 22 ■ 장소 :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매년 국제연수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 및 정책사례를 공유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이집트 정부관리 15명을 초청하여 실시한 ‘토지개발관리정책’ 연수와,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국토·지역개발 전략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후원으로 실시되는 개도국 중견관리 초청연수교육이 있었다.

■ 참석자

Fahima Mohamed Saad, EL SHAHED(General Director & Coordinator for NUO/ General Organization for Physical Planning)
 Mahmoud Mohamed Abu, EL SAIED RAMADAN (General Director/ Gahrbia Housing Directorate)
 Hemdan Abd El Rahman, DABASH(General Director/ General Organization for Physical Planning)
 Farghaly Mahmoud, OMAR(Department Director & Physical Planning/Assuit Governorate)
 Iman Zakaria, HESSEIN(General Manager/ Mortgage Finance Authority)
 Khaled Farouk, EL GANDY(Planner/ General Organization for Physical Planning)
 Ali Abdel Rahman, ALLAM (Physical Planning Engineer/ General Organization for Physical Planning)
 Hadia Gad, MASOUD(Planner/ General Organization for Physical Planning)
 Mariana Hany, HANNA(Physical Planning

Engineer/ General Organization for Physical Planning)
 Passant Mahmoud, HAMZA(Junior Architecture/ General Organization for Physical Planning)
 Eman Shawky, MAHROS(Junior Economic Researcher/ General Organization for Physical Planning)
 Suzan Hassan, AHMED(SoftwareEngineer/ General Organization for Physical Planning)
 Mohamed Abdel Ghany, RAMADAN (Team Leader/ The Cabinet Information Support Center)
 Omneya Amin, ISKANDER(Project Manager/ Ministry of State for Administrative Development)
 Khaled Hafez, AL MAHDAWY(GIS Specialist/ Central Agency for Public Mobilization and Statistics)

■ 주요 내용

이집트와 공동으로 수행한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 감시능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연구원은 2006년



2. 국제연수교육

국토연구원은 매년 국제연수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 및 정책사례를 공유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이집트 정부관리 15명을 초청하여 실시한 ‘토지개발관리정책’ 연수와,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국토·지역개발 전략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후원으로 실시되는 ‘개도국 중견관리 초청연수교육’이 있었다.

9월 이집트의 연구사업에 참여한 정부관리 15명을 초청, ‘토지개발관리정책’ 제하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의 토지 및 국토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교육함으로써, 이집트가 국토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이 공동 프로젝트 이집트 측 대표인 파히마 박사를 비롯, 국토계획청, 중앙 정부, 시범 사업 대상지인 아쉬트 지방 정부 소속 총 15명의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의 국토정책과 토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총 6개의 전문 강의를 들었으며, 강의에 이어 한국의 대표적 신도시 사례지인 분당과 송도신도시를 견학하고, 토지관리 신기술인 GIS기법의 토지행정에의 활용 현황을 배우

기 위해 전주시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집트 관리들의 한국 방문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주한옥마을 방문과 전통문화 체험, 선암사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연수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와 광양제철 등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시설을 방문,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성장동력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가졌다.

총 13일간 실시된 ‘토지개발관리정책’ 연수는 이집트의 효율적인 국토 및 토지개발 노력을 지원하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이 공동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개발관리’ 과정

■ 일시 : 2006. 5. 20~6. 3 ■ 장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Waleed Khaled Mustafa Alabdali(Architect, Architectural Dep., National Center for Engineering Consultancy, M.O.C.H)
Nazar, Kh. Mansoor(Architectural Eng., Studies & Housing Planning Dep., Commission for Housing, M.O.C.H)
Ali- A- Abood(Asst. Director General, Planning Office, M.O.C.H)
Abdul Majeed. S. Shaban(Head of Teaching Affairs, Teaching Dep., Baghdad Police College, Ministry of Interior)
Ala'a. H. Ali(Brigadier Eng., Planning Office,

Ministry of Interior)

Mr. Muhamed- R- Sltan(Head of Appointment Branch, Ministry of Interior)
Laith. E. Khadher. Al. Yass(Manager of Wassit Physical Planning, M.O.M.P.W.)
Meyson. Abdul. K. Jalil(Head of Northern Physical Planning Dep., General Directorate of Physical Planning, M.O.M.P.W.)
Jawad. K. Mahmood Alamery(Sivil Eng., Manger of Umqaser Moncibility, M.O.M.P.W.)
Abdal Hussain. N. Khamat(Asst. General Manager, Directorate of Design, Baghdad Mayoralty)

Hussain. A. Hussain(Asst. General Manager, Directorate of Design, Baghdad Mayoralty)
Mr. Abbas. J. Hussin(Asst. General Manager, Al Sadder City, Baghdad Mayoralty)
Aieda Ismail Obaid(Senior Eng., Construction, Housing & Services Dep., Ministry of Planning & Development Cooperation)
Mazin Dh. Nouri(Eng. Construction, Housing & Services Dep., Ministry of Planning & Development Cooperation)
Mohamed. Z. Abdul Wahab(Eng. Regional Planning & Environmental Affairs, Ministry of Planning & Development Cooperation)

■ 주요 내용

이라크의 전후 복구 사업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도시개발관리’ 과정은, 한국의 국토 및 도시 개발 경험과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교육함으로써, 이라크의 경제 발전과 지역 및 도시 개발 정책 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동 과정에는 국토 계획,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계획 등 다양한 국토 개발 분야 소속 이라크 중앙 정부 관리 및 전문가 15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 한국의 국토 정책 등의 전문 강의를 통해, 지난 반 세기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 성장 및 국토 개발 현황을 소개받았으며, 도시 교통 체계, 주거 복지, 저소득층 주택 공급, 도시 및 공간 제도 등의 강의를 통해 도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배울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개별 전문 강의에 따른 현장 견학을 통해 한국의 도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서울시교통관리센터 방문, 서울시의 교통 관리 체계, 방법 및 기술을 배우고, 용인신갈새천년주거단지 방문하여, 한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지를 둘러보았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박물관에서는 개발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살필 수 있었으며,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방문하여, 한국의 고속도로 관리 체계를 배우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수 참가자들은, 연수 과정 중 3일간, 포항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시설을 견학하고, 한국의 대표적 역사 문화 도시 경주를 방문하였다. 문화 체험을 겸한 동 산업시찰 기간 중 이들은, 한국의 대표적 성장 동력을 이해하고, 한국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더 넓힐 수 있었다. 총 15일간 실시된 ‘도시개발관리’ 과정은 이라크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전후 복구 사업을 지원하고, 아울러, 한국과 이라크의 우호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과정

■ 일시 : 2006. 8. 17~9. 1 ■ 장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Sgarciu Daniela Iulia(Public Manager, Department of Deconcentrated Public Services,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Interior)
Kholoud Khlaif Suhiemat(Communicating Engineer _ Airchitect, Building Depart., Ministry of Publicworks and Housing)
So Vanna(Deputy Director of Land Registration's Department,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Ngin Chanthoeun(Deputy Chief of Land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Office,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Zaw Zaw Aye(Staff Officer,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ivision, Department of Human & Housing Development)
Mr. A.K.M. Sharifuzzaman(Director, Urban Development Department, Ministry of Housing & Public Works)
Marcelo Javier Pazos(Trade Expert, Ecuator-US FTA Taskforce)
Mahmoud Babaei Lashkajani(Vice Director, City Planning, Ministry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Robes Pierre(Professor, Ministry of Planning and Overseas Cooperation)
Roni Rivera(Officer of Planning, Fina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Ministry of Housing and Construction)
ChunHua, Guan(Project Officer, Guangdong Provincial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Fisseha Zibelo Gebrekidan(Head of Axum Tourism and Culture Office, Tigray Tourism and Culture Commision)
Eshetu Mulugeta Gete(Dean of Awassa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ollege)
Lkhagvadorj Zayat(Officer of Department of Investment & Economic Cooperation, Ministry of Construction & Urban Development)
Ma, Aurora Cueno Corpuz(Regional Planning Officer, Dept. of Interior & Local Government)
Mr. Claude Marcel KYELEM(Director of Urban Planning, Ministry of Urbanism and Habitat, General Direction of Urbanism)
Rabi Shah(Division Chief, Kavre Division Office, Department of Urban Development & Building Construction)

■ 주요 내용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과정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도시 및 지역 개발·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국토 개발 전략을 수립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8월 17일부터 16일간 실시되었다.

루마니아, 요르단,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이란, 아이티, 페루, 중국, 에티오피아, 몽골, 필리핀, 부르키나파소, 네팔 등 전 세계 15개국 국토 개발 분야 중견 공무원 총 17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동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한국의 국토·토지·SOC 정책, 도시교통체계 등 총 7개의 전문 강의와, 관련 기관 견학, 3일 일정의 산업시찰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수 참가자들은, 전문 강의에 이어, 한국의 신도시 사례지인 분당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홍보관을 둘러보았으며, 서울시교통관리센터에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와 관리 및 기술을 직접 체험하였다. 또한 이들은 전주시청을 방문하여, GIS 기법의 도시 계획에의 활용 사례를 들었다.

산업시찰 기간 동안 연수 참가자들은 광양제철과 전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전통과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는 한옥마을 견학 및 한지 공예를 체험하고, 광양 선암사를 방문, 한국 고래의 불교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지기



도 하였다. 이로써,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었다.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과정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토개발 관리, 주택, 도시교통 등에 대한 선진 기술과 전략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교류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도시교통망 기획’ 과정

■ 일시 : 2006. 11. 11~11. 19 ■ 장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Peov Meng Hai(Deputy Chief of Public Works Office,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Phouphasonesay Phetsinorath(Head of Transport Administration, MCTPC)
Le Dinh Long(Vice Director, Hai Duong Dpt. of

Comm. and Transport)
Trinh Quynh Ngoc(Expert, Dpt.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Nam Dinh Province)
Ghoefron Koerniawan(Land Transportation Officer, Ministry of Comm.)
Novan Hidayat(Lecturer on Transport Planning,

and Transportation Officer, Ministry of Transport)
 Sri Achyati(Head of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Ministry of Home Affairs)
 Rimal Ravinesh Karen(Acting Director, Lautoka City Council)
 Ryan Subash Autar(Graduate Trainee, Land Transport Authority)
 Saikhanbayar Chuluun(Director of Department, Nar-Od Trade)
 Sugarbat Galsan(Officer of Road and Transport, Mayor's Office of the Capital Ulaanbaatar)
 Stella Tukulya(Assistant Secretary, Department of Transport)
 Maleva Hitolo(Planner, Department of Transport)

■ 주요 내용

11월에 실시된 한국-싱가포르 공동 연수 과정 '도시교통망 기획' 과정은, 아시아 선발 개도국인 한국과 싱가포르가, 도시교통 계획기법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 후발 개도국에 전수, 이들 국가에서의 도시 교통 문제 해결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캄보디아, 피지, 라오스, 몽고,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총 7개국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동 연수과정에서는,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제반 도시 교통 계획 기법, 최근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한국에서 추진되었던 도시 교통 개발 경험과 정책 사례가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연수 기간 동안 한국의 대도시 대중교통 정책, 한국의 ITS 추진 전략과 과제, 도시 계획과 교통 정책, SOC정책, 민자유치제도와 교통 분야 민간투자 등 다양한 도시 교통 계획 관련 총 6개의 전문 강의가 이루어졌다.



어졌다.

연수 참가자들은 서울시교통관리센터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방문하여, 대도시 대중교통체계 관리 및 기술, 전국 고속도로 관리 현황 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전문 강의 외에도 참가자들은 연수를 통하여, 참가 국가들이 최근 겪고 있는 도시 교통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토론을 통하여 함께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

'도시교통망 기획' 과정은 참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도시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제학술교류

■ '미국 워싱턴 대학-국토연구원' MOU 체결

미국 워싱턴대학교(시애틀 소재) 도시설계 및 계획학과와 국토연구원은 두 기관 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연구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2006년 4월 1일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교류협정을 통한 협력분야는 두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 공동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관련 연구 및 학술정보 교류, 인턴십 프로그램, 연구진 교류 및 방문교수 프로그램, 두 기관의 동의에 의한 기타 프로그램 및 교류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 일본 환경성 공무원 내원

3월 8일 일본 총합환경정책국 전략환경평가팀장을 비롯한 환경성 공무원 일행이 한국의 전략환경평가 관련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원을 방문하였다. 동 대표단은 한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 평가기법, 적용경험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 캄보디아 GIS 담당공무원 내원

3월 27일 캄보디아 토지도시건설부에서 GIS 관계 고위 공무원이 본원 GIS연구센터를 방문하였다. 림보안 지적및지리정보국장을 비롯한 3명은 우리나라의 국가GIS정책과 토지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기술적 지원을 희망했다.

■ 베트남 건설부장관 일행 내원

8월 24일 베트남 건설부장관 일행이 우리나라의 국토정책과 국토연구현황을 살펴보고, 국토정책 수립 및 연구분야에서의 한-베트남 간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원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정책과 본원의 연구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으며, 베트남 건설부장관 일행과 베트남 정부의 관심



분야에 관하여 중점 토론하였다. 베트남 건설부장관은 본원의 연구와 국가정책 수립과의 관계, 연구추진체계에 관하여 특히 관심을 보였으며, 국토정책 및 국토연구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베트남 국토분야 관련 실무진을 2006년 9월중에 본원에 파견키로 하였다.

■ 베트남 도시 및 지역계획 연구소 실무진 내원

9월 19일, 베트남 건설부장관의 방문 시 약속되었던 대로 베트남 건설부 산하 국립 도시 및 지역계획 연구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진 13인이 본원을 방문하였다. 대표단 방문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NGIS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으며, 본원의 연구진과 베트남 실무진은 우리나라의 국토정책과 국토연구 각 분야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또한, 본원과 이미 2002년 자매결연이 맺어진 국립



도시 및 지역계획 연구소는 향후에도 국토연구 전 분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 필리핀 타귀그시 대표단 내원

12월 1일 필리핀의 타귀그시에서 한국의 급속한 도시 성장과정 속에서 주택과 토지 공급에 대한 경험을 참관

하고자 시장 및 시의장 등 대표단 15명이 본원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개발 사례 및 주택토지정책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으며, 참석자들과의 토의시간도 가졌다. 본원 방문 후 타귀그시 대표단은 과천시청을 방문하여 과천시의 도시개발경험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질의하기도 하였다.

4. 연구관련 주요 행사

국토연구원은 연구성과의 질적인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 지난 2006년에도 15차에 걸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를 비롯하여 총 39건의 워크숍, 13건의 세미나, 20여 건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더욱 완결성 높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1) 워크숍

■ 부동산워크숍

- 개최일 : 1. 17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부동산시장 정책토의, 대응과제 검토

■ 제주광역시도시계획 수립 연구 영역 3차 워크숍

- 개최일 : 2. 7
- 개최장소 : 제주도청
- 주요내용 : 부문별 계획(제주발전연구원 부문) 기본현황 및 방향 토의

■ ITS 표준화 중장기 발전을 위한 워크숍

- 개최일 : 2. 8

- 개최장소 : 보광워닉스파크 세미나룸
- 주요내용 : ITS 표준전담기관 역할강화 및 발전방안 등

■ 국가GIS 관계부처 워크숍

- 개최일 : 2. 16~2. 17
- 개최장소 : 대한주택공사연수원
- 주요내용 : 2006년도 국가GIS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 국가균형발전지수 개발 및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 워크숍

- 개최일 : 2. 17~2. 18
- 개최장소 : 평창 보광워닉스파크
- 주요내용 : 지역투자 파급효과측정 모형 개발방법 등 관련 원내 전담반, 기획예산처 담당부서 공무원 공동 워크숍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관련 연구진 워크숍

- 개최일 : 2. 22
- 개최장소 : 천안 상록리조트
- 주요내용 : 광역계획권 현장확인 결과 검토, 계획지표 및 공간구조 기본구상안 등 검토

■ 고도의 이해와 기초조사 방향설정 워크숍

- 개최일 : 3. 2~3. 3
- 개최장소 :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수원
- 주요내용 : 고도의 이해와 개념, 고도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

■ 제주광역시도시계획 수립 연구 4차 워크숍

- 개최일 : 3. 7~3. 8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각 부문별 계획발제 및 토론
국토연구원 부문: 생활권 및 인구, 토지이용, 교통물류, 산업개발
제주발전연구원 부문: 공공시설, 정보통신, 환경보전, 경관, 관광, 사회개발, 방재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워크숍

- 개최일 : 1차(4. 3~4. 5), 2차(5. 22~5. 23), 3차(5. 30), 4차(8. 9~8. 11)
- 개최장소 : 1차(수원 라비돌리조트), 2차(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 3차(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 4차(7층 회의실)
- 주요내용 : 1차(기본구상과 각 부문별 계획 간의 내용조정 협의)
2차(공청회 결과반영, 향후 연구수행방안)
3차(개발계획수립방향 및 연구수행방안 협의)
4차(기본계획 최종보고서 관련 협의)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구축사업 광역시·도관계자 워크숍

- 개최일 : 4. 11
- 개최장소 :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 주요내용 : KOPSS 추진계획 및 의견수렴

■ 행정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워크숍

- 개최일 : 5. 25
- 개최장소 : 농협연수원
- 주요내용 : 난개발대책 및 지원사업 관련 쟁점사항 토론

■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워크숍

- 개최일 : 6. 1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공동연구진 워크숍

- 개최일 : 6. 2
- 개최장소 : 산업연구원
- 주요내용 : 분산·분권정책의 지방화 진단에 대한 토론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혁신클러스터부문) 워크숍

- 개최일 : 6. 5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혁신클러스터정책의 지방화 진단 진행사항 점검

■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 워크숍

- 개최일 : 6. 8~6. 9
- 개최장소 : 전북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전주광역시권의 공간구조 구상 및 광역도시계획시설 배치 등

■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I) 워크숍

- 개최일 : 6. 13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도시체계 및 국토축

에 미친 영향 및 분석방법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전면 개정 워크숍

- 개최일 : 7. 7~7. 14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실무진 워크숍

- 개최일 : 8. 3~8. 4
- 개최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주요내용 : 개발계획, 연구진행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협의

■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국제워크숍

- 개최일 : 8. 24~8. 25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자원부담 방안 연구 워크숍

- 개최일 : 8. 23
- 개최장소 : 교육문화회관
- 주요내용 : 광역교통 유발 원단위 분석내용 검토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14차 워크숍

- 개최일 : 8. 31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최종보고서 작성, 환경성평가(추가) 결과 및 공청회 개최계획 등 논의

■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 워크숍

- 개최일 : 9. 13
- 개최장소 :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
- 주요내용 : 고속철도 주변지역 개발구상에 대한 토의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사업 워크숍

- 개최일 : 9. 15
- 개최장소 : 대한주택공사
- 주요내용 : 중간보고 및 관련 기관 업무협의회

■ 한·중 토지정책 연구 공동워크숍

- 개최일 : 9. 26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거시경제정책과 토지시장·토지정책의 역할

■ 동아시아 도시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워크숍

- 개최일 : 10. 17~10. 19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의 합동 국제워크숍, 동아시아 국가 도시주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난개발의 영향, 이에 대한 대응전략과 정책수단에 대해 발표 및 토론

■ 제15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 개최일 : 10. 18~10. 20
- 개최장소 : 평창 보광휘닉스파크
- 주요내용 : 건설산업의 상생협력방안 등 양국 건설경제 공통관심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합동워크숍

- 개최일 : 10. 20
- 개최장소 : 안양 유스호스텔
- 주요내용 : 협동기관의 연구 내용 및 성과물 교류 및 향후 최종보고서 작성에 대한 토의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

- 개최일 : 10. 25~10. 26
- 개최장소 : 제주시청

- 주요내용 : 천안-아산, 마산-창원, 제주-서귀포, 부산-김해 등 광역BIS 사업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서 내용 확정

■ 동북아 교통망 구축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워크숍

- 개최일 : 10. 26
- 개최장소 : 중국 ISPRE
- 주요내용 : 베세토 회랑에서의 도시 간 네트워크와 접근성 논의

■ 통일 이후 구동독의 도시개발과 시사점에 대한 한·독국제워크숍

- 개최일 : 11. 2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통일독일의 도시개발정책 성과와 남북간에 주는 시사점 논의

■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II) 워크숍

- 개최일 : 11. 4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기관별 지능형 도시방재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발표 및 토론

■ 고도지역지구 지정을 위한 워크숍

- 개최일 : 11. 21~11. 22
- 개최장소 : 대전 베스트웨스턴레전드호텔
- 주요내용 : 고도지역 지구지정(안)에 대한 토론

■ GIS전문인력 양성사업 워크숍

- 개최일 : 11. 24~11. 25
- 개최장소 : 제주대학교 연수원
- 주요내용 : GIS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

■ 2006년 주거실태조사 관련 워크숍

- 개최일 : 11. 30~12. 1

- 개최장소 : 제주도 동양썬라이즈리조트
- 주요내용 : 주거실태조사 관련 업무진행 및 실사과정의 문제점, 향후 추진과제 등에 관한 토론 및 업무협의

■ 전국 무역향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워크숍

- 개최일 : 11. 30~12. 1
- 개최장소 : 양평 힐하우스
- 주요내용 : 용역 최종보고서 작성 및 취합을 위한 토론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15차 워크숍

- 개최일 : 12. 19~12. 20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최종보고서 작성, 환경성평가(추가) 결과 및 공청회 개최계획 등 논의

■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 개편연구 전문가 워크숍

- 개최일 : 12. 21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용·체계개편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사업 워크숍

- 개최일 : 12. 22
- 개최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주요내용 : 최종보고서 시연회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회

2) 세미나

■ 빗물 등 대체수자원 전문가 세미나

- 개최일 : 1. 20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대체수자원의 이용·기술개발 실태 및 향후 전망

· 개최일 : 12. 22

- 개최장소 : 대전토지연구원
- 주요내용
오전-부산, 울산, 대구권 공청회
오후-광주권, 대전권 공청회

■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 공청회

- 개최일 : 12. 22
- 개최장소 : 강당

4) 토론회

■ 한동해권 개발계획 검토연구 현지토론회

- 개최일 : 2. 9, 2. 16, 2. 17
- 개최장소 : 강원발전연구원, 경주시청, 울산시청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 토론회

- 개최일 : 2. 17
- 개최장소 : 3층 세미나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정책토론회

- 개최일 : 4. 12
- 개최장소 : 강당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토론회

- 개최일 : 6. 7
- 개최장소 : 코엑스
- 주요내용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경험·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발표 및 토론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도시미래상 및 건 설이념 선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개최일 : 7. 7
- 개최장소 : 코엑스

■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기준(안) 토론회

- 개최일 : 9. 19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계획기준(안) 설명 및 의견 수렴

5) 기타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 광역 도시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회

- 개최일 : 2. 3
- 개최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주요내용
광역도시계획 추진개요, 광역계획권 지정경과, 현황
및 여건, 계획의 목표와 전략 등 추진현황과 2006년
추진계획 브리핑

■ GIS KOREA 2006

- 개최일 : 5. 17~5. 19
- 개최장소 : 코엑스 대서양홀
- 주요내용 : GIS가 만들어가는 유비쿼터스 국토

■ 항만배후단지 국제심포지엄

- 개최일 : 6. 30
- 개최장소 : 무역협회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개발방향, 국내외사례, 수요, 파급효과,
마케팅전략

■ 한강하구관리를 위한 3차 지역포럼

- 개최일 : 11. 9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논의

5. 연구혁신활동

■ 혁신성과에 대한 기관표창 수여 등

국토연구원은 2005년도 혁신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은 결과, 총 6단계 중 4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는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높은 등급으로,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년 연속 상위 20%의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고객 지향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과제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연구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과제 관리를 해 온 결과다.

■ 국토봉사대 활동

2005년 12월 국토봉사대가 발족되어 2006년도 5월부터 매월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봉사하였으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13가구에 성금을 전달하고, 알로이시오 초등학교에 냉장고 등 비품을 전달하였다. 연말에는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개최하여 봉사기금을 모금하여 안양노인전문요양원에 기증하였다.

■ 1사1촌 협약체결

6월에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와 '1사1촌' 협약을 맺고 3회에 걸쳐 2,300여만 원 상당의 쌀, 토마토, 옥수수 등을 직거래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도창리 사무소에 컴퓨터 및 프린터, 팩스 등 업무자동화 기기를 기증하였다.



■ 연구분야 전문성 확보

2006년에는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책임자를 공모하여, 5개 과제에 신진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완결성 높은 최종성과물의 발간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내부 전문가를 과제별 혁신스폰서(자문연구진, Advisor)로 배정하여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과제완수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한편, 연구업무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장급 이상에 대해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시범도입 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 부서장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105회의 연구결과 발표회

일반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총 105회의 공청회, 공개 세미나 또는 정책토론회 등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정책의 접근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원의 기본적인 연구결과는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협력연구를 강화한 결과, 외국 전문가가 28개의 협동연구에 참여하였고, 165개 과제(수행기준)에 256인의 외부전문가 또는 기관이 참여하여 연구의 전문성 제고 및 연구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다.



■ 연구실적 홍보

국토연구원에서는 주요한 국토정책을 알기 쉽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 '국토정책Brief'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는

6. 세계도시정보(UBIN) 구축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구과제의 성과를 요약하기도 하고, 현안과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국토정책의 트렌드를 전망하고, 홍보하기 위해 월간지 '국토'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위한 전문학술지 '국토연구'를 계간으로 간행하고 있다. '국토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 국토 및 지역, 도시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로 잘 알려져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전문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우수논문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최우수 논문 상금을 200만 원으로 올려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는 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최신의 국토 및 지역, 도시 정보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매주 웹진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 학습모임과 지식공유

국토연구원에는 18개의 자발적인 연구소모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모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문가 특강을 38회 개최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특히 지역정책연구회는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산학관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모



시스템)을 운영하여 전문정보의 공유를 실천하고 연구의 전문성 제고 및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KMS는 지식마일리지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우수한 실적을 가진 상위 20인에 대해 연구장려금을 지급하였다.

■ 연구윤리강령 제정·공표

2006년도에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여, 연구내용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연구결과를 연구책임자가 책임을 지며, 연구표절을 근절하도록 12월 1일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 대외협력 강화

국토연구원은 42개의 국내·외 대학, 연구소 등과 연구협정을 맺고 있다. 2006년에는 위싱턴 대학교 신규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일본 츠크바 대학교 협정을 갱신하였다. 또한 부산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공주대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과 신규 연구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에는 중국, 이라크,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대표단이 본원을 방문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택지개발, GIS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였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KOICA의 위탁을 받아 국토 및 도시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였다.



세계도시정보(UBIN : UrBan Information Network)는 세계 각국의 선진도시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웹서비스다.

이 사이트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문서가 웹문서(HTML)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관련전문가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흥미롭고 기초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 사이트는 크게 '세계도시정보', '해외도시만들기 사례', '세계도시통계', '주요링크안내' 등 4개의 카테고리 구성되어 있다.

세계도시정보는 43개국 100대 도시에 대해 국제금융·환경 및 생태도시·역사 및 문화도시·산업 및 물류도시·교육 및 연구도시·관광도시·신도시 등 7개 주제로 분류하여 각 도시의 형성과정 및 경계를 포함하



여 도시의 기초정보 및 분야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 도시만들기 사례는 과학단지·관광단지·도시개발 및 재개발 사례와 지역활성화사업 등 세계의 모범적인 도시만들기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세계도시통계는 세계 주요 국가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초도시통계뿐만 아니라 세계도시의 환경과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세계도시의 물가수준과 도시별 삶의 질 등의 주제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링크안내는 세계 각국의 도시통계 및 도시만들기 관련사이트, 세계주요도시 웹사이트, 국가별 통계청, 주요도시 및 지방정부협의회, 세계과학단지 등 약 1천여 개의 사이트를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세계도시정보(UBIN)는 해외 도시정보뿐만 아니라 국내의 도시 및 지역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수집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임으로서, 국토연구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2006년도 건설교통부 우수연구모임으로 선정되었고, 연구성과물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전문지식의 공유를 위해 원내에 KMS(지식관리

7. 21세기 국토포럼

21세기 국토포럼은 전국 국토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교환, 국토정책관련 연구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해 1,200여 명의 회원과 약 5,000명의 국토계획 관련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 전문가 '인력 풀(pool)'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국토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 토론하는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만들기'를 주제로 '21세기 국토포럼 워크숍' (6. 29~6. 30) 개최를 통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주민참여 속의 마을·도시 만들기, 건강한 국토환경 만들기-Eco-city 중심,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해외사례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의를 하였다. 9월에 개최된 '지역간 공동 번영 전략에 관한 워크숍' (9. 21~9. 22)에서는 지역간 공동발전의 성공 메커니즘, 대구경북 공동발전 전략, 농촌지역의 변화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또, 각 지역의 정책추진 현황 및 주요 동향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격주간지 「지역뉴스」를 2006년 1월 4일(276호)~10월 18일(293호)까지 총 25호 발간되었다.

2006년도의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만들기 워크숍
 - 개최일 : 2006. 6. 29~6. 30
 - 개최장소 : 대구경북연구원
 - 주요내용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비전과 과제 (박양호 부원장)
 - 주민참여 속에 농촌·도시만들기 (이명규 광주대 교수)
 - 건강한 국토환경만들기(Eco-City 중심) (이재준 협성대 교수)



-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해외사례 소개 (이왕진 연구위원)
- 분과별 토론 및 지역현안과제 등 토의

- 지역간 공동 번영 전략에 관한 워크숍
 - 개최일 : 2006. 9. 21~9. 22
 - 개최장소 : 대구경북연구원
 - 주요내용
 - 지역간 공동발전의 성공 메커니즘과 정책과제 (정옥주 책임연구원)
 - 대구경북 공동발전 전략(대구경북 경제통합 구상을 중심으로) (서정해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경제통합 연구단장)
 - 농촌지역변화의 차별적 전개와 정책적 대응 과제 (김창현 연구위원)

8. 제5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국토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마련한 제도로써,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국토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우수논문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게재논문 43편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3편의 논문을 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선정된 3편의 논문이 모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호 우열을 가리지 못해 최우수상은 선정되지 않았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역모기지 선택 결정에 관한 연구: 민간 역모기지 이용자 특성분석」,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계획이론의 모색」,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의 확산-압축패턴 측정」 등 3편으로서 시상식은 2007년 2월 23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연구장려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 우수논문 명단

구 분	연구자	논문제목
최우수상	해당없음	
우수상	김선주(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유선종(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모기지 선택 결정에 관한 연구: 민간 역모기지 이용자 특성분석
	김홍순(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대안적 계획이론의 모색
	임은선(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종열(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 연구위원) 이희연(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의 확산-압축패턴 측정

9. 제11회 전국 초등학교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우리 국토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가 제11회를 맞이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4개 초등학교, 2,463편의 작품이 응모하여,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한 결과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4편, 동상 50편, 우수상 300편이 개인상을 받았으며 지도교사상 3편, 단체상 3편 등도 수여되었다.



- 주최: 국토연구원, 어린이동아
- 협찬: 한국토지공사, SK 씨앤씨
- 후원: 교육인적자원부, 국토지리학회
- 기간: 2006. 8. 28~10. 12
- 시상식: 2006. 10. 30. 국토연구원 강당

■ 개인상(대상, 금상, 은상) 명단

구분	지역	학교	학년	성명	작품명	지도교사
대상	경기군포	군포능내	3-4	박지원	자연들의 회의	
금상	경남마산	마산삼계	1-2	최민동	똥장군 지는 우리 아빠	
	인천	인천갑룡	5-2	조현상	신비의 길 할머니댁 가는길	이중범
은상	서울	서울계성	3-진리	김동휘	우리 사랑이 숨쉬는 곳	송창범
	전남광양	광양제철	2-3	김민혁	물이 흐르는 도시	
	충북단양	단양어상천	6-1	김남형	우리 아버지는 초록 외계인	
	강원원주	원주대봉	6-5	김화정	늘 해야하는 아침세수 저녁세수	김정자

■ 단체상

구분	지역	학교
대상	경기	용인신일
금상	전남	광양제철
은상	전남	광양제철남

■ 지도교사상

구분	지역	학교	성명
대상	전남	광양제철	박행신 교사
금상	전남	광양제철남	조숙현 교사
은상	경북	포항제철동	김정호 교사

10. 기획단행본 발간

■ KRIHS 번역총서 1, 2, 3

- 도시계획의 신조류
-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사례편)
-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전략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의 실행에 참고할 만한 시리즈물이다. '도시계획의 신조류'는 미국과 유럽 도시를 돌아보며 21세기 도시계획의 새로운 조류를 자세히 설명한 책.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사례편), (전략편)'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도시 전반의 사회개혁을 꾀하는 운동인 일본 마치즈쿠리 사례 및 이론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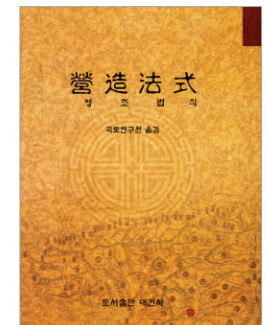
신국판 / 총서 1(198p), 총서 2(278p), 총서 3(278p) / 반양장



■ 영조법식

영조법식은 궁전(宮殿), 관서(官署), 묘단(廟壇), 성벽(城壁) 등 관영 건축공사의 경제적 통제를 목적으로 발간한 설계요람서다. 이 책이 처음 발간된 것은 북송(北宋)시대인 12세기지만 이책의 모든 건축관련 자료가 집대성되어 있으며, 남송 이후 요금(療金)의 탑사(塔寺)나 원명(元明)의 고궁조법(古宮造法) 등이 모두 이 책에 기초하고 있어 가히 중국건축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와 조선조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고건축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이 책은 김의원 현 대한건설진흥회장이 국토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국토와 관련된 고전번역계획의 일환으로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 천공개물(天工開物)에 이어 발간했던 역서로 이번에 재편집과 자료보완을 거쳐 다시 재발간하게 되었다.

국배판 / 486p / 양장



IV 정기간행물 목차

1. 국토(291호~302호)	134
2. 국토연구(48권~51권)	144
3. 건설경제(47권~50권)	146
4. 국토정책Brief(98호~120호)	148

1. 국토(291호~302호)

■ 291호(2006. 1)

국토시론 _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하여	최병선
짧은 글 긴 생각 _ 완장을 빼앗긴 노인	김영태
특집 : 제4차 국토통합계획 수정계획	
1. 개방과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국토구조의 형성	서태성
2.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과 자립적 지역발전	이동우
3. 동북아시아의 국토경영과 남북협력	류재영
4. 네트워크형 교통·정보 인프라의 확충	정일호
5.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박재길, 손경환, 정희남
6.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최영국, 김종원
용어풀이 89 _ 다핵연계형(7+1) 국토구조 외	윤영모
정책해설 _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김효정, 박준형
지역통신 _ 국제교류재단, 지자체 및 개소 외	
이슈와 사람 16 _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박세훈
세계의 도시 89 _ 이베로아메리카의 문화수도, 몬테비데오(Monteideo)	김영철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노먼 크룸홀츠(Norman Krumholz):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형평계획	이수기
국토논단 _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설치가 정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김영봉
해외리포트	
1. 볼티모어(Baltimore)항구의 수변공간 재개발	양도식
2. 프랑스의 주거계층분화와 공공정책에 관한 고찰 -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신성해
KRIHS FOCUS	
1.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민숙주
2. 주거서비스 수준과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	박천규, 노희순
3. 인프라 21 세미나 - 우리나라 POI 구축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오성호
KRIHS 보고서	
1.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장영희
2.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정의철
간추린 소식 _ 11월 중 지가는 전월대비 0.40% 상승, 거래량은 2.2% 감소 외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목록	
알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71 _ 북악산(北岳山) 성곽과 주변 문화재	박영순

■ 292호(2006. 2)

국토시론 _ 토지의 비합리적 규제를 규제해야 한다	권원용
짧은 글 긴 생각 _ 고향산천	정하득
특집 :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오기현
2.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작성방안	김행중
3.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의 조기 정착과제	서순탁
용어풀이 90 _ 토지이용규제 외	서관호
국토논단 _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과 전망	김영봉

해외리포트	
1. 해외의 u-City 구축프로젝트 추진동향	박상현
2.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정선영
지역통신 _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외	
이슈와 사람 17 _ “21세기 새로운 도시의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권영상
세계의 도시 90 _ 러시아 극동의 관문, 블라디보스토크(Vladibostok)	성원용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시바사키 료스케(柴崎亮介):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공간정보사회	서용철
기고 _ 수도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경옥
KRIHS FOCUS _ 북한포럼 정기세미나 - 북한의 자료·통계수집 및 관리	견용수, 이성수
KRIHS 보고서	
1.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김용한
2.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김동엽
간추린 소식 _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외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목록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72 _ 아차산성(阿且山城)	박영순

■ 293호(2006. 3)

국토시론 _ 대도시권 교통정책, 해법은 무엇인가	김광식
짧은 글 긴 생각 _ 불멸의 백남준	이진숙
특집 : 대도시권 교통정책의 발전과제	
1. 대도시권 교통체계의 현황과 정비방향	노정현
2. 광역교통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	조남건
3. 대도시권의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연계 -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김시곤
4. 서울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체계 정립	조성길
5. 대도시의 교통수요관리 - 런던시 혼잡통행료 사례	이승재, 이병욱
용어풀이 91 _ 광역교통개선대책 외	정진규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 _ 인과방법론: 인과관계도만 잘 그리면 연구의 절반은 성공	김영표
지역통신 _ 충남 신도청도시, 홍성·예산 선정 외	
이슈와 사람 18 _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이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해결방안입니다” - 음성직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정진규
세계의 도시 91 _ 바둑판 모양의 계획도시, 테헤란(Teheran)	신양섭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마크 튜더존스(Mark Tewdwr-Jones): 목표와 이상을 가진 도시계획	신혜란
서평 _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변창흠
해외리포트 _ 미국의 녹색도시 개발과 시사점	강창덕
정책해설 _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남상현
KRIHS FOCUS	
1. 인프라 21 세미나 - 미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국제 경쟁력에미치는 영향	정선영
2.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 - 사람, 환경, 정보기술이 하나가 되는 u-행복도시 구현방안	이미숙
3. 빗물 등 대체수자원 전문가 세미나 - 대체수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	이승복

138 KRIHS	정기간행물 목차				1. 국토	139 KRIHS
6.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의 발전방향			문정호	지역통신 _ 남해군 지족마을 어촌복합생활공간 권역사업 대상지로 확정 외		
용어풀이 94 _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외			김형진	서평 _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영국
정책해설 _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주요내용			윤진환	기고 _ 숲으로 만든 녹색댐, 맑은 물이 흐른다 - 녹색댐 기능제고를 위한 숲가꾸기의 필요성		구길본
이슈와 사람 21 _ “모든 국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홍준 문화재청장			채미옥	국토연구원 발간 단행본 안내		
세계의 도시 94 _ 지중해의 보석,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박정경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5 _ 정책네트워크분석: 정책행위자 간 동적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정책현상 규명하기		홍성만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전통마을의 문화경관 찾기 1 _ 전통마을의 자리잡기와 옛 문헌에서 본 삶의 이상향		신상섭
@-interview _ 로버트 타버너(Robert Tavernor): 타운스케이프에서 스카이스케이프로			김정후	KRIHS 보고서		
해외리포트				1.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조남건 외)		김광식
1. 2006년 독일 월드컵 교통대책			고용석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재고방안 연구(배순석 외)		박환용
2. 말뾰(Malmö)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알미르(Almere)의 청정도시 프로그램			김상조, 서덕수, 김근태	간추린 소식 _ 수도권 10개 도시권 중심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개편 외		
지역통신 _ 전남 서남해안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계획 추진 외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목록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4 _ SP조사설계 및 분석방법론: 가상의 상황에 대한 선호도 조사			김강수	독자와 함께		
KRIHS FOCUS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77 _ 비단강을 건너 온 공산성의 공북루(拱北樓)		박영순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안) 공청회			권영상			
2. 지역도시정책포럼 초청강연 - 토지문제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안용진			
3. 지역정책연구회 초청강연 - 통합과 연결로 만든 행복클러스터, 금산다락원			김지형			
알림						
KRIHS 보고서						
1. 홍수피해특성 분석 및 홍수피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박태선 외)			심재현	국토시론 _ 녹색 어메니티의 창출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김성훈
2. European Port-City Interface and Its Asian Application(Caesar Ducruet 외)			이상우	짧은 글 긴 생각 _ 아파트 살림살이		한상숙
간추린 소식 _ 3월까지 건축허가면적, 전년동기 대비 13.0% 증가 외				특집 : 국토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과제와 전략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목록				1. 국토어메니티의 개념과 정책과제		김선희
독자와 함께				2. 살고 싶은 도시와 어메니티		이재홍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76 _ 공주 공산성(公山城)			박영순	3. 지역혁신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향상		전성균
				4. 국토어메니티와 삶의 질 향상		엄영숙
				5. 국내외 어메니티 정책 및 계획사례		이재준
■ 297호(2006. 7)				용어풀이 96_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 외		이재원
국토시론 _ 국토의 삼각균형추와 혁신도시			박양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6 _ 확장비용편익분석: 환경가치의 시장가치화		김종원
짧은 글 긴 생각 _ 대~한연방국을 꿈꾸며			김영표	이슈와 사람 23 _ “각계의 소통을 통해 미래 한국사회의 희망을 제시하겠습니다”		
특집 : 혁신도시의 의의와 향후 추진과제				- 송하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선희
1. 혁신도시의 건설배경과 추진방향			김재규	세界的 도시 96 _ 문학이 재창조한 켈틱 타이거, 더블린(Dublin)		이영범
2. 혁신도시의 클러스터기능 확보방안			권영섭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3. 해외 혁신도시 유사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남기범	@-interview _ 매튜 카모나(Matthew Carmona): 도시공간과 삶의 질을 창조하는 도시디자인		양도식
4. 혁신도시 건설의 국가 및 지역발전 파급효과			이정록	1.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		김선웅
5. 혁신도시의 추진과제와 관련 주체별 역할			신동진	2. 우리나라 GIS기술의 해외진출 사례: 캄보디아 측량기준점 설치사업		사공호상
용어풀이 95_ 혁신환경(Innovative Milieux) 외			박경현	전통마을의 문화경관 찾기 2 _ 생태코드로 읽어보는 전통정주지의 환경설계 원칙		신상섭
KRIHS FOCUS				지역통신 _ 충남도, 신도청예정지 개발 본격 추진 외		
1.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국제세미나			김지형	기고 _ 가깝고도 먼, 평양에서의 5박 6일		김경옥
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승용	KRIHS FOCUS _ ‘21세기 국토포럼’ 워크숍 - 어디서나 살기좋은 국토만들기		전대운
이슈와 사람 22 _ “소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영표	KRIHS 보고서		
세계의 도시 95 _ 세계 평화와 정의의 도시, 헤이그(Den Haag)			문정호	1.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이왕건 외)		문 채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2.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박은관 외)		정일훈
@-interview _ 메이포 관(Mei-Po Kwan): 시간지리학 연구에 있어서 GIS 방법론			이상일	간추린 소식 _ 대전 1, 2산업단지 등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외		
해외리포트 _ 캐나다 혁신체계연구네트워크의 연구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장철순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목록		
				독자와 함께		

140 KRIHS

정기간행물 목차

1. 본

■ 299호(2006. 9)

국토시론 _ 국토발전정책의 새로운 모색, 스마트성장
짧은 글 긴 생각 _ 오지마을을 찾아서
특집 : 스마트성장 패러다임과 국토발전
1. 스마트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방향
2.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스마트성장
3. 스마트성장을 위한 도시교통 대안
4. 스마트성장과 시민참여
5. 미국의 스마트성장 출현배경과 운용실태
용어풀이 97 _ 스마트성장(Smart Growth) 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7 _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지역통신 _ 유비쿼터스 기술 적용한 2층 시티투어버스 운행시작 외
이슈와 사람 24 _ “일등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신중대 안양시장
세계의 도시 97 _ 유럽의 3대 항구도시, 앤트워프(Antwerp)
가던 길 멈추고
@-interview _ 마기 로(Maggie Roe): 조경에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
해외리포트 _ 알제리의 신도시 개발과 국토계획
서평 _ 지방이 블루오션이다(이민원)
국토논단 _ 북한 산업입지정책의 전개와 향후 과제 – 전략산업지역을 중심으로
KRIHS FOCUS _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회원 모집안내
전통마을의 문화경관 찾기 3 _ 한국 전통마을의 토지이용과 주택조경의 실제
KRIHS 보고서
1.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김선희 외)
2.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연구(정진규 외)
간추린 소식 _ 기업도시 활성화 위해 ‘출총제’ 등 완화 외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목록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79 _ 부여(扶餘) 부소산성(扶蘇山城)

■ 300호(2006. 10)

국토시론 _ 21세기 국토관리의 새로운 방향, 에너지와 국토관리의 통합
짧은 글 긴 생각 _ 반쪽 깎두기 이야기
특집 : 에너지와 국토관리
1. 에너지자원과 지역균형발전
2. 에너지절약적 도시개발과 과제
3. 교통부문의 에너지위기 대응과 시사점
4. 에너지위기와 국토환경보전
5. 신·재생에너지와 국토발전
용어풀이 98 _ 아와니 원칙(The Ahwahnee Principles)

박영순

이재영
박래여

이왕건
이동우
정진규
윤혜정
조철주
이왕건
노승용

신정철
양철준
김선규
김연금
정옥주
권영섭
김영봉
김민철

신상섭

김광구
조성길

박영순

김상희
오주환

최도영
김선희
조남건
최지용
이기명
김진범

자료회원 가입안내
이슈와 사람 25 _ “처음도 끝도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을” – 김병섭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차미숙
세계의 도시 98 _ 역사·문화가 숨쉬는 관광·휴양도시, 팔마 데 마요르카(Palma de Mallorca) 양하백, 이순자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데이비드 N. 뱅스톤(David N. Bengston): 환경가치에 기반한 토지이용 전재경
해외리포트 _ 소지역 통계 공표구역의 사례: 잉글랜드·웨일즈의 Output Area 번필성, 김광익, 안재학
KRIHS FOCUS
1. ‘동북아 대도시권의 지역재구조화와 경쟁력’ 국제워크숍 박세훈, 이성수
2.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지침(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안용진
전통마을의 문화경관 찾기 4 _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하회·양동마을의 문화경관 신상섭
국토논단 _ ITS 10년의 성과 및 과제 이승환
알기 쉬운 연구 방법론 8 _ 시나리오 기법: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은 최적 정책 패키지 선정의 밑거름 김경석
지역통신 _ 국립 ‘중원문화재 연구소’ 설립 최종 확정 외
KRIHS 보고서
1. 유희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최혜재 외) 김홍상
2.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류승환 외) 주성재
간추린 소식 _ 높아지는 주거 질(質)…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외 서평
1.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안 이응우
2. 아름다운 노년’의 인생 포트폴리오’ 김현식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목록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80 _ 반월나성(半月羅城)과 산유화가(山有花歌) 박영순

■ 301호(2006. 11)

국토시론 _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김원배
짧은 글 긴 생각 _ 제과점에 올린 경보기 윤신철
특집 : 경제자유구역의 평가와 과제
1. 경제자유구역 3년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계획 우기종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과제 박재현
3.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운영방안 이성봉
4.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방향 박형서
5. 선진복합형 경제특구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김득갑
용어풀이 99 _ 특별지방자치단체 외 장철순
정책해설 _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주요내용 김효정
해외리포트 _ 월마타이제이션(Wal-Martization), 도시계획의 또 하나의 도전 최현선
전통마을의 문화경관 찾기 5 _ 전통마을과 토속경관(土俗景觀)의 보전전략 신상섭
이슈와 사람 26 _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향한 거점이 되겠습니다” – 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장철순
세계의 도시 99 _ 변화를 선도한 자유의 도시, 라이프치히(Leipzig) 이상준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아츠키 오카베(Atsu Okab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간 알고리즘 신정엽
KRIHS FOCUS
1.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김현중

141 KRIHS

142 KRIHS	2. 제15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3. 지역 간 공동변영 전략에 관한 워크숍 국토논단 _ 지속가능한 국토연안축의 통합적 관리방안 지역통신 _ 산업용지 개발, 민간주도형으로 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9 _ SWOT분석: 지피지기(知彼知己) 전략은 SWOT분석을 통해서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상편 KRIHS 보고서 1.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최영국 외) 2. 시공간자재(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최병남 외) KRIHS 서평 _ 마치즈쿠리를 통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해법 찾기 간추린 소식 _ 9월 토지거래량 12.8% 증가, 지가 0.44% 상승 외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목록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81 _ 용봉연(龍鳳蓮) 봉래산과 부여팔경(扶餘八景)	윤성민 전대운 엄기철 김영표 박석희 홍상기 문 체 박영순	
	■ 302호(2006. 12) 국토시론 _ 대규모시설 이전과 도시의 발전 짧은 글 긴 생각 _ 한국에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특집 :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의 활용과 도시발전 1.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의 활용과 도시변화 2. 수도권 내 대규모공장 이전부지의 토지이용방향 3.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4.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방안 5. 국·내외 이전부지 활용사례 및 시사점 용어풀이 100 _ 이전부지 외 국토논단 _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원주민 재정착 실태 및 미입주가구 행태에 관한 연구: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슈와 사람 27 _ “비전2030, 함께가는 희망한국을 위한 장기전략입니다” -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 세계의 도시 100 _ 중국 서남부의 성장동력, 성도(成都) 가던 길 멈추고 @-interview _ 주디스 리즈(Judith A. Rees): 국제 물 거버넌스와 통합수자원관리 해외리포트 _ 천진 빈해신구의 제조업 발전전략 간추린 소식 _ 영천 - 상주 등 3개 민자고속도로 본격추진 외 KRIHS FOCUS _ 푸트라자야(Putrajaya) 도시계획의 개념과 실행에 관한 외부 초청 강연 전통마을의 문화경관 찾기 최종회 _ 전통마을 문화경관에서 찾아본 은고지신(溫故知新)의 미(美)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0 _ Q방법론: 주관적 의식에 관한 연구로의 초대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하편 KRIHS 보고서 1.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김원배 외) 2.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윤주현 외) KRIHS 서평 1. 한국의 장소판촉(김형국 외) 2. 남인회의 길 이야기(남인회)	안건혁 레슬리 벤필드 계기석 민범식 김영봉 조판기 성은영, 박천규 성은영 배순석, 천현수, 김승중 박양호 이왕건 김선규 김고운 김상욱 손동욱 신상섭 진상현 구정모 정의철 남기범 김경석	
143 KRIHS	3. 진짜 대구를 말해줘: 대구 재창조를 위한 49가지 이야기(홍철 외) 4.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황명찬) 지역통신 _ UN 아·태경제사회이사회 교통장관회의 개최 외 제11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수상작 2006년 국토 총목차(통권 291호~302호)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목록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82 _ 놀피의 땅 논산(論山)과 노성산성(魯城山城)	주성재 김현식 박영순	M 정기간행물 목차 1. 국토

2. 국토연구(48권~51권)

■ 48권(2006. 3)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이수장
도시지역과 전원지역의 홍수피해 비교를 통한 홍수피해산정방법의 적정성 평가	이충성, 최승안, 심명필, 장준경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김영봉
광역권개발계획의 평가와 진단	김진범, 양하백
출발 및 도착시각기준 구간통행시간 차이의 원인규명에 관한 연구 : 연속류를 중심으로	김재진, 노정현, 박동주, 남궁성
연구재고법을 이용한 SOC 스톱 추계 : 항만부문을 중심으로	김명수, 조진형
도시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GIS 기반의 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이승일, 주용수, 이창호

■ 49권(2006. 6)

Benchmarking Urban Networking Strategies in Europe	Cesar, Ducruet
2차 자료의 사용이 RAS기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하연옥, 김호연
기업관계자가 본 광주·전남의 기업유치와 투자환경	강법식, 김덕모
분권형 지역발전체제 구축 : 정치경제학적 분석	김성배, 진영환
공공공사 건설보증 인수모형 연구 :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김명수, 박만순
The Effectiveness of Land Use Planning in Hazard Mitigation	정주철
개발행위허가제 실태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경기도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순탁, 김제국
부동산거래가격신고제 실시에 따른 공시지가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채미옥
서울시 공동주택단지의 친환경적 외부공간 조성을 위한 디자인요소 선정에 관한 연구	송병화, 양병이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오피스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전기석, 이현석
도시정부에 필요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관한 연구	김태진

■ 50권(2006. 9)

Impacts of Land Use Change on Discharge Regime and Water Quality in a Small Watershed	강상준, 안창우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대안적 계획이론의 모색	김홍순
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	장희순, 송상열
도시지역 소비자의 쇼핑장소 선택 특성에 관한 연구 : 마창진 광역도시권을 사례로	손상락, 이성용
2000년 서울시 행정동별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연구	박종순
장래 통행패턴을 고려한 중력모형의 파라미터 정산방법	임용택, 김상구
주거입지에 따른 가구의 교통비용과 주거비용의 비교 연구 : 광역 합부르크시에서 대중교통시설로의 접근도에 따른 가계제정구조	
역모기지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민간 역모기지 이용자 특성 분석	김성길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선주, 유선종
비도시지역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김윤기, 이상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사업손실보상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연구	오병기
기구특성에 따른 계층혼합의 수용요인 분석	최제호, 문영기
	김주영, 한정희

■ 51권(2006. 12)

Maritime Trade and Port Evolution in a Socialist Developing Country: Nampo, Gateway of North Korea	조진철, 세자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의 추진방안	김영봉, 김홍배

관광지선호속성 세분화에 따른 노인관광자의 관광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시를 중심으로	곽재용, 하정순
지방자치단체 해상경제분쟁의 원인과 해소방안	계기석
New Regionalism in the U.S. Metropolitan Area	리차드 파이악, 박형준
The Structural Changes of Daejeon-Chungnam's Production Linkages Using a Qualitative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박창귀, 제프리 휴잉스, 김영재
뉴어버니즘의 실제: 미국 캔틀랜드의 사례	김홍순
인지도를 이용한 한·미 대학캠퍼스 이미지 차이 연구	정지범, 김홍규
우리나라 방재도시계획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문 채
아파트 분양원가의 검증가능성 제고방안	안균오, 변창흠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입지현황과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배순석, 전성제
민간투자사업 정량적 위험배분모형 구축과 국고보조금 산정	백성준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의 확산-압축패턴 측정	임은선, 이종열, 이희연

3. 건설경제(47권~50권)

■ 47권(2006. 3)

건설경기진단

- | | |
|----------------------|-----|
| 1. 2006년 상반기 건설경기 동향 | 김재영 |
| 2. 2006년 상반기 해외건설 전망 | 김종현 |

논단

- | | |
|----------------------------|-----|
| 1.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주요 문제 및 개선방향 | 김성일 |
| 2. 해외건설 활성화에 따른 정부지원방안 | 이상호 |
| 3. BTL 민자사업의 실태와 향후전망 | 안광섭 |
| 4. 외국의 파트너링 운영 실태와 향후 도입방향 | 김명수 |

외국의 건설정보

- | | |
|--|-----|
| 1. 해외 고속철도 건설배경과 추진현황 | 김종학 |
| 2. 외국의 교통혼잡통행료 정책 도입 사례 : 런던과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 정선영 |

주요 건설통계

■ 48권(2006. 6)

건설경기진단

- | | |
|----------------------|--------------|
| 1. 2006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 김재영 |
| 2.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 국토연구원 부동산동향팀 |
| 3. 2006년 하반기 해외건설 전망 | 김종현 |

논단

- | | |
|----------------------------|-----|
| 1. 공동도급계약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상호 |
| 2.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및 향후전망 | 한창환 |
| 3. 건설사업관리(CM)용역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 이교선 |

지상중계

- | | |
|-------------------------------|-----|
| 1.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 | 이승훈 |
| 2.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 방안에 관한 공청회 | 김민철 |

외국의 건설정보 _ 외국의 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사례

주요 건설통계

■ 49권(2006. 9)

건설경기진단

- | | |
|--------------------------------------|-----|
| 1. 최근 건설동향과 향후 추이 : 건축허가, 건설계약, 건설투자 | 김재영 |
| 2. 2006년도 해외건설 동향 및 점검 | 김종현 |

특집 _ 건설시장별 성장 동력 확충방안

- | | |
|----------------------------|-----|
| 1. 건설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방안 | 이충렬 |
| 2. 성장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실태 및 발전방안 | 정하영 |
| 3. 설비건설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방안 | 김경희 |

논단 _ 건설 산업발전과 건설문화 혁신

지상중계 _ 제15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외국의 건설정보 _ 일본의 장대교량(세토대교)

주요 건설통계

■ 50권(2006. 12)

건설경기진단

- | | |
|----------------------|--------------|
| 1. 2007년 건설경기 전망 | 김재영 |
| 2.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전망 | 최수, 박천규, 윤지선 |
| 3. 2007년도 해외건설 전망 | 김종현 |

논단

- | | |
|-----------------------------|----------|
| 1. 업역통합에 따른 대형건설업체의 발전방향 | 김성일 |
| 2. SOC 투자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 안홍기, 김민철 |
| 3. 최저가낙찰제 운용현황 및 저가심의제 개선방안 | 이재식 |
| 4. 지방 건설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 | 백성준 |
| 5. 건설관련 처벌 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강운산 |

외국의 건설정보 _ 해외 건설폐기물 처리현황과 순환골재 재활용 사례

주요 건설통계

4. 국토정책Brief(98호~120호)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소속
98	2. 20	프랑스의 DATAR가 DIACT로 바뀐다	정옥주	국토계획·환경연구실
99	4. 3	환경해권 형성 선도를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김원배	국토계획·환경연구실
100	7. 31	최근 홍수피해 실태와 수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종원·김창현·심우배	국토계획·환경연구실
101	8. 7	인구주택총조사로 본 주거특성 변화 및 정책 시사점	윤주현·강미나·박천규	토지·주택연구실
102	8. 14	ITS용 표준 전자지도 구축을 통한 교통 및 도로운영 정보 연계·통합 활성화 방향	오성호	SOC·건설경제연구실
103	8. 21	스마트성장(Smart Growth)의 목표와 원리 -한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왕건	지역·도시연구실
104	8. 28	국토공간상의 농촌지역 변화트렌드와 정책적 시사점	김창현	국토계획·환경연구실
105	9. 4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방향	채미옥	토지·주택연구실
106	9. 11	2005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도시화 트렌드와 특성	이원섭	국토계획·환경연구실
107	9. 18	해외건설 활성화에 따른 대응방안 -해외건설 인력의 소요 전망 및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김성일	SOC·건설경제연구실
108	9. 25	스마트성장 주요 기법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변필성	지역·도시연구실
109	10. 9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 혁신전략	최병남	GIS연구센터
110	10. 16	동북아 물류발전을 위한 한·중·일 상생협력방안	임영태	교통연구실
111	10. 23	마을단위계획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예들의 사례와 시사점	박경현·박재길	국토·지역연구실
112	10. 30	공공사업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회의제 운영의 성공요인과 시사점-건설교통 갈등관리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박형서	국토·지역연구실
113	11. 6	세계화와 인구감소	이상준	동북아발전연구센터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소속
114	11. 13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택근무 동향과 활성화 방향	정진규	교통연구실
115	11. 20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과 시사점-미국-멕시코 '국경 2012 프로그램(The Border 2012)' 사례-	이순자	국토·지역연구실
116	11. 27	도시의 미래상과 비전을 준비한 독일의 「Urban 2030」	이상준	동북아발전연구센터
117	12. 4	영국의 새로운 공간계획체계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의 시사점	김명수	국토환경·문화연구실
118	12. 11	일본 주거정책의 변천 및 주생활기본법의 제정과 시사점	윤주현·강미나·박천규	토지·주택연구실
119	12. 18	영국의 주택 자가소유지원정책과 시사점: 홈바이(Homebuy) 사업을 중심으로	윤주현·박천규·강미나	토지·주택연구실
120	12. 26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전략	권영섭	국토·지역연구실

V 부서 소개

1. 원장 · 부원장	152
2. 국토 · 지역연구실	155
3. 국토환경 · 문화연구실	161
4. 도시연구실	165
5. 토지 · 주택연구실	169
6. 교통연구실	175
7. SOC · 건설경제연구실	181
8. 국토정보연구센터	185
9. 동북아발전연구센터	191
10. 도시혁신지원센터	195
11. 연구지원부서	199

President & Vice President

최병선 원장

도시 및 지역개발학 박사, Munique University of Technology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 국민
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경원대학교 도시계획
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건설
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
다. 주요 연구로는 「각국의 도시 및 농촌공간관리체계 연구」(2002), 「도시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1999) 등이 있다.



박양호 부원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국토 및 지역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건설
교통부장관 자문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장,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혁신
민관협의회 위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로는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2004), 「제4차 국토종
합계획 연구」(1999),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연구」(1991) 등 다수가 있다.



02

c h a p t e r V

국토 · 지역연구실

1) 연구실 소개

국토·지역연구실은 국토 전체의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와 각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계획 및 관련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국토단위에서는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을 수립한 데 이어 제3차(1992~2001)와 제4차국토종합계획(2000~2020) 및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0~2020)을 수립하였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지역경제정책, 지역분석, 수도권 및 산업입지 연구와 이들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분석 방법론, 지역계획 및 산업정책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지역 간 경쟁시대의 전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지역발전 정책의 실효성제고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발전체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연구기관, 지역전문가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토·지역연구실은 국토 및 지역관련 정책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에 대한 지침제공 및 연구성과의 종합을 통해 국토와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국토정책 개발

-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대책
- 국토정주체계 구축 및 낙후지역발전대책
- 지방분권과 분산정책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수정
- 국토관련 기초조사
- 국토계획 및 정책추진 실적의 종합평가

■ 지역분석

- 지역경제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이론과 모형의 정립
- 수도권정책 및 관련계획 연구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시 및 개발계획 수립

■ 산업입지 및 지역혁신

-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 산업입지의 공급 및 정보체계 구축
- 지역경쟁력 강화 및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수립

■ 지역경영 및 지역발전체제

- 지방 행·재정 분석
- 지방정부 경영평가 및 전략계획 수립
- 지자체 간 협력 및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2) 연구진 소개

박형서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Liverpool
현재 국토·지역연구실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실적은 「공공사업 지자체 참여제고 방안」(2006),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구축연구」(2006), 「한일 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 전략」(2005),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연구」(200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2004) 등이 있다.

박상우 선임연구위원

지역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신행정수도 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분석 연구」(2003), 「지공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2003), 「수도권 정비계획수립」(1994), 「행정중추기능의 분산」(199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분석실장을 역임하였고, 수도권정비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경원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국토정보화, GIS, 공간분석,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분야다. 「우리산맥바로세우기포럼」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기법을 이용한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 개발」(2006),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연구」(2005),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200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2004),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연구」(2003),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2003), 「국공유지 관리 및 효과적 활용방안」(1995), 「국토정보 전산화 기본구상」(1991), 「토지공개념 연구」(1989),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개선방안 연구」(1983), 「대도시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1980) 등 다수가 있다.

양하백 선임연구위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지역계획, 자원 및 환경계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1999),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1997),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1997) 등이 있다.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지역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균형발전 선도도시 건설과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2006),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미래상」(2006), 「혁신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 국제비교연구」(2003),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군집체계」(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정책연구실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다.

서태성 선임연구위원

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정책, 관광개발계획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20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4), 「신행정수도 후보지선정 및 평가관리 연구」(2004),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2), 「남해안국제관광벨트 개발계획 연구」(1999),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수립연구」(1998) 등 다수가 있다.

이동우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분권화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연구: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5)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7

년 1년간 미국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연수 중이다.

김상욱 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2025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2006), 「대전-통영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2004),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2003),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연구」(1998), 「산업입지정보망 구축방안」(1998) 등 국토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산업입지 분야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용우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Bonn
국토·지역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Ⅱ」(2006),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개발 연구」(2006),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2005),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2005),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방안」(2004), 「서해안고속도로 개발계획 수립연구」(2003),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2003),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김태환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수도권 및 지역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추진방안」(2005),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Ⅰ」(2004), 「수도권 집중요인 분석 및 기능 분산방안 연구」(2003),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광익 연구위원

지리학 석사, 서울대학교
「도시화지역 획정을 위한 시스템개발」(2006),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2005), 「지역통계생산을 위한 도시화지역 설정」(2004),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 방안」(2001), 「대도시산업구조변화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2001)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원섭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국토계획 및 낙후지역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Ⅰ, Ⅱ, Ⅲ」(2003, 2004,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5),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Ⅰ, Ⅱ」(2005, 2006) 등이 있다.

권영섭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방안 연구」(2004), 「지역별 지식기반산업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연구」(2002), 「시범 테크노파크사업과 지역혁신체제 구축」(2001), 「지역 지식기반산업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천규 연구위원

현재 중국인민대학(人民大學) 환경학원(環境學院)에서 Ph.D 과정 중.

김창현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경상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2006),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2005),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2002), 「공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Ⅰ, Ⅱ」(1995, 1996) 등이 있다.

문정호 연구위원

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주요 연구로는 「참여정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2006),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Ⅰ」(2005),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2003) 등이 있다.

차미숙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2006),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 내 추진체계 구축연구」(2004),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2003), 「지역발전론」(200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연구」(2002),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2001),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연구」(2001)를 수행하였다.

이승복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자원환경관리), 단국대학교
하천 및 대체수자원, 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하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체계 모색 연구」(2006), 「대체수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2006),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2005), 「홍수피해 특성 분석 및 홍수피해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5), 「하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기준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장철순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 전문가로 산업입지 및 낙후지역 정책 등 지역계획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파견 근무 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2006), 「산업입지제도개편 연구」(2005), 「지식기반산업의 군집형성요인에 관한 연구」(200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연구」(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연구」(2003),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2) 등이 있다.

이순자 책임연구원

정치학 박사(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Colorado State University
지역계획 및 국토자원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2006), 「제주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6),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005),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 구축을 위한 국토계획 수립연구」(2005) 등이 있다.

정옥주 책임연구원

지리학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Paris-IV-Sorbonne
주요 연구로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Ⅱ」(2006),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20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5),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Ⅱ, Ⅲ」(2004, 2005) 등이 있다.

변필성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도시계획 부전공), University of Arizona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상품화의 사례로서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업에 대한 고찰」(2006), 「분권화시대

02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연구: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2006), 「A Revisionist Model of Suburbanization and Sprawl : the Role of Political Fragmentation, Growth Control, and Spillovers」(2005)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강호제 책임연구원

도시정책학 박사, Cleveland State University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GIS 공간분석 전문가로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를 수행하였으며 2005년 서부지역학회 최고논문상(Springer Award)과 Honorable mention for Tiebout prize를 수상하였다.

변세일 책임연구원

「2006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 연구용역」(2006)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구」(2005),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2004), 「ICT 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에 관한 연구」(200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2003),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구축방안」(2003), 「지역 간 산업연관표 작성연구(III)」(2003).

박인권 연구원

현재 Ohio State University, City &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임상연 연구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2005),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2005),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 연구」

(2005),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박경현 연구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ICT산업의 지역 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장은교 연구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2006),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2006)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03

c h a p t e r V

국토환경·문화연구실

1) 연구실 소개

국토환경·문화연구실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국토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21세기에 요구되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건설을 위해 국토의 환경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의 생태적 관리, 갈등관리, 기후변화 및 동북아환경, 자원 및 에너지관리, 수자원정책, 유역 및 하천관리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국토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활동 확대를 위하여 국토 및 도시방재, 지역문화정책, 국토개발에 따른 지역문화와 정체성 제고, 국토 어메니티 증진,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국토환경분야

- 국토계획의 환경성제고 및 평가
- 국토의 생태적 관리
- 갈등관리
- 기후변화 및 동북아환경

■ 자원관리분야

- 농촌, 산지, 연안, 도서관리
- 자원 및 에너지관리
- 보호지역관리
- 환경가치

■ 수자원 및 방재분야

- 수자원정책
- 국토 및 도시방재
- 유역권 및 하천관리

■ 문화분야

- 국토 어메니티
- 지역문화정책
- 국토개발과 문화영향
- 국토공간의 역사·문화변화

■ 관광 및 여가분야

- 지속가능한 관광
- 관광정책연구 및 관광개발 효과분석
- 관광자원 개발 및 광역관광 개발계획
- 여가활동 및 성향분석

2) 연구진 소개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조경학 박사, Agricultural University of Norway
자연환경관리, 생태관광 및 경관계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이며, 환경부 중앙환경정보전자문위원과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06),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200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2005),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작성 연구」(2003),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200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2002) 등이 있다.

김선희 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환경 및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앙환경정보전위원회 위원, 새만금환경대책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2006),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기준설정 및 적용방안 연구」(2004),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김종원 연구위원

자원경제학 박사,
West Virginia University at Morgantown
환경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감사원 건설물류분야 자문위원, 건설교통부 전략환경평가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물 수요관리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2006),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하천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전망과 정책과

제」(2004), 「용수재배분을 통한 가용수량확보 방안(I), (II), (III)」(2004, 2005, 2006) 등이 있다.

이문원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자원 활용(연안 및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분야 전문가로서 국토연구원 출판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군사시설 이전적지 활용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연구」(2007),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006),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춘천미군기지 이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활용방안 조사연구」(2005),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2004) 등이 있다.

양진홍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시·군)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연구(II)」(2004), 「구미국가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방안연구」(2004),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심우배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홍익대학교
홍수 및 국토·도시방재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중앙심의위원,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 환경부·기상청 기후변화연구회 연구위원, 한국방재학회 하천방재시스템분과위원, 한국수자원학회 수문기상분과위원, 하천협회 정책개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2006),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6),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I)」(2005),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

03

환경평가 시행방안 연구(2005), 「수자원관리 및 국토
방재기반구축(2005),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
(2005) 등이 있다.

김명수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생태계획 및 경관계획 전문가로서 경관생태학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
본계획」(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2006),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연구」(2005), 「인천경제
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 수립」(2005), 「생태
통로 설계 지침서」(2005), 「포항제철소 그린마스터 플
랜」(2005),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기본계획수립 연
구」(2004),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성 확보방안 연구」
(2004), 「서울의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방안 연구」
(2002)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정은 연구원

공학 석사, 경원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
응과제(II)」(2006), 「국토개발전략의 국제비교와 한국
에 대한 시사점」(2006),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2006), 「A Study on Energy Conservation
Policy of Korean Cities」(2006),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기준항목에 관한 연구」(2004), 「노후불량주
거지역의 효율적 정비방안연구」(2004), 「수원도시 200
年史」(2002) 등이 있다.

04

c h a p t e r V

도시연구실

1) 연구실 소개

도시연구실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미래의 도시여건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이렇게 제시된 도시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신도시계획 및 설계, 기성시가지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같은 물리적인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생활 공동체 회복, 도시경제 활성화 및 도시행정의 효율성제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 도시정책 및 관련 제도

- 국가차원의 도시발전정책 제시
- 도시계획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 신도시계획 및 설계

- 신도시의 계획기준 연구
- 신도시건설 타당성 조사 및 수요분석
- 신도시 개발계획안 작성

■ 기성시가지의 정비

- 도시재생정책 및 지원방안 연구
- 도시재생관련 제도 연구
- 도시재생을 위한 개발계획안 작성

■ 지구단위계획 및 설계

- 지구단위계획제도 연구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연구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커뮤니티정책

- 살기좋은 도시·마을만들기를 위한 정책제시
- 지원제도 및 시범사업 연구

■ 도시경제 및 행정

- 도시경제 활성화·도시행정 효율화에 관한 연구

2) 연구진 소개

민법식 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 University of Tokyo
현재 도시연구실장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2004),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연구」(2003), 「기성시가지 정비기법에 관한 연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2002) 등 도시개발과 기성시가지 정비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Princeton University
「The Role of Festivals in the Reproduction of the Urban Lifeworld」(2006),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 감시능력 강화사업」(2006), 「과천시식정보타운 개발전략 수립연구」(2005),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2001), 「제주국제도시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도시연구실

장을 역임하였고,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석희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주요 수행연구는 「경기 서북부 국제업무신시가지 개발구상 연구」(2006), 「판교신도시 개발구상 및 타당성 분석」(1999), 「경부고속철도 역 및 역세권개발 기본구상」(1997), 「부산시 도시기본계획」(1992), 「일산 신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1991) 등이 있으며, 도시계획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서울시 건축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건설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태수 연구위원

농학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연구」(2006),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연구」(2004), 「국가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연구」(2003), 「2021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연구」(2002), 「천안역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1997)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박은관 연구위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2004),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2004),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2001), 「도시계획체계정립 및 계획수립기준 연구」(1993) 등 주로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왕진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

구」(2006),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연구」(200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2005),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황성수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경기서북부국제업무 신시가지개발 타당성분석 연구」(2006),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2006), 「김포신도시개발구상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2006), 「철도역세권 개발계획」(2006), 「웅진군 종합발전계획」(2005), 「도시수변공간의 이용특성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02) 등의 연구를 기수행 및 수행 중에 있다.

김성수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김상조 책임연구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기준 연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2005~2006), 「지방분권에 따른 국토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2005), 「남해군 시범 군 기본계획 수립」(2004),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영아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Bristol, U.K, Housing Policy Research, Ph.D 과정 중.

박세훈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2005), 「신행정수도 후보지선정 및 평가관리 연구」

04

(2004),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방안 연구」(2004)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권영상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도시설계·건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기사, 건축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연구」(2006), 「근린주구 보행활성화를 위한 보행친화적 환경요소의 계량화」(2006), 「조선후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구조-주요시설과 도로체계를 중심으로」(2003) 등을 수행하였으며, 건축 및 도시설계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손동욱 책임연구원

도시설계 및 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건축기사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2006), 「스마트성장에 대한 시장선호도 분석」(2006, 박사학위 논문), 「업무용 건물의 개발밀도와 도로연결망구조와의 관계 분석」(2002) 등을 수행하였으며 도시설계 및 계획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형진 책임연구원

조경학 석사(도시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2006), 「김포신도시 기본구상 수립 연구」(2005),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2004), 「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활성화 및 쾌적성 제고방안 연구」(2003),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 방안 연구」(2003) 등 도시설계 및 도시재생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범현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2005),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중은 연구원

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결정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2003),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안용진 연구원

공학 석사(도시설계), 서울대학교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연구」(2005),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2004), 「과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2004)을 수행하였고, 국제협력사업으로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사업」을 수행 중이다.

05

c h a p t e r V

토지·주택연구실

1) 연구실 소개

토지·주택연구실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토지와 주택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삶의 질, 부의 배분, 국토환경 보전수준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토지·주택시장과 정책의 변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의 주택대량공급,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변화된 토지와 주택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 등 나라안팎의 여건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토지·주택시장의 투명성제고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토지·주택정책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제도를 친환경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토지·주택연구실은 토지와 주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들을 분석·전망하고,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의 주택문제를 완화하고 바람직한 주거공동체 의식과 주거문화를 형성하면서, 토지적성평가제도와 같은 친환경적 도시관리와 연계되는 토지·주택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한 선진국의 이론과 경험을 분석하고, 한국형 이론개발을 위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토지·주택정책 연구

- 토지·주택정책의 평가 및 개발
- 토지·주택금융 및 조세정책 연구
-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산업 등 관련산업 정책 연구
-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주택계획 연구
- 선진국의 토지·주택정책 연구
- 주거복지 제고방안 연구

■ 토지·주택시장 연구

- 토지·주택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 부동산증권화시장의 동향분석모형 개발
- MBS·ABS시장의 수익모형 개발

■ 토지·주택 관련법제 및 행정체계 연구

- 토지·주택 관련법제의 정비 연구
- 토지·주택의 소유·임대차권 정비 연구
-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설 체계정비 연구
- 토지·주택의 행정체계 연구

■ 토지·주택 정보체계 및 경영관리

- 부동산 정보체계의 관리 및 활용체계 연구
- 부동산 지적·등기제도의 통합관리 방안 구축
- 공시지가·주택가격 등 부동산시장 정보관리
- 토지·주택의 수급 및 재고관리체계 구축

2) 연구진 소개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현재 토지·주택연구실장이며, 환경부 국토환경보전자문위원,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 행정자치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연구(I)」(2006),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2005),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03),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의 연계성 확보방안」(2002),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연구」(2001) 등이 있다.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정책분석) 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민주당 소득격차완화 특별위원회 위원, 지방공영개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주택학회 운영위원장, 학회지 편집위원장 및 감사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택지개발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6),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200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2005),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연구」(2002) 등이 있다.

손경환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자문위원, 참여정부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일리노이대 초빙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주택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정책의 효과분석체계 구축 연구」(2006),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연구」(2004), 「부동산거래신고가격 적정성 평가모형 개발」(2004), 「주택종합계획(2003~2013) 수립연구」(2003),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체계 구축」(2003) 등이 있다.

정희남 연구위원

정책학 박사, University of Hawaii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에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토지정책, 토지 및 부동산시장과 법제, 부동산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2006),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합리적 토지이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2005),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2004),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2004),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2003),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2003, 2002) 등이 있다.

진정수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건국대학교

현 한국주택학회 이사, 로드아일랜드주립대(미) 교환교수이며, 행정자치부 지방공사 경영평가위원 및 연구원의 연구조정팀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택지개발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분석 연구」(2006), 「철원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2006),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개발이익의 발생규모와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1999),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1998),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1997)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대식 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건설교통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실무위원 및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분과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정책, 토지관리 및 도시 행·재정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방안」(2006),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2004),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2004),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개선방안」(2003),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범위 조정 및 매수청구제 도입방안」(2002) 등이 있다.

김근용 연구위원

경영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현재 한국주택학회 학술위원장 겸 이사,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특별조사국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부동산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택수요 조사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실현방안 연구」(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격차 완화방안 연구」(2005), 「공공임대주택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2004),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2003), 「주택사업 유형별 지원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2002) 등이 있다.

김혜승 연구위원

이학(주거정책) 박사, 경희대학교
현재 한국주택학회 이사,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거복지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정책 및 주택시장 분석이며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2006), 「주거양극화

의 현황 및 과제」(2006), 「임대료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2004), 「주택후분양제도의 초기 정착방안 연구」(2003),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2003),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립연구」(2003),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연구」(2000, 2001, 2002)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최혁재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건국대학교
국무총리 물관리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및 환경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2006), 「유희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2005),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연구」(2005),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방안 연구」(2004),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 관리제도의 발전방향」(2003), 「농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천현숙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건설교통부 자체심사평가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주택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지방분권 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2005),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개편방안 연구」(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2002), 「수도권주택건설과 인구집중」(2001) 등이 있다.

이수옥 연구위원

문학 석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정책 및 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분석체계 구축 연구」(2006), 「정부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방안 연구」(2002), 「건설사업관리제도 운용방안 연구」(2001), 「접도구역 지정제도 개선 연구」(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1999) 등 다수가 있다.

강미나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06 주거실태조사」(2006),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I)」(2006),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출체계 구축방안 연구」(2006),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2005),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역할강화 방안」(2005),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 구축 연구」(2005), 「주택정책 전환에 따른 정책통계기반 구축」(2004),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2004),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체계 구축연구」(2003) 등이 있다.

최 수 책임연구원

도시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 및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06년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2006), 「재건축사업의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이익환수방안」(2006), 「공공택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2006),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6),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2004), 「부동산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2003), 「농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조판기 책임연구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택·도시정책이며, 특히 도시의 물적 기반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토지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2004),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2004), 「택지개발지구 자족성 강화방안 연구」(2004),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 연구」(2002),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연구」(2002), 「도시경쟁력 비교분석 연구」(1998) 등이 있다.

김승중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법제와 토지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2006), 「유희농지의 효율적 활용 관리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연구」(2004),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안」(2003), 「토지의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II)」(2002) 등이 있다.

송하승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연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및 토지정책이며, 주요 연구로는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2006),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2005),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박천규 연구원

경제학 석박사통합과정 중, 한양대학교

05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2006),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연구」(2004), 「주택자금대출시장의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전성제 연구원

지리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입지현황과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2006) 등이 있다.

06

c h a p t e r V

교통연구실

1) 연구실 소개

교통연구실은 지난 1978년부터 전국 단위의 간선도로·철도망계획, 광역 종합교통계획, 대형교통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국가 및 권역, 도시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과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해 왔으며,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의 통행권 향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교통체계의 창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점 연구분야로는 국가 및 권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주요 교통정책의 개발, 중장기 교통투자 계획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전국 반나절 생활권 형성을 위한 도로·철도 등 고속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표준화와 아키텍처 연구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 물류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 등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 등 물류선진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선진시스템의 국내도입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주변 국가가 포함되는 아시안하이웨이,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육-해-공 복합운송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중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도로교류회의 등 국가 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원내 국토, 도시, 동북아, SOC, 건설경제 전문가와의 합동연구, 'Infra 21' 세미나를 통한 국내외 산·학·연과의 교류로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 교통시설 계획관련 연구

- 7×9 등 국토간선도로망의 추진
-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망, 광역철도망 구축
- 도시 우회도로 계획 및 연계교통망 구축
- 지방부 도로의 간선기능 향상 방안
-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종합기본계획

■ 교통정책 및 경제부문 연구

- 장기비전 구상
- 교통투자재원 확보 및 분담방안
- 대중교통 활성화
- 교통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후평가

■ 교통운영 및 관리부문 연구

- 교통분야 지리정보시스템(GIS-T)
- 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
- 교통수요관리, 수송에너지 대책
-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수립

■ 종합교통계획관련 연구

- 지표예측, 교통조사 및 수요예측
- 광역대도시권의 종합교통계획
- 항만 및 공항, 산업시설 배후 연계교통망 체계
-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종합 교통계획 수립

■ ITS관련 연구

- ITS '아키텍처'의 구축 및 표준화
- 교통시설 운영관리의 정보화
- U-TRANSPORT
- 첨단교통모델도시 구축사업

■ 물류관련 연구

- 물류구조 분석, 수요예측
- 유통단지 등의 물류시설 계획
- 물류산업의 발전전략 연구

2) 연구진 소개

류재영 연구위원

도시 및 교통계획학 박사, 한양대학교
현재 교통연구실장을 맡고 있으며 1978년부터 KIST 지역개발연구소, 국토연구원에서 도시 및 지역교통·물류분야의 계획을 주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1993), 「전국 무역항 배후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2006), 「서남해안 국제관광 및 물류단지 개발 구상연구」(2004), 「국토공간이용 및 사회간접자본 최적화모형개발」(2000), 「Transforming Korea into a Logistics Center for Northeast Asia」(1998) 등이 있다. 2001~2005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자문관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 항만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춘용 연구위원

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계획 및 정책, 교통계획, 지역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교통부문」(2005~2006),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2004), 「일본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연구」(2003), 「수도권 및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연구」(2000, 2001),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1999),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 조사」(1997), 「도로정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1997), 「입체도로제도 도입방안 연구」(1995) 등 다수가 있다.

이상건 연구위원

공학 박사, Virginia Tech
주요 연구분야는 ITS 표준화, ITS 기본계획, SOC 투자평가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2006), 「국가 ITS 기술표준화 1-6 단계 연구」(1998~2005),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에

관한 연구」(2004), 「SOC투자평가모형을 활용한 지역파급 효과 실증분석 연구」(2004), 「안양시 ITS, BIS 기본계획」(2003), 「SOC 투자평가모형의 개발 1, 2, 3단계」(2000~2003) 등 다수가 있다.

정일호 연구위원

교통계획 박사, University of Leeds
주요 연구분야는 SOC투자계획 및 평가,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2006),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2005), 「SOC 공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2004),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연구」(2004), 「중장기 SOC투자전략에 관한 연구」(2003),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연구」(2003), 「교통기술혁신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2002)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기획예산처 성과관리자문단, 건설교통부 예산자문위원회, 국가교통조정실사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홍석 연구위원

공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종합계획 및 운영·관리,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정책방향, 공공사업 및 수요분석관련 연구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광역대도시권 SOC정책의 새로운 방향」(2004), 「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3), 「고속도로 확장투자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연구」(2002), 「서천-보령간 국도확장사업」(2001), 「도로사업 투자분석기법 정립」(1999) 등 다수가 있다.

정진규 연구위원

도시학 박사, Portland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 및 토지이용, 광역교통계획 및 정책, 정보화와 교통, 계획이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

은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연구」(2006),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연구」(2005), 「대도시권 SOC정책 결정체계에 관한 연구」(2004), 「고속철도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3), 「자원절약적 국토공간구조에 관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김호정 연구위원

공학 박사, 홍익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과 도로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연구」(2006), 「교통서비스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06),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대응전략연구」(2005), 「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계획 수정계획 연구」(2004),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수립 연구」(2004),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장기계획수립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오성호 연구위원

공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현재 첨단교통(ITS) 표준연구단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정보, 교통계획이고,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06년 국가 ITS 기술표준화 연구」(2007), 「u-City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방안 연구」(2007), 「표준 노드/링크 체계 구축사업」(2005), 「고속도로 확장 투자 5개년 계획」(2004),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추진 계획」(2003),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 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임영태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경제와 물류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2006), 「전국 무역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수립 연구」(2006), 「연계성을 고려한 수송물류

결절점 평가기법 연구」(2005), 「도로와 환경 영향연구」(2004),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수립 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동욱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Transportation Engineering and Planning Division in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Ph.D 과정 중.

고용석 책임연구원

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투자,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ITS, 대중교통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2006), 「서해안선 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용역」(2004), 「SOC투자평가모형을 활용한 지역파급효과 실증분석 연구」(2004), 「안양시 버스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이미영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ITS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2006), 「ITS 장비 성능평가 및 검 · 교정체계 실용화연구(3단계)」(2006), 「ITS 장비성능평가 및 검 · 교정체계 구축연구(2단계)」(2005) 등 다수가 있다.

이백진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Hiroshima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ITS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

구」(2006), 「고속도로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자 편익연구」(2006), 「2006년 국가ITS 표준적용방안 연구」(2006), 「Social Capacity Development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2006) 등 다수가 있다.

김종학 책임연구원

공학 석사, 홍익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투자,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BRT와 혼잡통행료의 통합시행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2004),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3), 「21세기 도로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정립방안 연구」(2002),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연구」(2001),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조사」(2000) 등 다수가 있다.

정선영 연구위원

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ITS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연구」(2006), 「국가기간교통의 유고 대응전략 연구」(2005), 「점지기별 구간소통정보 산출 및 성능평가(II)」(2005),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2004), 「2003년 국가ITS 기술표준안 개발 연구」(2004), 「국가 ITS 기술표준화 4단계 연구」(2003) 등이 있다.

07

c h a p t e r V

SOC · 건설경제연구실

1) 연구실 소개

SOC·건설경제연구실은 사회간접자본 및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제에 대응하여 SOC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국민과 산업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18%를 점하는 등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생산체계 및 기술수준의 미흡, 불법·부실 등 투명성의 문제, 과당경쟁과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SOC·건설경제연구실은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연구, SOC 투자정책 및 제도연구, 건설경기동향 분석연구,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설산업DB를 구축하고, 이를 건설행정업무와 접목시키기 위한 건설행정 정보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계간 「건설경제(Construction Economics)」지 발간과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Economy) 등 해외연구기관과 교류하고 있으며, 아시아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건설협의회(Asian Construction Conference)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연구

- 건설산업 및 생산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발주 및 입찰·계약제도 연구
- 건설부패 방지대책 연구
- 건설공사보증제도 연구

■ SOC 투자정책 및 제도 연구

- SOC 중장기사업 투자 우선순위 및 지역 간 배분
- SOC 사업 투자효과 분석 및 타당성 조사
- SOC 투자지표 개발
- SOC 스톡추계

■ 건설경기 동향분석 연구

- 건설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모형 구축·운영
- 건설산업의 국민경제효과 연구
- 건설인력·자재 수급동향 연구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 건설산업DB 구축
- 건설정책·행정업무 정보화 연구
- 건설산업 정보화관련 연구

■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정책연구

- 민간투자사업 관련제도 연구
-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 기타 SOC·건설경제 관련연구

- 건설시장 개방의 대응전략 연구
- 주요 교역국가의 건설정책자료 수집·분석
- 해외건설시장 진출방안 연구

2) 연구진 소개

유재운 선임연구위원

도시경제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현재 SOC·건설경제연구실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경제, 도시개발, SOC 투자 등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기업도시 타당성 검토기준 및 개발이익산정 연구」(2005), 「민간투자사업의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에 관한 연구」(2002), 「도시개발비용의 구조분석 연구」(2001), 「도시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2000), 「도심재개발 활성화 방안」(1997),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1996) 등 다수가 있다.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중앙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국토정보실장, 건설경제연구실장, SOC·건설경제연구실장, 건설교통부 선진화기획단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건설경기 동태분석, 건설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경기 및 건설산업정책과 제도다. 주요 연구실적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집행 방안」(2006), 「공공시설 관리권에 관한 연구」(2006),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효율적 대응방안」(2005), 「건설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I, II)(2003~2004), 「건설경기 종합지수 개발 연구」(2002), 「제2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연구」(2002), 「건설경제구조변화를 고려한 건설경기 예측모형 개발연구」(2000), 「건설분야 부패방지 대책」(1999),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방안」(1999) 등 다수가 있다.

윤하중 연구위원

공학 박사, 경원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하남-화도(국도45호선) 교통량 재검토 연구」(2006),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분석 연구」(2006),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지침연구」(2004),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제안형 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2002),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연구」(2002),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비 산정에 관한 연구」(2001), 「인프라시설의 타당성 개선방안 연구」(2000) 등의 연구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시설 타당성조사 및 다수의 민간투자사업 평가와 협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사업추진팀장을 역임하였다.

김성일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 및 건설산업정책, 조달정책 등이며,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2006),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공공공사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03),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방안 연구」(2002), 「최저가 낙찰제도의 정착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권혁진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건설보증, 건설정책, SOC 투자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집행 방안」(2006), 「건설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 연구」(2006),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2005), 「건설교통부문의 성과관리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2004),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추계 연구」(2003), 「건설산업에서 금융기능강화방안 연구」(2002), 「건설산업DB 구축사업」(1999~2006) 등 다수가 있다.

07

이형찬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건설정책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성분석」(2004),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건설교통부문 성과관리지침 개발 연구」(2004), 「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03),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수립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김민철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건설경기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6),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2006),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2005),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안흥기 책임연구원

도시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분야는 SOC, 건설경제, 지역경제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2006),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2005), 「SOC투자평가모형을 활용한 지역파급효과 실증분석 연구」(2004),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2004),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1), 「MRIO모형구축과 SOC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00) 등 다수가 있다.

08

c h a p t e r V

국토정보연구센터

1) 연구실 소개

국토정보연구센터는 새로운 정보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GIScience 지식교류 네트워크의 중심(GIS Hub)을 지향하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신지식 창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아젠다 발굴 및 실사구시 방안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GIS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연구·지원하고, 계획시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누구나 GIS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GIS 추진주체 사이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GIS 활용전략 및 개발방법론을 연구·발전시켜 GIS 기반의 전자정부/전자지방정부 구현방안을 마련하고, GIS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국토 건설, 유비쿼터스[時空自在] 세상을 창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본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관리하는 방안과 적정 수준의 품질유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정립하여 합리적인 국토이용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국가GIS 계획·정책의 수립/모니터링/평가연구

- 국가GIS 계획·정책 수립지원 연구
- 국가GIS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
- 국가GIS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체계 연구
- GIS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연구
- 국가GIS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

■ GIS 기반의 유비쿼터스 세상 연구

- GIS 활용전략 및 개발 방법론 연구
- 유비쿼터스[時空自在] 세상 창조방안 연구
- 국가GIS의 상호융성 확보방안 연구

- GIS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 GIS 기반 전자정부·전자지방정부 구현방안 연구

■ 공간정보 생산·분석 연구

- 국가기본지리정보 생산·품질관리 연구
- 공간정보 분석 방법론 연구
- 국토공간 계획지원체계 연구
- 국토이용 모니터링 방법론 연구
-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

■ 주요 행사

- GIS 국제세미나 개최(1996~)
- GIS KOREA 대회 개최
- GIS관련 세미나 개최
- GIS 중앙교육센터 운용

2) 연구진 소개

사공호상 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정보연구센터 소장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GIS정책, GIS & RS 응용이다. 한국지리정보학회 상임이사, 안양대학교 대우교수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2005),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방안 연구」(2003), 「원격탐사와 GIS의 연계활용방안 연구」(2002), 「GIS 온라인교육 도입방안 연구」(2002),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분석 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최병남 연구위원

경영정보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분야는 GIS 및 MIS로써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 연구(I)」(2006),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2005), 「시공간 통합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 II)」(2005, 2006),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 방안 연구」(2004),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 연구」(1998~2004),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2003), 제2차 및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0, 2005) 등 다수가 있다.

정문섭 연구위원

지리정보공학 박사수료, 인하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화 및 GIS정책이다.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이사, 국가GIS추진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2006),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2005),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국가공간정보기반 구

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연구」(2003), 「국가GIS 평가 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방안 연구」(2002),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이종열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West Virginia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원격탐사, GIS, 도시 및 지역분석이며, 국토정보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2006),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피복분류방법 연구」(2003~2005), 「토지정보 활용성제고를 위한 3차원 위성영상정보 구축연구」(2005), 「국토이용모니터링방안 연구」(2003), 「리모트 센싱을 이용한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조사방법 연구」(2002), 「지역간 투입산출분석모형개발 연구」(2001), 「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 방안 연구」(1996),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방안 연구」(1992), 「수도권 신도시건설 파급효과분석」(1990) 등 다수가 있다.

김정훈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Newcastle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GIS와 u-City다.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한국GIS학회 상임이사, 각급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u-City(時空自在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2006), 「제2차 GIS백서」(2006),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연구」(2006), 「수도권 개발수요 및 가용지 분석을 통한 효율적 토지수급방안 연구」(2005), 「시설물관리 범용시스템을 활용한 도시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2004),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II)」(2003),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I)」(2002) 등 다수가 있다.

신동빈 연구위원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GIS정책, 지리정보유통, GIS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분야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가지리정보유통 고도화 방안 연구」(2006),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관리사업 확대추진 방안 연구」(2003), 「기본지리정보구축 추진전략 수립연구」(2002),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감리사례 연구」(2002), 「제1차 국가GIS사업 백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박종택 책임연구원

사회학 석사, 부산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 및 국가GIS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연구(I)」(2005), 「국가GIS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2004년 국토조사사업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지리정보기반의 지역 간 격차분석연구」(2002), 「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한선희 책임연구원

전자계산학 학사, 동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통계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2005),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연구」(2005), 「접근불능 지역의 지리정보 구축방법」(2004), 「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2002),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2001),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김대중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GIS, Urban & Regional Analysis Division in Department of Geography, Ph.D 과정 중.

김미정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보화 및 GIS다. 건설교통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200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국토이용모니터링 구축방안 연구」(2003),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운영관리」(2000~2005) 등 다수가 있다.

임은선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분석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2006), 「시공간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 (II)」(2006~2005),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구축 연구」(2006),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2005),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 산줄기 분석을 중심으로」(2004),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조춘만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전공분야는 도시계획을 위한 공간분석 및 정보기술의 활용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계획의사결정시스템, 유비쿼터스도시, 그리고 PPGIS(공공참여를 위한 GIS의 활용)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2006), 「U-City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2006), 「개발가능지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토지형상기준 도입방안 연구」(2005), 「파주시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연구」(2004) 등이 있다.

김길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Florida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학, 계량지리학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2006),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2006), 「Housing Redevelopment and Neighborhood Change as a Gentrification Process in Seoul, Korea」(2006) 등이 있다.

이영주 책임연구원

Media and Governance 박사, KEIO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GIS정책 및 Business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2006년도 국가GIS지원연구」(2006), 「제2차 국가GIS사업 백서」(2006),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2005) 등 다수가 있다.

김동한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화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2006), 「시공간통합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2005),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서기환 연구원

지리정보학 석사, 경북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분석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2005),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09

c h a p t e r V

동북아발전연구센터

1) 연구실 소개

동북아발전연구센터는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화에 대응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광역적 전략을 수립하고 통일에 대비한 토지, 주택, 사회간접자본, 산업, 환경 등의 부문별 연구를 축적하면서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 통합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의 연구수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발전연구센터에서는 그동안 수행해 온 북한 및 동북아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인접국가의 지역경제, 산업개발과 입지, 사회간접자본 및 도시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한반도와 주변지역, 그리고 남북한과의 연계 및 동반개발을 위한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국토개발의 거시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동북아도시 비교연구, 지역발전 계획 및 전략 수립

- 동북아지역 도시 및 지역개발 동향분석
- 동북아 산업협력 및 입지전략
-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장단기 정책개발
- 남북한 협력 및 인프라 개발전략

2) 연구진 소개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동북아 도시 및 지역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 동아대학교 조교수, 하와이대학교 부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 기본구상」(2006), 「한일 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모색」(2002),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지경학적 접근」(1999), 「Culture and the City in East Asia」(1997), 「Asian NIES and the Global Economy」(1995) 등이 있다.

이상준 연구위원

공학 박사,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도시개발 및 북한 국토·도시 분야 전문가로 주요 연구로는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2006),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200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2003) 등이 있다.

김영봉 연구위원

경영학 석사, 서강대학교

북한 및 군사시설 분야 전문가로서 미시간주립대학 국제전문가 초청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책전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

한 연구」(2006),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2004),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200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와 관리방안」(1999),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1998) 등이 있다.

조진철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Oregon State University
동북아 및 북한분야 전문가로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연구개발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2004), 「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시범지역 사례연구」(2004), 「북한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2004) 등이 있다.

이성수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주로 동북아 및 북한지역개발을 연구하며 주요 연구로는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2006), 「한일 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2004),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2003) 등이 있다.

10

c h a p t e r V

도시혁신지원센터

1) 연구실 소개

도시혁신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지역중심의 도시혁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 및 교육지원, 국내외 주요도시 DB축적 등을 통한 세계도시정보(UBIN) 라이브러리 운영,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의 학습기회 제공과 함께 도시혁신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자문 및 관련 공무원 교육

- 지자체 중심의 도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 지원
-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 자문 및 정보제공

■ 세계도시정보(UBIN, Urban Information Network) 웹서비스 운영

- 국내외 주요도시에 대한 DB구축
- 혁신도시, 생태도시, 관광도시 등 세계 주요명품도시 정보축적 및 인터넷서비스

■ 도시혁신 관련 정책연구 수행

-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련 연구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 추진방안 연구
-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 추진방안 연구

2) 연구진 소개

진영환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2005),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2003), 「수도권 등 광역도시계획 수립」(2001), 「제4차 국토계획수립」(1999), 「개발제한구역 조정」(1998) 등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토연구원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국토계획연구실장, 지역·도시연구실장을 지냈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지역학회 회장, 건설부장관 자문관을 지냈으며 현재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과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염형민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Waseda University
「철원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2006), 「계획적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광역대중교통체계 기반의 포천신도시 개발전략 연구」(2004),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I, II)」(2003~2004), 「파주 토지적성평가 학술용역」(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고양시와 파주시 도시계획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동우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분권화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연구: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5)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7

년 1년간 미국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연수 중이다.

권영섭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방안 연구」(2004), 「지역별 지식기반산업과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연구」(2002), 「시범 테크노파크사업과 지역혁신체계 구축」(2001), 「지역 지식기반산업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류승한 연구위원

지리학 석사, 동국대학교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2005), 「산업입지 제도개편 방안 연구」(2005), 「환경친화적 산업입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2004), 「Environment-Friendly Industrial Park Development Guidelines : The Cases of Cikarang and Bitung in Indonesia」(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판기 책임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택·도시정책이며, 특히 도시의 물적 기반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토지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2004),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2004), 「택지개발지구 자족성 강화방안 연구」(2004),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 연구」(2002),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연구」(2002), 「도시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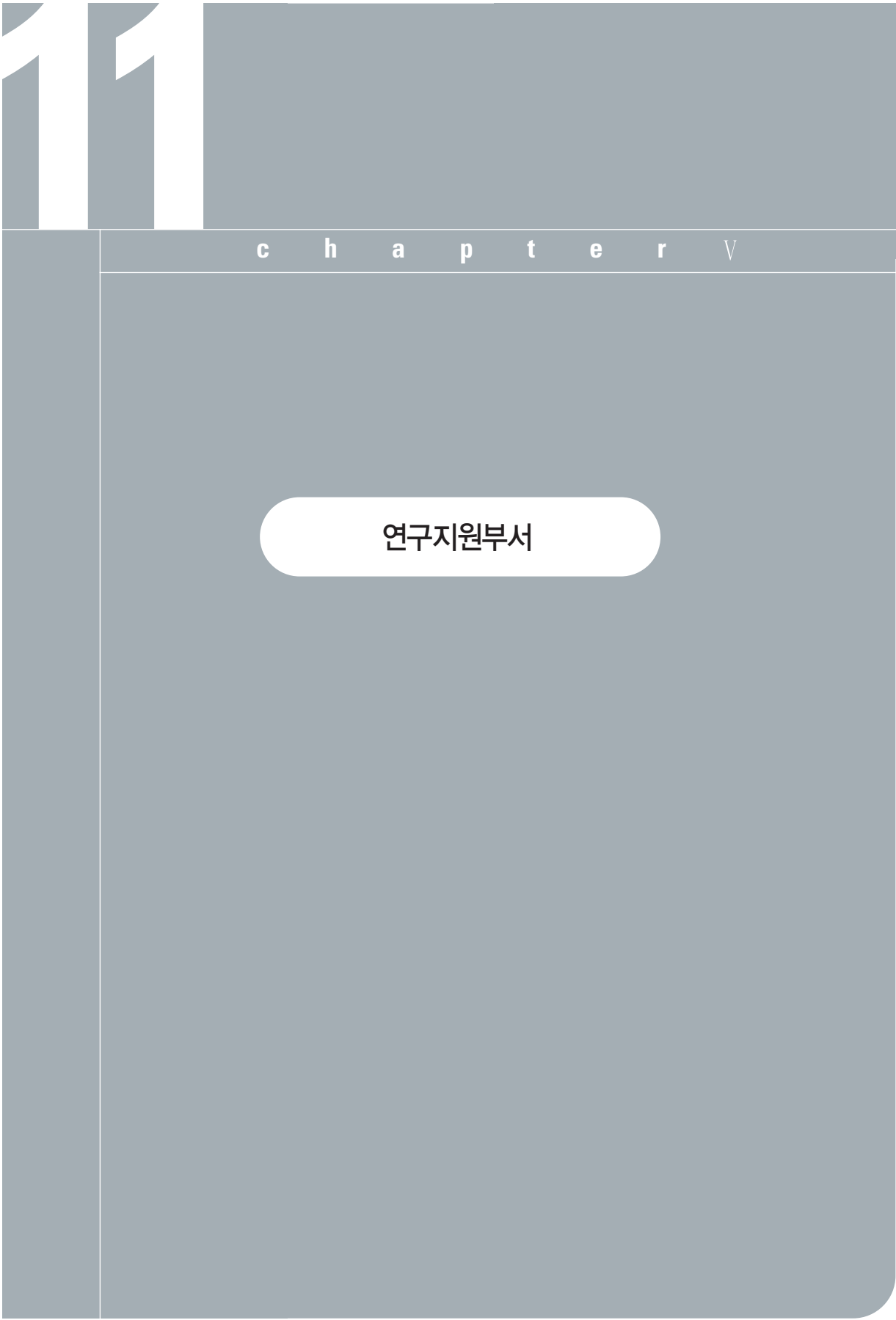
비교분석 연구」(1998) 등이 있다.

김진범 책임연구위원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주요 관심분야는 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지역시설계획 등이다. 주요 연구·프로젝트 실적으로는 「광역권 개발계획의 평가와 진단」(2006),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2005), 「일본 키타큐슈시의 공항 선택선호의식에 관한 연구」(2004), 「일본 도시계획제도 대한 비판적 고찰」(2004), 「필리핀 다바오시의 불법점거거주자와 이주거주자의 거주환경 선호의식」(2003), 「기혼 취업여성의 출산행동에 미치는 보육시설의 효과」(2002) 등이 있다.

정윤희 연구위원

도시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해외사례 단행본 번역·출판과제」(2006), 「건설교통관련 공공갈등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도시계획결정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4),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2003),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chapter V

연구지원부서

1) 지원부서 소개

연구지원부서는 연구혁신본부, 행정실, 커뮤니케이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혁신본부는 연구 전반에 대한 장·단기 업무의 기획, 연구원의 예산편성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내부혁신을 고취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정실은 연

구와 관련된 사무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센터는 홍보 및 대외기관 간 협력업무, 정보네트워크와 도서관, 출판물 기획·편집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주요 연구진 소개

박재길 선임연구위원(연구혁신본부장)

공학(도시계획) 박사, The University of Tokyo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 관리기능 제고 방안 연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5),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도시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건설교통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남건 연구위원(혁신전략팀장)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평가 및 사후평가, 고속철도 영향분석, 교통안전 정책 및 평가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중부선(하남-호법간) 외 5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2006),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2005),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관련 기본조사」(2005), 「창선삼천포 대교 건설공사 사후평가연구」(2004),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 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연구」(2004), 「서해안선 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2004),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3), 「고속도로 확장투자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연구」(2002),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망 체계 구축방향」(2002),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박태선 연구위원(연구조정팀장)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하천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서 수자원정책, 자연형하천, 농업용수도, 내륙주운, 간이상수도, 치수경제성분석, 댐 사후평가 등 수자원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관련 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홍수피해 특성분석 및 홍수피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5), 「자연형하천정비를 위한 하천환경특성 분석연구」(2004), 「하천의 유지관리방안 연구」(2004),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등급 조정방안 연구」(2002) 등이 있다.

부록. 색인

1. 과제명 색인	202
2. 연구자명 색인	204

1. 과제명 색인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	36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64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Ⅲ)	22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	23
공공사업 지자체 참여 제고방안	24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48
교통기반시설투자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65
교통서비스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58
국토개발전략의 국제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24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	37
국토정보 관련 법제 발전방안-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7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82
근린주구 보행활성화를 위한 보행친화적 환경요소의 계량화 : 주거지역의 보행친화도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42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법인 활용방안 연구 : 개발촉진지구를 중심으로	26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59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49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 관리기능 제고방안 연구- 개발행위를 중심으로	43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외연확산형과 압축형 도시측정을 중심으로	73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	38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Ⅱ) -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 추진방안	74
부동산가격 변동과 대응방안 연구 : 일본 부동산시장의 사례	50
북한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	83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	75
산업입지 수요조사 방법 및 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	2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해외사례 단행본 번역 · 출판과제	8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44
생활세계 재생산을 위한 문화축제의 역할	45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Ⅱ)	51
스마트 성장과 비전수립 과정 : 플로리다주 잭슨빌시 사례	28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Ⅲ) :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모형 개발방안	76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 개발	29
여가통행수요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평가 개선방안	60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한 · 일 국가GIS 추진전략 비교연구	77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응방향 : 일본을 중심으로	30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개발 연구 - 국토관련계획을 중심으로	31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	52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53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 · 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84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32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39
지역간 · 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Ⅲ) : 시도별 정책방안 모색	54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집행 방안	66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33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34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	85
한 · 중 토지정책연구(Ⅶ) : 거시경제와 토지시장 및 토지정책	55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Ⅱ)	86
해외건설인력의 원활한 수급방안	67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방향설정 연구	89
현장중심적 접근을 통한 수해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40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61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78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	68
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79
Urban Digital Library 구축방안 연구	90
u-Traffic 사용자서비스 정립방안 연구	69

2. 연구자명 색인

강미나	54	문채	37	양하백	34	전성제	49
고용석	59	박경현	44	오기현	43	정문섭	74
권영상	42	박상우	86	오선영	37	정선영	61
권영섭	28, 32, 89	박세훈	25, 43	오성호	60	정승호	84
권혁진	66	박소현	42	왕광익	30	정옥주	25
김걸	78	박순엽	88	유재운	64	정윤희	23, 24, 88, 90
김광익	30, 74	박양호	25	윤양수	22	정일호	61
김동환	78	박은관	43	윤주현	52, 54	정진규	22
김명수	44	박재길	43, 44	윤하중	58, 69	정희남	51, 55
김민철	53, 64, 65	박정은	25	이동우	76	조명철	84
김상옥	66	박천규	50, 52, 54	이문원	83	조윤숙	29
김선희	23, 34, 36, 39	박태선	68	이미영	59	조진철	68, 83
김성일	67, 68	박현정	84	이백진	61	조춘만	43, 79
김승중	48, 49	박형서	23, 24	이법현	37	조판기	48
김영봉	82, 83	배순석	49, 53	이상건	59	지대식	48, 50
김영표	29	벤델린 스투르벨트	85	이상준	85	진영환	88, 89
김원배	84, 86	변필성	30	이성수	33, 84, 86	진정수	49
김재영	66	볼프강 벤테	37	이성형	40	차미숙	36
김정훈	79	사공호상	75, 77	이성형	44	채미옥	51
김종원	38, 40	서기환	75	이순자	33	천현숙	49
김종학	58	서용철	77	이시복	69	최병남	72, 76
김지형	44	서태성	25	이영주	74	최수	53
김진범	90	서한림	42	이왕건	44	최영국	37
김창현	33, 40	세타 후미히코(瀬田 史彦)	30	이용우	22, 31	최이명	42
김태영	37	손경환	48, 50	이원섭	25, 26	최현선	28
김현식	45	송하승	51	이종열	73, 78	칼-페터 쉐	85
김형진	73	신동진	89	이춘용	58	하성덕	89
김혜승	52	신정철	32, 53	이희연	73	한선희	75, 79
김호정	58	신혜란	45	임상연	22, 31	홍익표	84
류승환	27, 90	심우배	38, 40	임영태	61	황승미	24
류재영	60, 86	안용진	43	임은선	73, 76	Quentin Stevens	45
문정호	34	안홍기	65	장은교	34		

연차보고서 발간 전담반 ┃

반장 윤여훈 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

반원 정진규 국제협력단장

박태선 연구조정팀장

강미나 연구위원

고용석 책임연구원

김미정 책임연구원

김민철 책임연구원

손동욱 책임연구원

심우배 책임연구원

조진철 책임연구원

장은교 연구원

정윤희 연구원

간사 박순엽 문헌출판팀장

(직급별 가나다순)

2006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

발행자 · 최병선

발행처 ·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 제2-22호

인쇄 · 2007년 6월 25일

발행 · 2007년 6월 30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 · 031-380-0114(대표)

팩스 · 031-380-0474

<http://www.krihs.re.kr>

©2007, 국토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